

주민체감형 지역격차 인식과 지역상생 발전방안

2013

Ⅱ 연구진 Ⅱ

연구책임	서울연구원(김인희, 전정은)
연구진	강원발전연구원(황규선)
	경기개발연구원(지우석)
	경남발전연구원(마상열)
	대구경북연구원(최영은)
	대전발전연구원(강영주)
	부산발전연구원(한승욱)
	울산발전연구원(권창기)
	인천발전연구원(조상운)
	전남발전연구원(조상필, 나강열)
	전북발전연구원(김재구)
	제주발전연구원(고승한, 강창민)
	충남발전연구원(임준홍, 임형빈)
	충북발전연구원(원광희, 박상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김현호, 오은주)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5
제2장 지역별 격차실태 분석	8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경북지역	
4. 인천광역시	
5. 대전광역시	
6. 경기도	
7. 강원도	
8. 충청북도	
9. 충청남도	
10. 전라북도	
11. 경상남도	
12. 제주도	
제3장 지역별 이슈 종합	175
제4장 격차해소를 위한 상생방향	178
1. 지역격차와 상생발전	
2. 상생발전의 조건	
3. 상생발전 방향	
부록	183
1. 회의록	
2. 향후일정	

제1장 연구 개요

1. 배경 및 목적

- 전국 16개 시도연구원은 지난 2012년 “지역간 격차실태와 상생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지역격차에 대한 지표분석과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지역격차 실태를 도출하였고, 지역상생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공동연구결과에 대한 2012년 정기총회 평가와 공동연구진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1. 격차인식 및 지역상생에 관한 공동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
 - 2. 향후 세부적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고 구체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
 - 3. 차기 연구에서는 주민체감형 지역격차 실태파악을 위해 주민인식조사 보완
- 2012년 연구결과와 시도연구원 총회의견을 반영하여 “격차인식과 지역상생”을 위한 공동연구의 2013년도는 “주민체감형 지역격차인식을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함.
- 연구의 목적은 첫째, 실제로 지역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격차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연구내용과 방법

- 이 연구는 크게 각 시도별 지역격차의 실태분석, 지역별 이슈 종합, 격차해소를 위한 상생발전의 조건,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상생발전방향 제시 등으로 구성하였음
-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검토, 전문가 자문 및 문헌분석, 격차지표의 통계자료 분석, 격차에 대한 주민설문조사와 지역 전문가 포럼과정을 거쳤음. 격차실태는 인구, 도시기반, 경제기반, 사회기반, 문화기반 등 각 시도별 연구원이 선정한 통계지표로 분석하여 지역 내 격차실태 종합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단, 서울과 강원은 지역격차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타 시도는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격차실태를 제시하였음.
- 주민 설문조사, 격차인식, 지표의 설정, 격차분석의 공간적 유형 등은 공동워크숍을 통하여 논의하고 결정하였음

- 연구의 내용 및 방식은 16개 연구원 공동연구진이 방향과 내용을 상호합의하고 조정하여 확정하였음. 각 시도연구원별로 해당 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슈를 제시하도록 하였음.
- 연구과정에 참가한 연구기관은 서울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총 15개 기관임
- 연구결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공동연구진이 주체가 되어 “지역상생 연구포럼”을 추진하여 다양한 지역별 견해를 조율하였음. 이때 지역전문가와 공동으로 이슈를 논의하여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는 창구를 마련하였음.

3. 지역격차의 개념과 지표체계 선정

- 격차실태분석을 위하여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총 11개 분야의 49개 항목에 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하였음.
- 주민만족도 결과를 관련된 27개의 통계지표를 선정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음.

[표 1-2] 지역격차 분석을 위한 지표 선정

분야	만족도 항목	통계 지표
치안수준	길거리, 거주지역 내 치안수준	인구 1천인당 6대 강력범죄발생건수
	내 집의 범죄로부터 안전	
	경찰의 순찰활동	
	경찰의 사건 대응	
	CCTV등 방범시설 수준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치안환경	
교육환경	공공교육 수준 및 환경	교원 1인당 학생수
	사교육 수준 및 환경	천명당 사설학원 수
	지역 내 교육특성상 대학진학가능성	대학교 진학률(※전문대학교 진학률은 미포함) 학교급: 일반고
행정서비스	시,도로부터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
	시(구)청의 주민을 위한 행정 수준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지방의회(시의원,도의원)의 활동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재개정건수
	우리동네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	-
	내가 낸 세금의 효율적 사용	-

분야	만족도 항목	통계 지표
경제	일자리 기회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
	지역 주민소득 평균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향후 지역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	-
	지역내 토지이용 규제 정도	-
환경	지역내 공기의 질(대기오염)	대기오염도(미세먼지)
	집 주변 소음	-
	지역 내 녹지율	녹지율(녹지지역/행정구역면적*100)
편의시설	공원, 오픈스페이스	1인당 도시 공원면적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10만인당 백화점 수+대형마트 수
	전통시장, 집 인근 쇼핑시설 등	10만인당 시장 수+쇼핑센터 수
	문화시설(영화관,공연장,전시장 등)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체육시설	인구 천인당 체육시설 수
교통환경	지하철 이용 편의성	생활권별 지하철역 개수
	버스 이용 편의성	-
	승용차 이용 편의성	도로율
	보행환경	인구 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주차환경	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
거주환경	동네의 경관	-
	동네의 청결성	-
	우리집의 생활비용의 적절성	-
	우리동네 주거비용의 적절성	-
	이웃과의 관계	-
	부적합시설로부터 주거환경쾌적도	-
의료보건 환경	지역내 병원의 신뢰성	인구 10만인당 보건소수+병원수
	지역내 보건소의 신뢰성	
	지역내 병원종류와 개수	
복지시설	육아보육시설	유아(0~4세) 천명당 보육시설수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구 1천인당 복지시설수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수
	여성 복지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
안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1인당 자연재해피해액
	인적재해로부터의 안전	인구 만명당 화재발생건수
	동네의 교통안전 환경	인구 만명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어린이 안전 환경	14세 이하 인구 만명당 12세 이하 교통사고 발생건수

제2장 지역별 격차실태 분석

1. 서울특별시

- 서울시는 자연·물리적 환경,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특성, 행정구역, 주거지 및 거주 인구특성,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5개 대생활권역으로 구분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자치구를 하나의 공간범위로 세분하는 중생활권역으로 구분



[그림 2-1] 서울시 생활권역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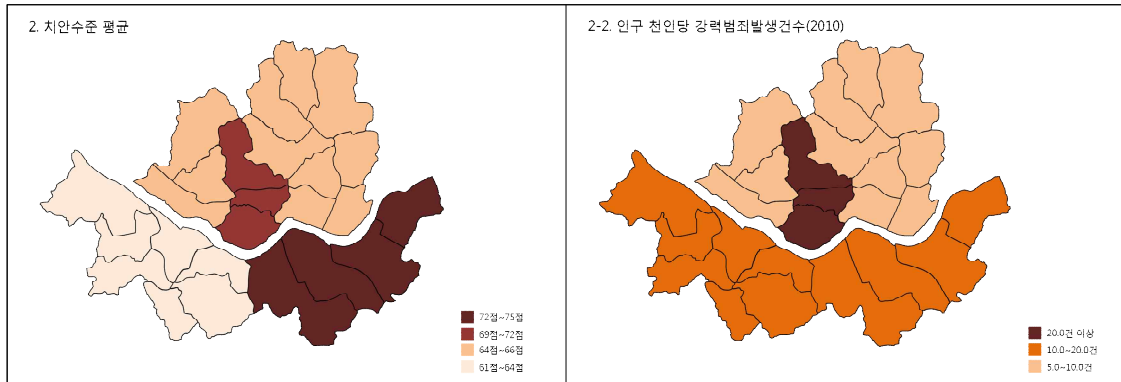
[표 2-1] 서울시 생활권역의 구분

대생활권역	중생활권역	자치구
도심권		종로, 중구, 용산
동북권	동북1	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
	동북2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북권		은평, 서대문, 마포
서남권	서남1	강서, 양천
	서남2	구로, 금천, 영등포
	서남3	동작, 관악
동남권	동남1	서초, 강남
	동남2	송파, 강동

1) 주요 지표를 통한 격차실태¹⁾

(1) 치안수준

■ 치안에 대한 만족도²⁾와 6대 강력범죄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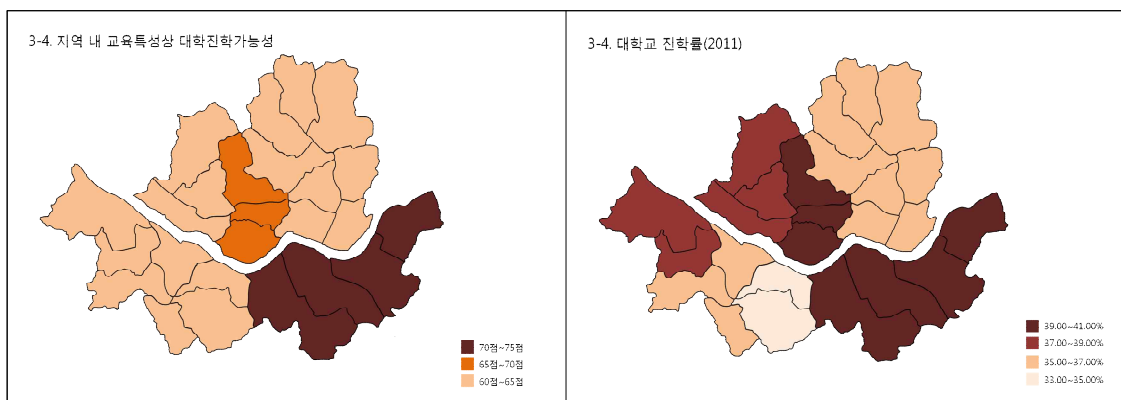


[그림 2-2] 서울시 치안에 대한 만족도와 인구 1천인당 6대 강력범죄발생건수

- 도심권은 주민이 범 발생건수에 비해 지역의 치안을 좋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서남권은 주민이 범죄 발생건수에 비해 지역의 치안이 더욱 나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2) 교육환경

■ 지역 내 교육특성상 대학진학 가능성 만족도와 대학진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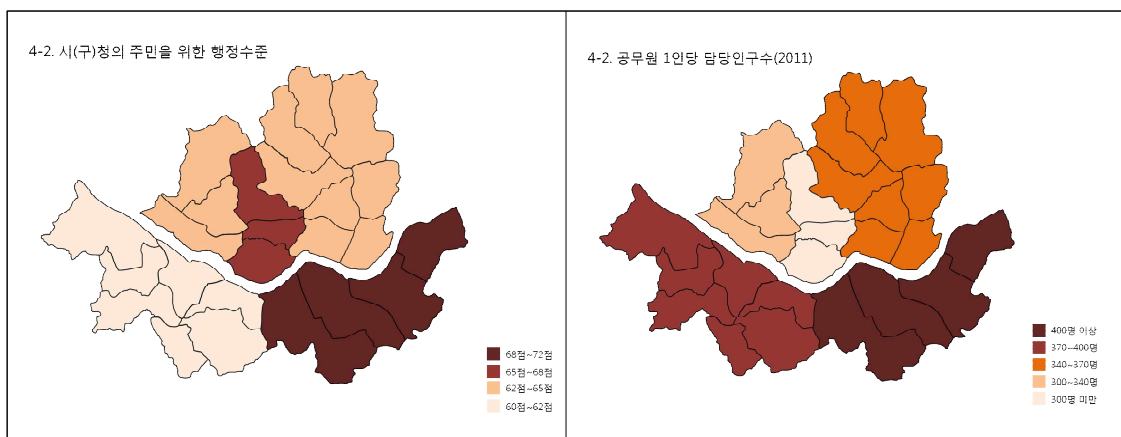
[그림 2-3] 서울시 지역 내 교육특성상 대학진학가능성 만족도와 대학진학률

- 1) 만족도 부분은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추진중인 연구과제 “수도권 지역내 격차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연구” (2013)의 설문중 서울지역내용을 요약 정리
- 2) 만족도는 100점 만점임

- 동남권은 대학진학률에 비해 지역 내 교육특성상 대학진학가능성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음
- 나머지 생활권역은 대학진학률과 지역 내 교육특성상 대학진학가능성에 대한 만족수준이 유사하게 근접함

(3) 행정 서비스

■ 시(구)청의 주민을 위한 행정수준과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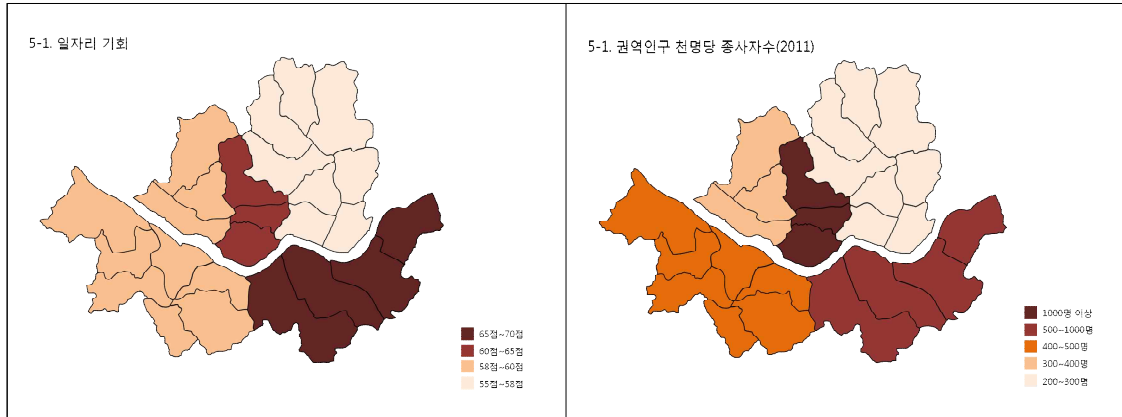


[그림 2-4] 서울시 시(구)청의 주민을 위한 행정수준과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수

- 동남권은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점수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구)청의 주민을 위한 행정수준에 대한 만족수준은 높음
- 도심권은 가장 담당인구수가 적지만 그에 비해 만족도는 특별히 높지 않음

(4) 경제

■ 일자리기회 만족도와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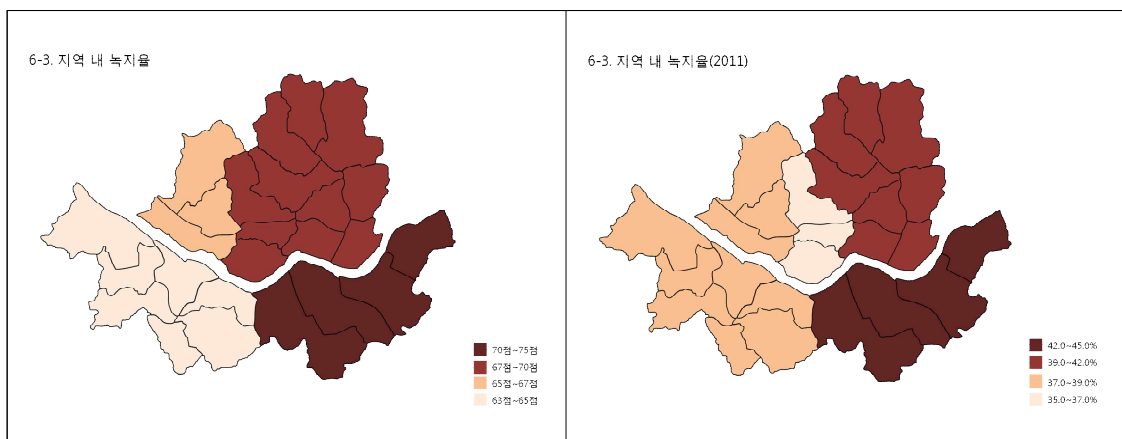


[그림 2-5] 서울시 일자리기회 만족도와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 도심권은 권역인구 1000명당 종사자수가 월등히 많지만 일자리 기회 만족수준이 낮게 나타남.
- 나머지 권역은 대부분 1000명당 종사자수에 비해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높은 권역은 서북권과 동북권임.

(5) 환경

■ 지역 내 녹지율 만족도와 녹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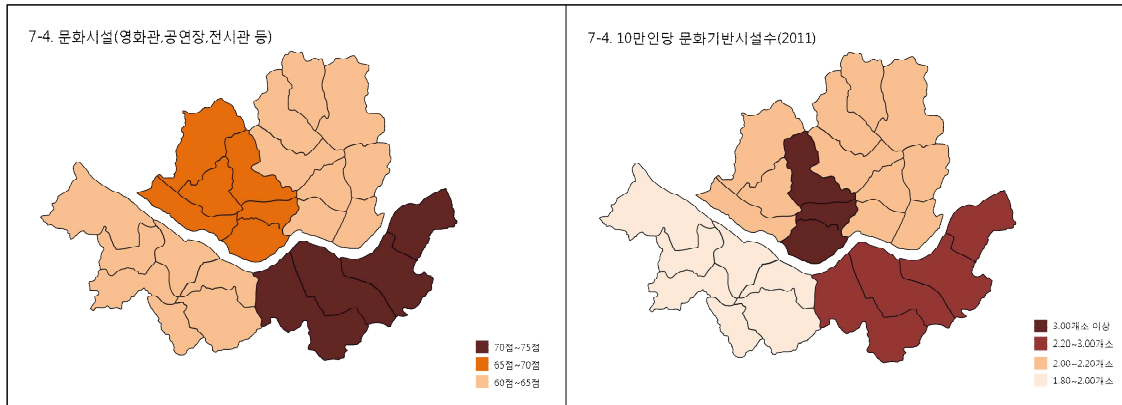
[그림 2-6] 서울시 지역 내 녹지율 만족도와 녹지율

- 대체적으로 녹지율 수치와 지역 내 녹지율 만족수준이 유사하게 근접함.

○ 도심권은 실제 녹지율에 비해 지역 내 녹지율에 대한 만족수준이 약간 높음.

(6) 편의시설

■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10만인당 문화기반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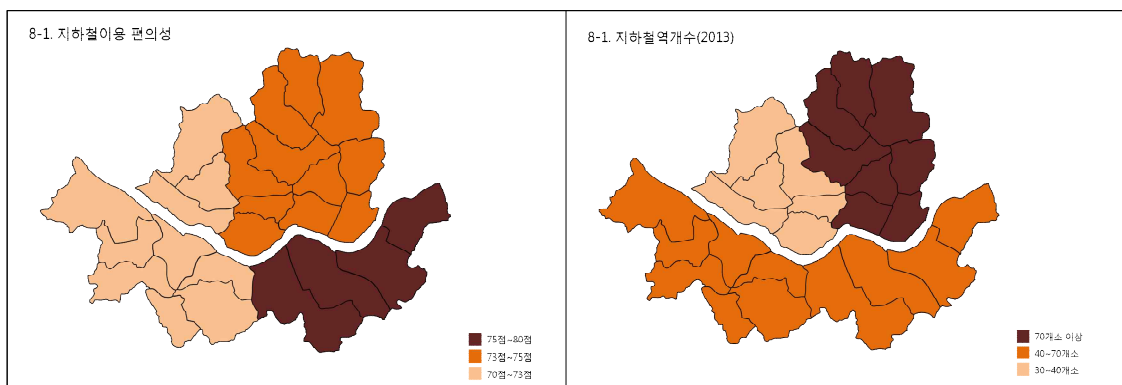


[그림 2-7] 서울시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대한 만족도와 10만인당 백화점 수와 대형마트 수

- 도심권은 인구 10만인당 문화기반시설 수가 월등하게 많은데 비해 주민만족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남
- 나머지 4개 생활권역은 모두 문화기반시설 수에 비해 주민만족수준은 다소 높게 나타남

(7) 교통환경

■ 지하철 이용 편의성 만족도와 지역 내 지하철역 수



[그림 2-8] 서울시 지하철 이용 편의성 만족도와 지역 내 지하철역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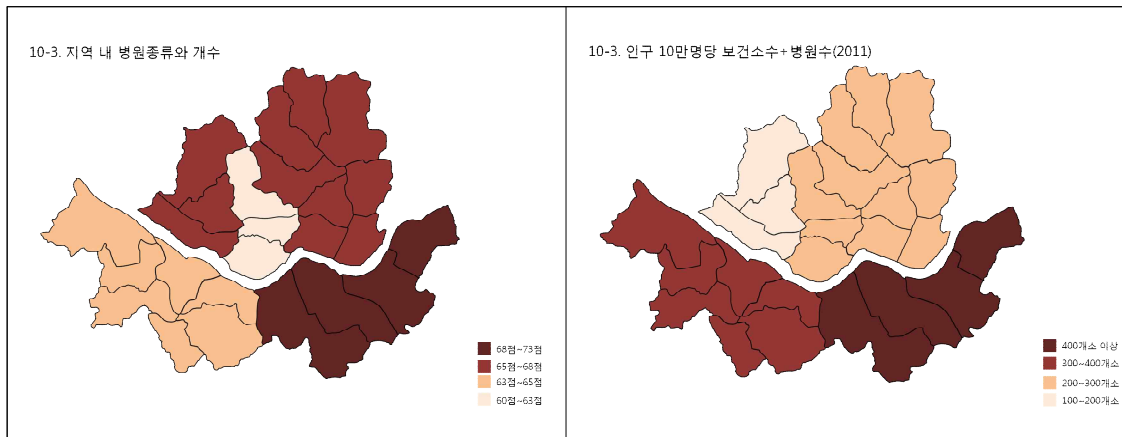
- 동북권은 지역 내 지하철역 수에 비해 지하철이용 편의성에 대한 주민만족수준은

낮게 나타남

- 도심권과 서북권은 지역 내 지하철역 수에 비해 주민만족수준은 높은 편임

(8) 의료보건환경

■ 지역 내 병원종류와 개수 만족도와 인구 10만명당 보건소 수와 병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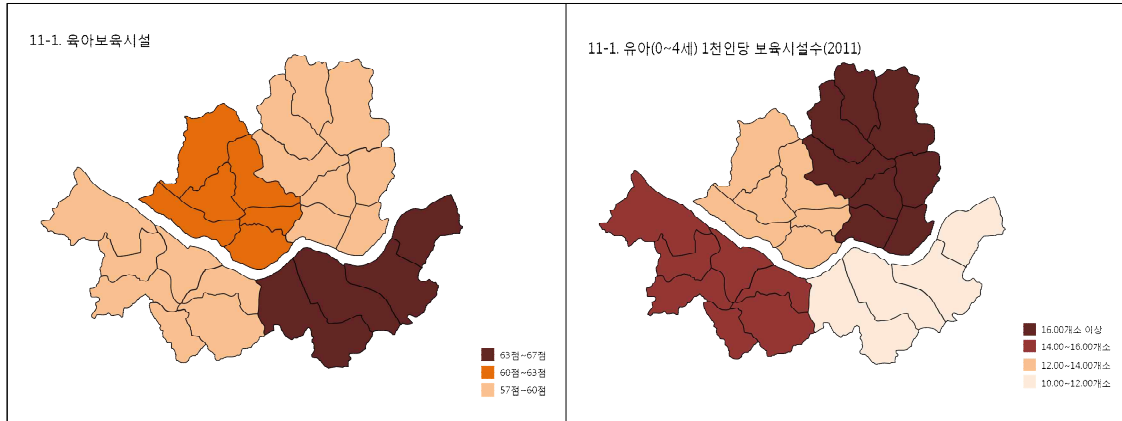


[그림 2-9] 서울시 지역 내 병원종류와 개수 만족도와 인구 10만명당 병원,보건소 수

- 동남권이 실제 인구 10만인당 보건소 수와 병원 수에 비해 지역 내 병원종류와 개수에 대한 만족수준은 낮음
- 서북권은 보건소 수와 병원 수가 가장 적지만 그에 비해 주민만족수준은 높음

(9) 복지시설

■ 육아보육시설 만족도와 유아(0~4세) 천인당 보육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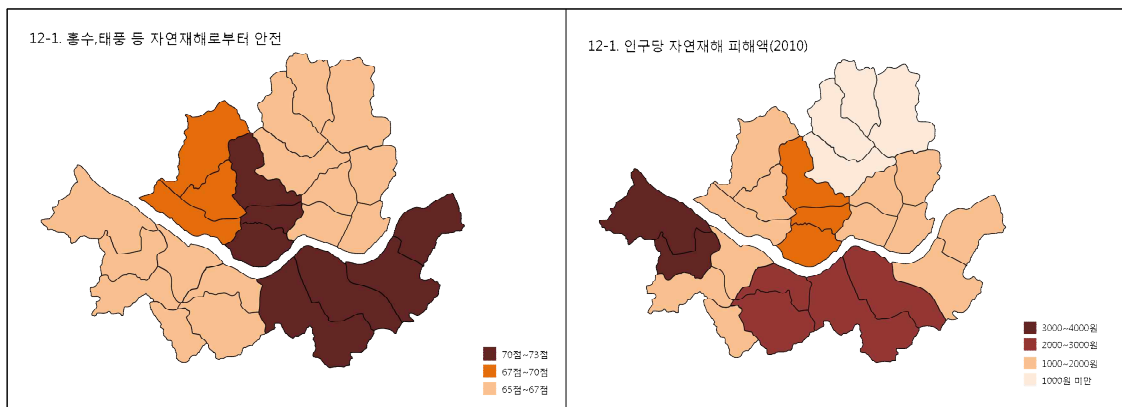


[그림 2-10] 서울시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대한 만족도와 10만인당 백화점 수와 대형마트 수

- 동북권은 유아 천인당 보육시설 수가 가장 많은 생활권역이지만 육아보육시설에 만족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남
- 동남권은 보육시설 수에 비해 주민만족수준은 높게 나타남

(10) 안전

■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만족도와 1인당 자연재해피해액



[그림 2-11] 서울시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만족도와 1인당 자연재해피해액

- 1인당 자연재해 피해액의 차이는 뚜렷하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만족수준은 모든 생활권역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도심권이 자연재해피해액에 비해 자연재해로부터 느끼는 지역의 안전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서북권과 동북권은 자연재해피해액에 비해서는 지역의 안전수준에 대한 만족수준은 낮게 나타남

2) 서울시 지역 내 격차실태 종합 및 시사점

(1) 총괄

- 주민만족수준 조사 결과 주로 동남권과 서남권간의 지역격차가 크게 나타남
 - 서울특별시의 경우, “내가 사는 동네의 전체적 만족수준”은 평균 3.71점으로 5개 생활권역 모두 보통 수준(3.0점) 이상을 나타내고 있음
 - 생활권별로 살펴보면 “내가 사는 동네의 전체적 만족수준”이 가장 높은 생활권은 동남권(4.05점), 도심권(3.81점) 순이고 가장 낮은 생활권은 서남권(3.54점)임
-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전반적으로 경기, 인천과 달리 모든 분야에서 보통 수준(3.0점) 이상으로 경기, 인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 만족수준은 높음
- 서울시 주민이 가장 만족하고 있는 분야는 교통환경(3.41점) > 편의시설(3.36점) > 치안수준(3.32점) > 교육환경·의료보건환경(3.28점) 순이고, 반면 만족수준이 낮은 분야는 복지시설(3.03점) < 행정(3.05점) < 환경(3.15점) < 거주환경(3.19점) < 경제(3.25점) 순으로 나타남

(2) 치안수준

- 치안분야의 6개 항목에서 서울시 주민 대부분은 ‘경찰의 사건대응’과 ‘CCTV등 방범시설 수준’ 항목의 만족수준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치안수준이 가장 나쁘다고 느끼는 생활권은 서남권으로 특히 ‘CCTV등 방범시설 수준’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음
- 반면, 유동인구가 많거나, 1인당 지방세 납입액이 많은(부유한 지역이 있는) 도심권과 동남권은 실제 범죄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두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치안수준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높음
- 도심권에는 인구 밀집 시간대와 치안이 취약한 시간대에 일정 구역을 도보 순찰하거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도심의 치안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음

(3) 교육환경

- 교육환경 분야의 3개 항목에서 서울시 주민 대부분은 ‘공공교육 수준 및 환경’ 항목의 만족수준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환경이 가장 나쁘다고 느끼는 생활권은 서남권으로 특히 ‘사교육 수준 및 환경’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3.0점) 미만의 만족수준임. 실제 대학진학률도 타 생활권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교육환경개선에 특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반면, 명문학군이 밀집해 있는 동남권은 모든 항목이 3.75점 이상으로 교육환경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사설학원 수나 대학진학률도 높음.
- 생활권간 격차가 가장 심한 분야가 ‘교육환경’임

(4) 행정 서비스

- 행정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만족수준은 11개 분야 중 두 번째로 낮은 만족수준을 보이는 분야임
- 특히 ‘지방의회의 활동’과 ‘내가 낸 세금의 효율적 사용’ 항목에서는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생활권역이 보통 수준(3.0점) 미만으로 나타남. 의정활동과 세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행정 분야에 대한 만족수준이 가장 낮은 생활권은 서남권으로 나타났으며 행정 서비스 분야의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보통 수준(3.0점) 미만을 나타냄
- 반면, 동남권은 타 권역에 비해 비교적 행정 서비스 만족수준이 높은 편임

(5) 경제

- 경제환경 분야의 4개 항목 중 상대적으로 만족수준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일자리 기회’로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은 보통 수준(3.0점) 미만으로 나타남
- 반면 ‘향후 지역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모든 생활권역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동남권이 가장 높음. 잠실.송파.강동 지역은 위례신도시, 법조유통단지, 제2의 롯데월드, 지하철 9호선 개통, KTX 수서역 신설 등으로 인해 향후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것으로 판단 됨
- 경제 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이 가장 낮은 생활권은 서남권(3.05점)이고 특히 ‘지역 내 토지이용 규제정도’에서 5개 권역 중 가장 낮음. 이는 용도특성상 준공업지역이

대부분인 구로·금천·영등포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반면, 주민만족수준이 가장 높은 동남권(3.61점)은 특히 ‘지역 주민소득 평균’에 대한 만족수준(3.67점)이 높음. 그러나 실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약 28만원)은 월등히 높은 편은 아님

(6) 환경

- 환경분야의 3개 항목 중 서울시 전체 주민들의 가장 만족수준이 낮은 항목은 ‘집 주변 소음’(3.01점)으로 도심권, 동북권, 서남권이 보통 수준(3.0점) 미만으로 나타남
- 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이 가장 낮은 생활권은 서남권으로 ‘지역 내 공기의 질’과 ‘집 주변 소음’에 대해 보통 수준(3.0점) 미만을 나타냄. 서남권은 실제로도 미세먼지량이 타 생활권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이므로 대기오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7) 편의시설

- 편의시설 분야는 서울시 주민들이 두 번째로 만족하고 있는 분야(3.37점)로 특히 ‘전통시장, 집 인근 쇼핑시설’에 대한 만족수준(3.54점)이 가장 높음
- ‘전통시장, 집 인근 쇼핑시설’에 대해 특히 만족수준이 높은 생활권(3.50~3.75점)은 동북권과 동남권임
- 실제로 ‘주민 1인당 도시공원면적’, ‘문화시설’ 등의 시설 수가 적은 서남권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타 생활권역에 비해 시설수가 월등히 많은 도심권은 만족수준이 크게 높지 않아 차등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됨
- 한편, 동남권은 시설 수에 관계없이 모든 항목에서 만족수준이 가장 높음.

(8) 교통환경

- 서울시 주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분야인 교통환경(3.41점)에서 특히 ‘지하철 이용 편의성’과 ‘버스 이용 편의성’은 모든 생활권역이 3.50점 이상으로 만족수준이 높음
- 동남권은 ‘지하철 이용 편의성’ 항목에서 월등히 높은 수준(3.97점)을 나타내고 있음.
- 모든 생활권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1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민들의 만족수준이 가장 낮은 항목은 ‘주차환경’으로, 특히 서북권과 서남권은 보통 수준(3.0

점) 미만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뉴타운 등 새로 지어진 아파트 등과 달리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여전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의 개념을 주차와 박차로 구분하여 성격에 맞는 주차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타 권역에 비해 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1순위로 도심권은 ‘교통환경’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20.0%), 실제 도심권의 교통환경 평균 수준은 3.45점으로 동남권 다음으로 만족수준이 높음

(9) 거주환경

- ‘거주환경’에 대해서는 5개 생활권역 모두 만족수준이 3.00~3.50점 사이로 편차가 크지 않게 나타나며 전체적인 만족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거주환경’의 6개 항목 중 서울 주민 모두의 만족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은 ‘유흥업소, 공장 등 부적합시설로부터의 주거환경 쾌적정도’(3.34점)로 특히 동남권(3.50점)의 만족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만족수준이 가장 낮은 항목은 ‘우리 동네 주거비용의 적절성’(2.99점)으로 서북권을 제외한 모든 생활권이 보통 수준(3.0점) 미만의 만족수준을 나타냄
- ‘동네의 청결성’은 서남권만이 5개 생활권역 중 유일하게 보통 수준(3.0점) 미만을 나타내고 있음

(10) 의료보건환경

- 생활권의 세부 항목 중 보통(3.0점) 수준 미만의 항목은 한 개도 없음. 이는 상대적으로 만족수준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5개 생활권 중 만족수준이 가장 높은 생활권은 동남권(3.55점)이고 만족수준이 가장 낮은 생활권은 서남권(3.18점)임

(11) 복지시설

- 복지시설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만족수준은 11개 분야 중 가장 낮은 만족수준을 보이는 분야임
- 서남권은 복지시설의 세부 항목 5개(육아보육·노인복지·청소년복지·여성복지·장애

인복지시설) 모두 보통 수준(3.0점) 미만을 보이고 있으나 시설수는 타 생활권역에 비해 많은 시설 수를 보유하고 있어 복지시설의 질적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12) 안전

- ‘안전’ 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생활권역이 평균 3.00점~3.50점 사이로 생활권역 간 큰 편차가 없으며 서울시 주민들의 전체 만족도도 중간 수준임
- 도심권은 1인당 자연재해피해액, 만명당 화재발생건수, 만명당 교통사고·차대사람 발생건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생활권이지만 안전에 대한 세부항목 4개 모두 만족수준은 높은 편임

2. 부산광역시

1) 주요 지표를 통한 격차실태

(1) 인구증가율

- 부산시는 2011년 현재 인구는 3,586,079명으로, 2002년 3,747,369명 대비 감소
- 2011년 현재 부산시의 구·군 중에서 해운대구는 인구가 428,663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는 인구가 49,859명으로 가장 적음
- 부산시의 인구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0.7% 증가하였다가 2011년에 다시 0.4%감소하였음

[표 2-2] 부산시 구·군별 인구증가율(2002~2006)

구·군별	인구(명)/인구증가율(%)				
	2002	2003	2004	2005	2006
부산광역시	3,747,369	3,711,268	3,684,153	3,657,840	3,635,389
	-0.7	-1.0	-1.0	-0.7	-0.6
중구	56,260	54,883	53,772	52,618	51,516
서구	149,014	145,050	143,172	140,319	136,999
동구	121,821	118,496	115,052	110,758	107,844
영도구	175,559	171,189	166,938	164,069	160,028
부산진구	421,759	411,971	406,860	412,055	407,397
동래구	291,020	282,732	279,965	276,728	280,269
남구	306,150	308,270	305,595	303,558	299,518
북구	321,473	327,338	333,976	336,483	331,385
해운대구	403,598	405,445	405,178	406,280	420,968
사하구	380,550	378,166	376,919	374,504	370,108
금정구	280,692	276,834	271,346	266,329	264,907
강서구	58,887	57,805	56,388	55,607	55,817
연제구	228,801	226,075	222,404	218,335	215,449
수영구	178,618	177,947	181,408	179,449	178,552
사상구	296,208	290,636	284,626	279,907	274,423
기장군	76,959	78,431	80,554	80,841	80,209

[표 2-3] 부산시 구·군별 인구증가율(2007~2011)

구·군별	인구(명)/인구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2011
부산광역시	3,615,101	3,596,063	3,574,340	3,600,381	3,586,079
	-0.6	-0.5	-0.6	0.7	-0.4
중구	50,932	50,602	49,983	50,555	49,859
	-1.1	-0.6	-1.2	1.1	-
서구	133,666	130,402	126,811	127,068	124,824
	-2.4	-2.4	-2.8	0.2	-
동구	105,970	103,983	102,440	102,859	101,845
	-1.7	-1.9	-1.5	0.4	-
영도구	156,661	153,802	149,787	148,431	144,884
	-2.1	-1.8	-2.6	-0.9	-
부산진구	404,331	402,942	398,101	398,174	397,411
	-0.8	-0.3	-1.2	0.0	-
동래구	285,789	283,603	282,525	283,636	284,649
	2.0	-0.8	-0.4	0.4	-
남구	298,898	300,966	301,043	301,904	298,776
	-0.2	0.7	0.0	0.3	-
북구	326,602	320,328	315,606	313,553	309,239
	-1.4	-1.9	-1.5	-0.7	-
해운대구	426,138	426,949	427,619	429,477	428,663
	1.2	0.2	0.2	0.4	-
사하구	368,371	369,413	363,630	362,697	359,651
	-0.5	0.3	-1.6	-0.3	-
금정구	260,844	258,604	254,272	257,662	257,090
	-1.5	-0.9	-1.7	1.3	-
강서구	55,046	55,858	63,753	66,269	69,371
	-1.4	1.5	14.1	3.9	-
연제구	213,435	213,698	211,184	213,453	214,131
	-0.9	0.1	-1.2	1.1	-
수영구	179,100	178,092	178,231	179,208	177,676
	0.3	-0.6	0.1	0.5	-
사상구	268,880	264,685	258,975	261,673	258,515
	-2.0	-1.6	-2.2	1.0	-
기장군	80,438	82,136	90,380	103,762	109,495
	0.3	2.1	10.0	14.8	-

자료: 부산통계연보 <http://www.busan.go.kr/library>

(2) 고령화율

- 부산시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2002년 254,642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418,043명으로 늘어남
- 부산시의 인구 고령화율은 2002년 6.80%에서 2011년 11.6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구·군별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구 17.00%이고, 다음으로 중구가 16.47%로 높음
- 고령화율이 15%를 넘는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는 부산시의 원도심지역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심각하게 나타남

[표 2-4] 부산시 구·군별 고령화율(2002~2011)

구·군별	고령화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부산광역시	6.80	7.23	7.76	8.28	8.86	9.56	10.11	10.68	11.16	11.66
중구	9.56	10.20	10.88	11.69	12.48	13.45	14.12	14.80	15.77	16.47
서구	9.22	9.88	10.53	11.32	12.15	13.14	14.06	14.85	15.58	16.25
동구	9.77	10.38	11.21	12.20	13.14	14.21	15.01	15.82	16.43	17.00
영도구	8.19	8.80	9.61	10.36	11.21	12.26	13.09	13.94	14.73	15.58
부산진구	7.25	7.76	8.36	8.80	9.44	10.16	10.73	11.33	11.93	12.35
동래구	6.44	6.84	7.33	7.87	8.37	8.94	9.50	10.09	10.59	11.05
남구	6.77	7.16	7.69	8.29	8.92	9.72	10.33	10.98	11.52	12.12
북구	5.17	5.51	5.92	6.30	6.83	7.40	7.85	8.36	8.74	9.20
해운대구	6.23	6.64	7.13	7.56	7.95	8.51	8.91	9.37	9.83	10.24
사하구	5.79	6.14	6.56	6.95	7.45	8.03	8.47	8.94	9.41	9.91
금정구	6.66	7.10	7.67	8.23	8.85	9.60	10.22	10.86	11.34	11.92
강서구	10.87	11.39	12.09	12.69	13.26	13.97	14.27	13.43	13.24	13.19
연제구	6.63	7.05	7.61	8.17	8.75	9.49	10.06	10.68	11.14	11.62
수영구	7.53	7.97	8.46	9.06	9.70	10.49	11.14	11.94	12.40	13.10
사상구	4.76	5.12	5.60	6.00	6.53	7.15	7.64	8.16	8.48	8.93
기장군	9.85	10.32	10.90	11.45	11.95	12.62	13.08	12.95	12.55	1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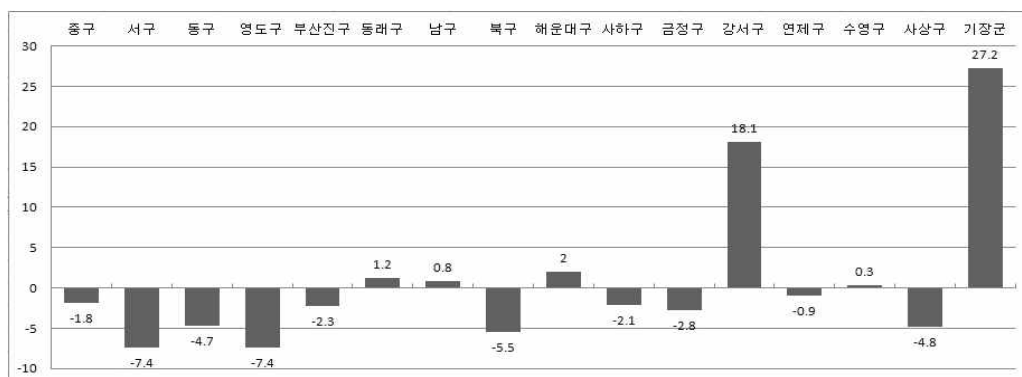
자료: 부산통계연보 <http://www.busan.go.kr/library>

(3) 인구격차

- 부산시의 도시인구는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약 35,000명이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0.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부산시 구·군별 인구성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기장군 27.2%이고, 강서구는 18.1%로 그 뒤를 따름
- 인구격차는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으로 설정된 동래구, 해운대구, 기장군과 서부산권인 강서구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임



[그림 2-14] 부산시 공간구조 설정의 전제



[그림 2-15] 부산시 구·군별 인구성장률(2006~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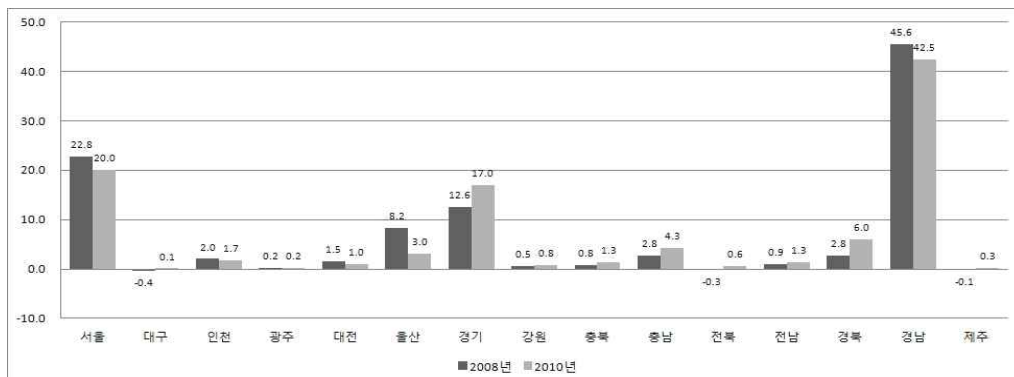
(4) 인구이동

- 2008~2010년간 부산시의 전입·전출 인구이동패턴을 보면, 전입 514,502명, 전출 549,106명으로 총 34,604의 인구전출 있었음. 2008~2010년간 부산시의 전입·전출 인구이동패턴을 보면, 전입 519,334명, 전출 547,800명으로 총 28,466의 인구전출 있었음

[표 2-5] 부산시의 전입·전출 인구이동 패턴

시도별	2006~2008			2008~2010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계	514,502	549,106	-34,604	519,334	547,800	-28,466
서울	17,353	25,249	-7,896	17,418	23,116	-5,698
대구	5,066	4,922	144	5,050	5,066	-16
인천	2,842	3,544	-702	2,738	3,230	-492
광주	1,225	1,300	-75	1,283	1,338	-55
대전	2,005	2,513	-508	1,976	2,266	-290
울산	9,784	12,633	-2,849	10,242	11,106	-864
경기	14,692	19,062	-4,370	15,121	19,961	-4,840
강원	2,283	2,452	-169	2,333	2,569	-236
충북	1,548	1,831	-283	1,618	1,986	-368
충남	2,785	3,744	-959	2,683	3,893	-1,210
전북	1,756	1,666	90	1,518	1,695	-177
전남	3,319	3,640	-321	3,184	3,545	-361
경북	9,617	10,582	-965	9,135	10,837	-1,702
경남	50,369	66,150	-15,781	49,798	61,882	-12,084
제주	1,980	1,940	40	1,707	1,780	-73

- 2006~2008년간 부산시에서 이동하는 인구의 지역분포를 보면 총 유출인구의 45.6%가 경남으로, 22.8%가 서울로 이동하였음. 2008~2010년간 부산시에서 이동하는 인구의 지역분포를 보면 총 유출인구의 42.5%가 경남으로, 20.0%가 서울로 이동하였음



[그림 2-16] 부산시의 전입·전출 인구이동 패턴

- 구·군별 인구이동을 보면, 2006년에는 동래구, 해운대구, 2008년에는 남구, 강서구, 기장군, 2010년에는 강서구, 기장군이 인구이동으로 인한 순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나머지 지역은 인구의 순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동부산권의 기장군은 2008년부터 순증가하고 2010년에는 부산시 구·군에서 가장 높은 순증가를 보이고 있음. 동래구와 해운대구는 2008년부터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부산권의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연제구, 수영구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서부산권의 강서구는 2008년부터 인구의 순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북구, 사하구, 사상구에서 지속적인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2-6] 부산시의 구·군별 인구이동

권역	구·군별	2006			2008			2010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대부산권	부산광역시	559,915	594,601	-34,686	514,502	549,106	-34,604	519,334	547,800	-28,466
	동래구	52,096	49,300	2,796	42,994	46,192	-3,198	42,102	44,950	-2,848
	해운대구	83,879	71,027	12,852	70,746	71,863	-1,117	67,699	71,540	-3,841
	금정구	48,307	50,107	-1,800	35,633	38,679	-3,046	39,976	40,015	-39
중부산권	기장군	9,969	10,781	-812	11,917	10,542	1,375	25,465	13,563	11,902
	중구	7,858	9,013	-1,155	7,636	8,128	-492	7,269	8,223	-954
	서구	18,384	21,824	-3,440	16,429	19,723	-3,294	15,749	18,010	-2,261
	동구	14,699	17,558	-2,859	13,385	15,506	-2,121	13,526	15,194	-1,668
	영도구	19,141	23,281	-4,140	16,586	19,763	-3,177	15,243	18,684	-3,441
	부산진구	61,786	67,773	-5,987	59,298	62,873	-3,575	56,495	63,512	-7,017
	남구	42,469	47,477	-5,008	45,546	44,885	661	42,464	46,195	-3,731
	연제구	37,845	41,349	-3,504	31,664	32,342	-678	33,026	34,090	-1,064
서부산권	수영구	30,800	32,129	-1,329	29,468	31,021	-1,553	30,224	31,756	-1,532
	북구	44,507	51,049	-6,542	43,135	50,901	-7,766	39,045	44,725	-5,680
	사하구	47,251	53,372	-6,121	53,281	54,323	-1,042	47,170	53,249	-6,079
	강서구	7,116	7,647	-531	7,106	6,753	353	10,598	9,481	1,117
	사상구	33,808	40,914	-7,106	29,678	35,612	-5,934	33,283	34,613	-1,330

자료: 부산통계연보 <http://www.busan.go.kr/library>

(5) 지역총생산 격차

- 부산시의 지역내 총생산은 2009년 당해년 기준으로 55,525,657백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93%임
- 지역내 총생산은 강서구가 6,141,250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수영구가 1,708,021백만원으로 가장 낮음
- 연평균증가율은 기장군이 6.66%로 가장 높고, 해운대구가 0.86%로 가장 낮음.
- 부산시 연평균 증가율을 넘어서는 지역은, 동부산권에서는 금정구와 기장군, 중부산권에서는 중구, 영도구, 연제구, 서부산권에서는 북구, 강서구가 있음

[표 2-7] 부산시 구·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백만원)

권역	구·군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동부산권	부산광역시	48,068,574	49,433,567	52,679,517	56,182,324	55,525,657	2.93
	동래구	2,455,174	2,538,607	2,566,421	2,757,303	2,750,641	2.30
	해운대구	3,508,939	3,513,710	3,390,435	3,540,477	3,662,665	0.86
	금정구	2,665,207	2,738,709	2,760,103	3,009,914	3,188,037	3.65
	기장군	1,929,960	1,941,404	2,335,042	2,510,411	2,663,635	6.66
중부산권	중구	2,283,307	2,250,128	2,379,807	2,653,191	2,669,985	3.18
	서구	1,759,404	1,751,762	1,811,949	1,883,242	1,866,606	1.19
	동구	3,615,697	3,659,955	3,955,919	4,238,244	3,792,022	0.96
	영도구	1,566,222	1,637,864	1,612,305	2,119,643	2,115,041	6.19
	부산진구	4,781,713	4,991,962	5,218,585	5,343,832	5,453,410	2.66
	남구	3,534,637	3,479,517	3,808,215	4,316,352	3,701,692	0.93
	연제구	2,674,878	2,644,967	2,961,812	3,048,013	3,193,732	3.61
	수영구	1,482,782	1,483,810	1,630,081	1,641,101	1,708,021	2.87
서부산권	북구	1,816,116	1,913,252	1,991,471	2,141,226	2,272,162	4.58
	사하구	4,527,412	4,873,957	5,000,758	4,969,590	4,903,994	1.61
	강서구	4,631,435	5,048,070	6,093,872	6,543,783	6,141,250	5.81
	사상구	4,835,692	4,965,892	5,162,739	5,466,003	5,442,764	2.39

자료: 부산통계연보 <http://www.busan.go.kr/library>

(6) 1인당 지방세징수실적

- 부산시의 1인당 지방세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 576천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935천원으로 나타났음
- 2011년 구·군별 1인당 지방세징수실적을 살펴보면 강서구가 3,495천원으로 월등히 높고 다음으로 중구가 1,486천원으로 나타났음

[표 2-8] 부산시 구·군별 1인당 지방세징수실적(2002~2011)

구·군별	1인당 지방세징수실적(천 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부산광역시	576	608	593	619	709	714	721	766	851	935
중구	1,113	1,078	1,085	1,042	1,097	1,259	1,483	1,283	1,386	1,486
서구	332	296	307	285	293	291	307	307	362	367
동구	629	647	581	587	630	709	689	783	833	822
영도구	243	252	246	286	230	259	256	362	296	313
부산진구	483	516	455	510	514	493	492	509	544	662
동래구	420	454	381	356	568	433	401	375	420	493
남구	408	479	367	364	343	363	483	437	409	413
북구	362	360	311	290	264	234	286	292	316	320
해운대구	483	526	441	532	746	590	635	640	654	853
사하구	370	400	388	360	351	401	423	388	425	468
금정구	371	388	387	414	556	516	448	433	569	585
강서구	724	913	1,121	1,536	2,306	3,293	4,033	4,176	3,587	3,495
연제구	505	411	389	426	609	467	538	536	560	611
수영구	464	552	523	471	430	491	436	542	508	554
사상구	701	388	399	427	462	446	469	471	538	572
기장군	665	622	757	632	444	554	504	493	479	362

자료: 부산통계연보 <http://www.busan.go.kr/library>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 부산시의 2011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수는 84,109세대, 인원 144,652명으로 2002년 2.7%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3년간(2009년(4.0%)에서 2011년(3.9%))은 큰 변화 없이 일정비율이 유지되고 있음
- 2011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은 동구가 7.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동래구가 2.3%로 낮게 나타났음
- 수급자 비율이 5% 이상인 지역을 살펴보면, 2011년은 동구 7.6%를 비롯하여, 서구 6.1%, 영도구 5.8%, 북구 5.4%로 원도심지역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9] 부산시 구·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2002~2011)

구·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부산광역시	2.7	2.9	3.1	3.5	3.7	3.8	3.8	4.0	4.0	3.9
중구	2.6	2.9	3.5	4.2	4.7	4.7	4.7	5.1	5.2	5.0
서구	4.8	4.9	4.9	5.5	5.6	5.9	5.9	6.4	6.2	6.1
동구	5.0	5.2	5.7	6.7	7.2	7.4	7.4	8.0	7.8	7.6
영도구	3.4	3.7	4.1	4.7	5.2	5.6	5.7	5.7	5.7	5.8
부산진구	2.7	2.8	3.1	3.2	3.5	3.5	3.4	3.6	3.6	3.6
동래구	1.6	1.7	1.7	1.9	2.1	2.1	2.1	2.3	2.4	2.3
남구	1.7	1.9	2.1	2.4	2.6	2.7	2.6	2.7	2.7	2.6
북구	3.7	3.8	4.0	4.3	4.6	4.9	5.0	5.4	5.5	5.4
해운대구	2.4	2.6	2.8	3.2	3.3	3.5	3.4	3.4	3.4	3.4
사하구	3.0	3.2	3.3	3.6	4.0	4.0	4.0	4.3	4.4	4.3
금정구	2.6	2.8	3.0	3.4	3.4	3.5	3.5	3.7	3.5	3.5
강서구	4.6	4.7	5.0	5.3	5.2	5.3	4.9	4.3	4.0	3.7
연제구	2.1	2.3	2.5	2.8	3.0	3.3	3.4	3.7	3.7	3.6
수영구	1.3	1.5	1.7	2.1	2.4	2.6	2.7	3.0	3.0	2.9
사상구	2.8	3.0	3.2	3.7	4.1	4.3	4.5	4.7	4.7	4.5
기장군	3.3	3.4	3.7	4.2	4.2	4.1	4.1	4.1	3.8	3.6

자료: 부산통계연보 <http://www.busan.go.kr/library>

(8) 인구 10만인당 사회복지시설³⁾ 수

-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수는 2002년 3,747,369 개소에서 2011년 3,586,079개소로 일정비율 유지되고 있음. 구·군별로 살펴보면, 해운대구가 428,663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산진구가 397,411개소로 나타났음
- 부산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인구 10만인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2002년 43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116.5개소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 인구 10만인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가장 높은 곳은 기장군 321.5개소이며, 다음으로 강서구 273.9개소로 높음. 낮은 곳은 수영구가 97.4개소로 나타났음

[표 2-10] 부산시 구·군별 인구 10만인당 사회복지시설 수(2002~2011)

구·군별	인구 10만인당 사회복지시설 수(개소)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부산광역시	43.0	47.1	47.2	105.5	108.2	106.4	109.5	112.1	112.5	116.5
중구	33.8	41.9	29.8	89.3	93.2	106.0	116.6	120.0	108.8	114.3
서구	40.3	42.7	45.4	110.5	111.7	115.2	125.8	125.4	122.8	124.2
동구	32.0	35.4	37.4	110.2	114.1	118.9	126.0	127.9	128.3	140.4
영도구	30.2	33.9	34.1	88.4	93.1	94.5	99.5	104.8	105.8	111.1
부산진구	34.6	35.9	35.1	96.8	99.2	100.9	104.2	108.8	113.3	113.0
동래구	25.8	29.0	35.7	88.2	90.6	89.6	92.4	96.3	101.5	101.2
남구	29.4	66.2	73.6	94.2	100.2	100.0	106.0	108.3	110.0	117.8
북구	51.6	54.4	60.5	103.4	106.2	110.8	121.1	122.6	124.4	125.8
해운대구	44.1	50.3	54.5	109.5	103.6	110.5	114.1	116.9	119.2	121.5
사하구	39.4	42.6	48.0	92.4	95.6	96.1	101.2	104.5	108.9	111.5
금정구	33.5	37.2	43.1	96.5	100.0	105.8	112.9	114.1	110.2	111.2
강서구	37.4	41.5	44.3	271.5	281.3	290.7	320.5	287.0	261.1	273.9
연제구	32.3	34.1	36.9	97.6	101.2	104.9	109.0	114.6	112.4	113.0
수영구	28.6	34.3	36.4	77.5	81.2	80.4	87.6	89.8	93.2	97.4
사상구	3.4	38.9	41.1	92.5	96.6	100.0	108.4	115.1	114.6	119.9
기장군	39.0	44.6	49.7	264.7	284.3	290.9	310.5	323.1	314.2	321.5

자료: 부산통계연보 <http://www.busan.go.kr/library>

3) 사회복지시설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부랑인 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9) 인구 10만인당 병상 수

- 부산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인구 10만인당 병상 수는 2002년 735.6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1,547.5개소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 인구 10만인당 병상 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구 3,208.5개소이며, 다음으로 동구가 2,539.2개소로 높게 나타났음. 낮은 곳은 강서구가 449.8개소로 나타났음

[표 2-11] 부산시 구·군별 인구 10만인당 병상 수(2002~2011)

구·군별	인구 10만인당 병상 수(개소)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부산광역시	735.6	747.7	792.4	886.7	970.8	1,105.6	1,189.2	1,282.2	1,416.5	1,547.5
중구	1,278.0	1,310.1	1,337.1	1,583.1	1,684.9	1,649.3	1,747.0	1,866.6	1,726.8	2,324.6
서구	2,524.6	2,287.5	2,443.2	2,620.5	2,586.9	2,807.0	2,995.4	3,012.4	3,130.6	3,208.5
동구	1,487.4	1,429.6	1,550.6	1,628.8	1,690.4	2,010.9	2,399.4	2,611.3	2,494.7	2,539.2
영도구	460.2	460.3	471.4	446.8	465.5	480.7	550.7	582.8	556.5	690.9
부산진구	639.5	713.9	812.1	954.5	1,006.6	1,031.1	1,083.3	1,134.1	1,302.7	1,431.8
동래구	741.5	721.5	822.6	928.3	1,084.3	1,219.4	1,227.8	1,354.9	1,709.2	1,830.0
남구	344.3	341.9	299.1	311.0	571.3	673.8	657.9	692.3	763.8	827.4
북구	441.1	478.4	485.1	553.1	689.5	714.3	763.9	872.0	1,005.6	1,056.8
해운대구	364.2	352.9	447.0	493.5	523.3	656.1	816.3	837.9	1,154.9	1,254.6
사하구	610.2	671.4	691.4	719.4	796.8	972.1	1,027.0	1,221.3	1,392.3	1,665.2
금정구	990.8	1,018.3	1,066.2	1,209.0	1,319.3	1,453.7	1,510.8	1,712.7	1,618.4	1,771.0
강서구	-	-	-	-	-	-	51.9	448.6	434.6	449.8
연제구	840.0	871.4	900.2	966.9	798.3	1,259.9	1,302.8	1,404.0	1,467.3	1,514.5
수영구	589.0	664.2	665.9	897.2	961.6	1,223.3	1,255.0	1,349.9	1,490.4	1,843.2
사상구	1,112.7	1,160.2	1,196.0	1,436.2	1,621.9	1,755.4	2,023.9	2,112.6	2,210.8	2,314.4
기장군	383.3	402.9	424.6	518.3	801.7	900.1	935.0	933.8	1,162.3	1,253.9

자료: 부산통계연보 <http://www.busan.go.kr/library>

(10) 인구 10만인당 문화기반시설 수

- 부산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인구 10만인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2002년 4.59 개소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2009년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11.04 개소로 나타났음
- 2009년에 10만인당 문화기반시설 수가 10개소 이상 늘어난 구를 살펴보면, 급격한 문화기반시설 수의 변화는 중구, 동구, 해운대구에서 시설이 대폭 늘어난 결과임
- 2011년 기준 인구 10만인당 문화기반시설 수가 가장 높은 곳은 해운대구 20.93개소이며, 다음으로 부산진구가 14.85개소로 높게 나타났음. 낮은 곳은 연제구가 1.87개소로 나타났음

[표 2-12] 부산시 구·군별 인구 10만인당 문화기반시설 수(2002~2011)

구·군별	인구 10만인당 문화기반시설 수(개소)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부산광역시	4.59	4.23	4.04	4.37	4.48	4.26	4.76	10.66	10.61	11.04
중구	35.55	32.80	33.47	32.31	31.06	35.34	23.71	64.02	63.30	64.18
서구	4.03	3.45	2.10	2.85	2.92	1.50	1.53	2.37	3.93	4.01
동구	7.39	7.60	7.82	9.03	7.42	4.72	5.77	11.71	7.78	7.86
영도구	3.99	4.09	4.19	4.27	4.37	4.47	4.55	4.67	5.39	5.52
부산진구	5.22	4.61	3.69	4.37	4.42	2.97	2.98	14.82	14.82	14.85
동래구	4.12	2.83	2.86	2.17	2.50	2.45	4.23	10.26	10.58	10.54
남구	2.94	1.95	1.96	2.64	3.00	1.67	1.99	3.32	3.31	3.35
북구	3.42	3.05	2.99	3.27	3.32	3.98	4.06	4.12	4.15	4.20
해운대구	6.19	5.92	6.66	6.40	6.41	7.74	8.90	20.35	20.72	21.93
사하구	1.58	1.32	1.59	1.60	1.62	1.63	1.62	1.65	1.65	1.95
금정구	4.28	4.33	2.95	5.26	4.15	3.83	3.87	12.98	12.81	14.00
강서구	5.09	5.19	5.32	7.19	7.17	7.27	7.16	6.27	7.55	7.21
연제구	2.19	3.10	3.15	2.75	2.78	2.34	2.34	1.89	1.87	1.87
수영구	6.16	4.50	3.86	3.90	5.60	5.58	8.98	9.54	9.49	9.57
사상구	3.04	3.10	2.81	0.71	2.55	2.98	1.13	2.70	2.68	3.09
기장군	5.20	5.10	4.97	7.42	7.48	1.24	7.30	4.43	4.82	4.57

자료: 부산통계연보 <http://www.busan.go.kr/library>

(11) 인구 10만인당 대형마트 수

- 부산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인구 10만인당 대형마트 수는 2003년까지 1개 소도 되지 않았으며, 2004년 0.62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1.09개소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 인구 10만인당 대형마트 수가 가장 높은 곳은 동래구 2.46개소이며, 다음으로 기장군이 1.83개소로 높게 나타났음
- 2011년에 인구 10만인당 대형마트 수가 0을 넘지 않는 구는 서구, 동구, 강서구임

[표 2-13] 부산시 구·군별 인구 10만인당 대형마트 수(2002~2011)

구·군별	10만인당 대형마트 수(개소)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부산광역시	-	-	0.62	0.66	0.91	0.83	0.97	1.01	0.94	1.09
중구	-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
서구	-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동구	-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영도구	-	-	0.60	0.61	0.62	0.64	0.65	0.67	0.67	0.69
부산진구	-	-	0.98	1.21	1.23	1.24	1.24	1.26	1.00	1.26
동래구	-	-	0.36	0.36	0.71	0.70	1.06	1.06	1.06	2.46
남구	-	-	0.33	0.33	0.67	0.67	0.66	0.66	0.66	0.67
북구	-	-	0.60	0.59	0.60	0.92	0.94	0.95	0.96	0.65
해운대구	-	-	0.99	0.98	1.90	1.17	1.17	1.17	1.16	1.17
사하구	-	-	0.53	0.53	0.81	0.54	0.81	0.83	0.83	0.83
금정구	-	-	0.74	0.75	0.75	0.77	0.77	0.79	0.78	0.78
강서구	-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연제구	-	-	0.90	0.92	0.93	0.94	0.94	0.95	0.94	1.40
수영구	-	-	0.55	0.56	0.56	0.56	0.56	1.12	1.12	1.13
사상구	-	-	1.05	1.07	1.82	1.86	1.89	1.93	1.91	1.55
기장군	-	-	0.00	0.00	0.00	0.00	3.65	3.32	1.93	1.83

자료: 부산통계연보 <http://www.busan.go.kr/library>

(12) 인구 1천인당 사설학원 수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준 사설학원 수⁴⁾는 2007년 4,779개소에서 2010년 4,860 개소로 일정비율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인구 1천인당 사설학원 수는 2007년 1.32개소에서 2011년 1.40 개소로 소폭 증가하였음
- 지역교육지원청 기준⁵⁾ 2011년 인구 1천인당 사설학원 수가 가장 높은 곳은 동래교육청 1.58개소이며, 다음으로 해운대교육청이 1.54개소로 높게 나타남. 낮은 곳은 서부교육청이 1.26개소로 나타남

[표 2-14] 부산시 현황별 인구 1천인당 사설학원 수(2002~2011)

현황별	1천인당 사설학원 수(개소)				
	2007	2008	2009	2010	2011
부산광역시교육청	1.32	1.32	1.33	1.35	1.40
서부교육청	1.17	1.18	1.30	1.23	1.26
남부교육청	1.32	1.27	1.23	1.30	1.40
북부교육청	1.22	1.24	1.11	1.20	1.18
동래교육청	1.47	1.43	1.51	1.46	1.58
해운대교육청	1.42	1.48	1.48	1.55	1.54

자료: 부산통계연보 <http://www.busan.go.kr/library>

(13) 인구 1천인당 공원면적

- 부산시 2002년 부터 2006년까지의 인구 1천인당 공원면적은 0.15m² 내외로 일정비율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2007년 기점으로 0.015~0.017m²로 감소하였음
- 2007년 인구 1천인당 공원면적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강서구의 공원면적 2006

4) 2007년 3월부터 동부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이 통합되어 인구 1천인당 사설학원 수의 통계는 2007년부터 표기하였다.

5) 부산의 지역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은 아래 표와 같다.

지역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서부교육지원청	서구, 사하구, 영도구, 중구
남부교육지원청	남구, 동구, 부산진구
북부교육지원청	북구, 사상구, 강서구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교육지원청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년 1.934㎡에서 0.199㎡로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1년 기준 인구 1천인당 공원면적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 0.175㎡이며, 다음으로 기장군이 0.172㎡로 높게 나타났음. 연제구는 1천인당 공원면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음

2) 부산시 지역 내 격차실태 종합 및 시사점

(1) 인구 격차

- 부산시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2002년비 증감률 4.3% 감소)하고 있음. 인구성장률이 높은 곳은 기장군이 27.2%로 정관신도시 조성의 결과로 판단됨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사상구에서 2002년비 증감률이 10%이상 감소하여 원도심 지역(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일부)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부산시 고령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구·군별로 고령화율이 높은 곳은 원도심지역인 동구, 중구, 서구에 집중되어 있음
- 부산시에서 이동하는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총 유출인구의 40%이상이 경남으로 이동하고 있음
- 원도심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인구유출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상대적으로 2006년~2008년에는 해운대구로, 2008년~2010년에는 기장군의 신도시 지역으로 젊은 세대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원도심 지역과 신도시 지역의 인구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경제 격차

- 부산시의 지역내 총생산 연평균 증가율은 2.93%로 나타났음. 부산시 연평균 증가율을 넘어서는 지역은 동부산권의 금정구, 기장군, 중부산권의 중구, 영도구, 연제구, 서부산권의 북구, 강서구임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의 서부산권에 공업지역의 분포가 높아 지역내 총생산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은 동구, 서구, 영도구, 북구가 높게 나타나 원도심 지역의 수급자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3) 문화·복지 격차

- 사회복지시설, 병상, 문화기반시설, 대형마트를 살펴보면, 10년간 인구 당 시설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복지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시가지가 있는 해운대구의 문화기반시설과 사설학원수가 높게 나타났음. 해운대구는 앞서 살펴본 고령화율이 낮고 젊은 세대의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되어 있음. 또한 최근 신도시가 건설된 기장군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과 대형마트 개소가 높게 나타남
- 부산시 전반적으로 문화·복지를 위한 시설의 개소수가 증가하고 있어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강서구, 사상구, 서구, 동구에서는 문화·복지 시설의 비율이 정체되어 있어 격차를 낮추기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

[표 2-15] 부산시 구·군별 인구 1천인당 공원면적(2002~2011)

구·군별	1천인당 공원면적(m ²)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부산광역시	0.143	0.151	0.148	0.150	0.151	0.015	0.016	0.017	0.016	0.016
중구	0.053	0.054	0.947	0.967	0.988	0.100	0.101	0.102	0.101	0.102
서구	0.253	0.260	0.109	0.111	0.114	0.012	0.013	0.013	0.015	0.015
동구	0.167	0.172	0.005	0.006	0.006	0.001	0.001	0.001	0.001	0.001
영도구	0.048	0.049	0.050	0.051	0.052	0.005	0.005	0.006	0.006	0.006
부산진구	0.119	0.140	0.147	0.147	0.147	0.015	0.015	0.015	0.015	0.015
동래구	0.081	0.177	0.167	0.180	0.178	0.016	0.017	0.024	0.017	0.017
남구	0.078	0.076	0.081	0.078	0.079	0.008	0.008	0.009	0.008	0.008
북구	0.033	0.021	0.020	0.024	0.024	0.002	0.002	0.002	0.003	0.003
해운대구	0.052	0.039	0.046	0.037	0.034	0.004	0.004	0.004	0.004	0.004
사하구	0.024	0.024	0.025	0.025	0.026	0.003	0.003	0.003	0.003	0.003
금정구	0.116	0.118	0.046	0.047	0.047	0.005	0.005	0.005	0.005	0.005
강서구	1.836	1.844	1.845	1.917	1.934	0.199	0.218	0.190	0.187	0.175
연제구	0.027	0.029	0.002	0.002	0.002	0.000	0.000	0.000	0.000	0.000
수영구	0.011	0.012	0.012	0.017	0.007	0.001	0.001	0.001	0.001	0.001
사상구	0.022	0.024	0.024	0.025	0.025	0.003	0.003	0.003	0.003	0.003
기장군	2.259	2.217	2.191	2.182	2.240	0.230	0.226	0.208	0.182	0.172

자료: 부산통계연보 <http://www.busan.go.kr/library>

3. 대구·경북지역

1) 주요 지표를 통한 격차실태⁶⁾

- 2012년 연구(전년도 연구)에서 다룬 인구변화, 인구이동, 지역내총생산과 지방지표를 고려하여, 금년도 연구에서는 시·군·구의 지방지표를 중심으로 실태를 검토함

(1) 대구의 구·군

- 2011년 대구의 인구는 2,529,285명⁷⁾으로 2010년에 비해 다소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증감률은 정체된 것으로 파악됨
- 대구의 면적은 884km²로서 1km²당 2,862.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은 자치구·군은 서구(12,665.1명/km²)·중구(10,967.2명/km²)·남구·달서구로 나타났으며 달성군은 매우 낮은 인구밀도(430.5명/km²)를 나타냄
 - － 도시 공간구조 및 성장단계를 고려할 때,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도심 및 연접지역으로서 기존시가지지를 구성하는 지역이며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택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해 기존시가지보다 개발이 늦게 이루어진 신시가지임
- 구·군에 분포하고 있는 사업체 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달서구가 2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북구가 19.3%로 높게 나타남
-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비율 또한 기존시가지인 중구(31.6%)·남구(22.4%)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신시가지인 수성구(5.1%)·달서구(1.8%)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자치구·군에 분포하는 유통업체 수와 매장면적을 달성군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북구와 달서구가 유통업체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매장면적은 북구와 중구가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남
 - － 인구 1,000명당 유통업체 매장면적을 산출하면 중구(2,640m²)가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대구 도심지역으로 다수의 백화점 등이 입지해 있기 때문임
 - － 북구의 1,000명당 유통업체 매장면적(693m²)은 타 자치구·군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북구에 위치한 유통단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
- 금융기관의 수는 수성구와 달서구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0,000명당 금융기관 수는 중구가 8개소로써 도심지역임을 입증해 주며 그 다음으로는 수성구가 2개소로써 높게 나타남

6) 2012년 연구인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상생발전방안(대구·경북부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표를 추가하였으며, 일부 자료는 업데이트하여 활용

7) 2012년 대구광역시 통계연보(2011년 기준)

- 100명당 자동차보유대수는 중구를 제외하면 7개 구·군에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주차공간 확보율을 보면 기존시가지인 동구·서구·남구의 비율이 타 구·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구는 도심으로서 차량보유대수가 100명당 62.2대로 나타났으며 주차공간 확보율은 137.6%으로 나타남
- 의료관련 지표에서는 신시가지라 할 수 있는 수성구에서의 의료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 수성구의 병상1개당 담당인구수는 150명으로 대구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인력 1인당 담당인구수는 192.3명으로서 타 구·군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환경이 가장 나은 자치구는 중구로써 도심의 입지에 따른 종합병원 등의 영향으로 파악되며, 남구의 의료환경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남⁸⁾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수는 달서구와 북구, 서구, 달성군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공단지역이 입지해있기 때문임
- 1일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달성군이 11.9L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 9.6L, 서구 7.9L로 나타남
 - 주거지의 비중이 높은 자치구인 수성구, 남구 등은 대구시의 4.6ℓ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사교육인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수는 수성구, 달서구, 북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평생직업 교육학원은 중구에 가장 많이 입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포함한 인구 10,000명당 학원수는 중구(35개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수성구(21개소), 북구·달성군(각 14개소)으로 나타남
- 자치구에서 발생한 범죄발생 건수는 달서구(21,493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인구 10,000명당 범죄발생건수는 중구(996.5건), 서구(448.8건), 남구(436.8건)으로 나타남

8) 남구에 2개의 대학병원이 입지함에 따라 지표상의 수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됨.

[표 2-16] 2011년 대구 지표

구분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비고
면적(km ²)	884	7	182	18	17	94	76	62	427	
(%)	100.0	0.8	20.6	2.0	2.0	10.7	8.7	7.1	48.3	
인구(명)	2,529,285	77,319	342,715	224,552	169,995	454,135	462,493	614,437	183,639	
(%)	100.0	3.1	13.5	8.9	6.7	18.0	18.3	24.3	7.3	
인구밀도 (명/km ²)	2,862.2	10,967.2	1,880.8	12,665.1	9,753.0	4,827.1	6,048.8	9,856.2	430.5	
사업체수(개)	188,300	19,604	22,551	19,385	13,496	36,323	26,365	37,983	12,593	
(%)	100.0	10.4	12.0	10.3	7.2	19.3	14.0	20.2	6.7	
유통업체개소 (개소)	197	28	22	19	18	37	24	37	12	
매장면적(m ²)	1,077,497	204,128.5	126,523.8	70,033.0	53,623.3	314,856.0	120,566.0	176,987.0	10,779.0	
1,000명당유통 업체 매장면적 (m ²)	426	2,640	369	312	315	693	261	288	59	
금융기관수 (개소)	413	61	35	30	23	65	94	88	16	출장소 제외
10,000명당 금 융기관수(개소)	2	8	1	1	1	1	2	1	1	
1979년이전주 택수(호)	53,185	6,704	11,335	6,234	9,006	7,071	6,234	2,945	3,656	2010년 기준
노 후주택비율 (%)	8.0	31.6	12.1	12.7	22.4	5.8	5.1	1.8	7.1	2010년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대)	985,349	48,073	131,748	76,215	57,134	175,656	183,468	237,199	75,856	
100명당 자동차수(대)	39.0	62.2	38.4	33.9	33.6	38.7	39.7	38.6	41.3	
주차장수(개소)	68,166	3,105	7,016	4,581	4,776	11,781	9,342	15,372	12,193	
주차면수(면)	811,176	66,145	72,531	52,448	45,241	142,935	135,767	225,250	70,859	
주차공간확보 율(주차면수/ 자동차등록대 수*100)	82.3	137.6	55.1	68.8	79.2	81.4	74.0	95.0	93.4	

[표 2-17] 2011년 대구 지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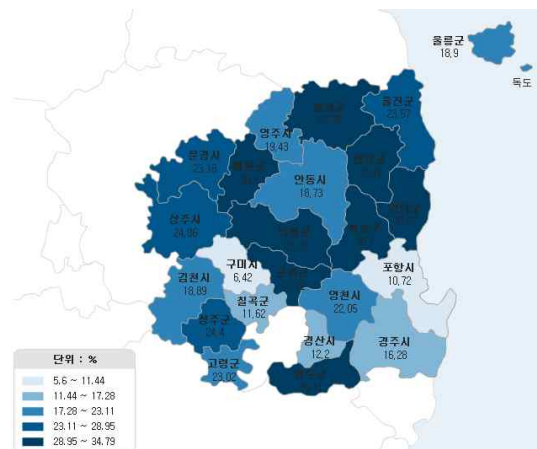
구분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비고
병상수(개)	29,872	3,172	3,383	3,112	3,813	5,144	3,084	6,071	2,093	
의료기관종사 인력(명)	25,725	5,552	2,727	1,915	3,808	3,164	2,405	5,161	993	개 인 약 사 제 외
병상1개당 담 당인구수(명)	84.7	24.4	101.3	72.2	44.6	88.3	150.0	101.2	87.7	
의료인력1인당 담당인구수(명)	98.3	13.9	125.7	117.3	44.6	143.5	192.3	119.1	184.9	
환경요염물질 배출사업장 (개소)	4,360	37	270	816	66	1,127	177	1,175	692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포함
1일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L)	4.6	9.6	3.9	7.9	3.0	3.9	2.7	3.2	11.9	2010년 기준
1일1인당 오수발생량(톤)	2.0	0.2	0.2	0.2	0.3	0.3	0.3	0.2	0.3	
학교교과 교습학원(개)	3,223	133	337	169	106	580	921	720	257	2012년 기준
평생직업교육 학원(개)	319	141	26	23	13	37	33	39	7	2012년 기준
10,000명당 학원수(개)	14	35	11	9	7	14	21	12	14	교습 및 직업 학원의 합계
범죄발생건수 (건)	96,259	7,705	13,981	10,079	7,426	15,191	15,505	21,493	4,879	
10,000명당범 죄발생건수(건)	380.6	996.5	407.9	448.8	436.8	334.5	335.2	349.8	265.7	

(2) 경북의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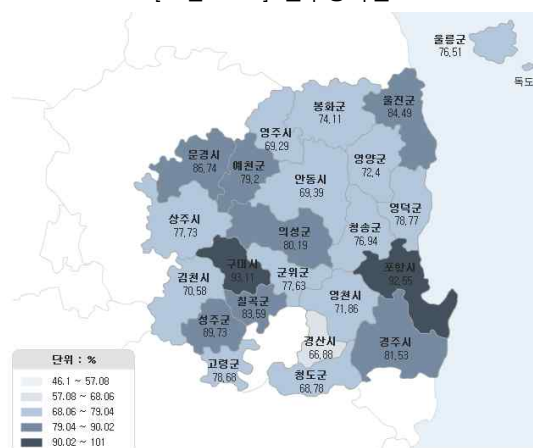
- 통계청의 e-지방지표⁹⁾(2012년 기준)를 활용하여 경북의 시·군의 상황을 검토
- 2012년 경북의 인구는 2,738,420명¹⁰⁾으로 인구증감률은 정체된 것으로 파악됨
- 고령인구비율은 도시의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구미·칠곡·포항·경산·경주의 비율은 비교적 낮고 그 외의 시·군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북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의 차이가 명확한 것으로 파악됨
- 경북의 도로포장률은 76.39%로써 대도시의 규모인 포항과 구미가 90% 이상이며, 경주·성주·칠곡·의성·예천·문경은 평균값 정도의 포장률을 나타내며 그 외의 지역은 평균이하의 포장률을 나타냄
- 상수 및 하수도보급률은 시급 지역의 비율에 비해 군급 지역의 비율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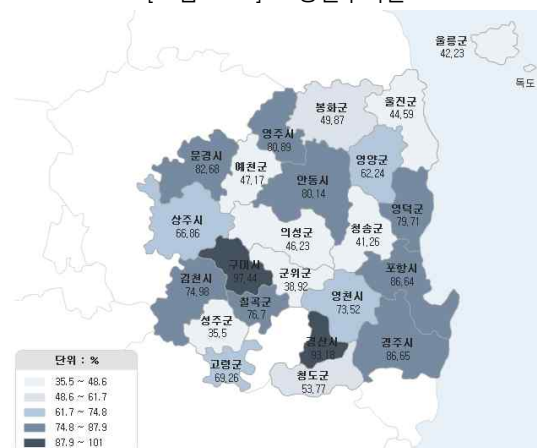
[그림 2-17] 인구증가율



[그림 2-18] 고령인구비율



[그림 2-19] 도로포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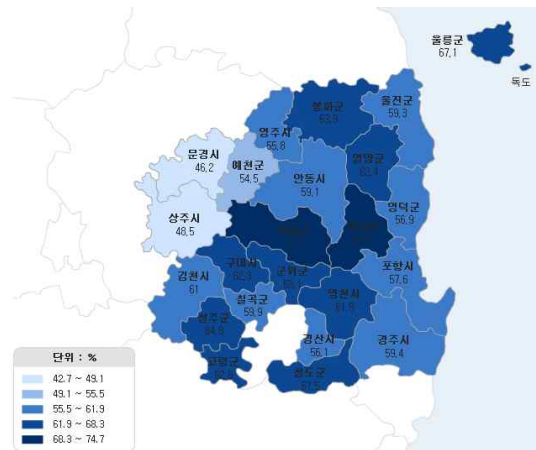


[그림 2-20] 상수 및 하수도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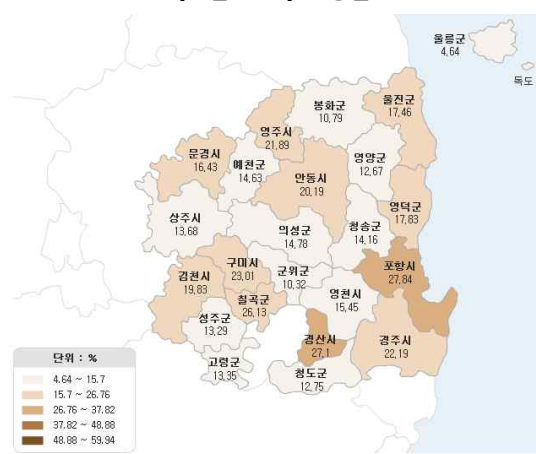
9) <http://kosis.kr>

10) 경북의 통계, <http://www.gb.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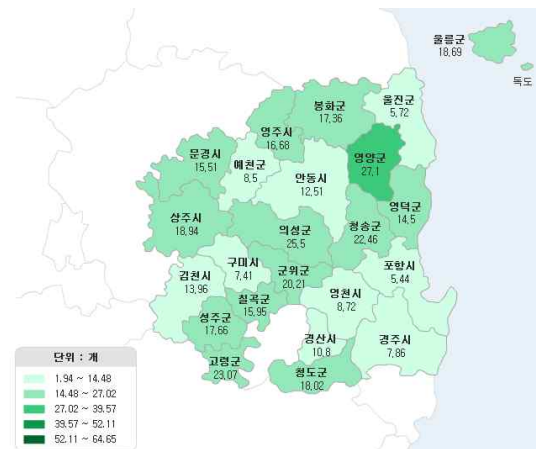
- 실업률은 영천시를 제외한 시지역에서 군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2-22]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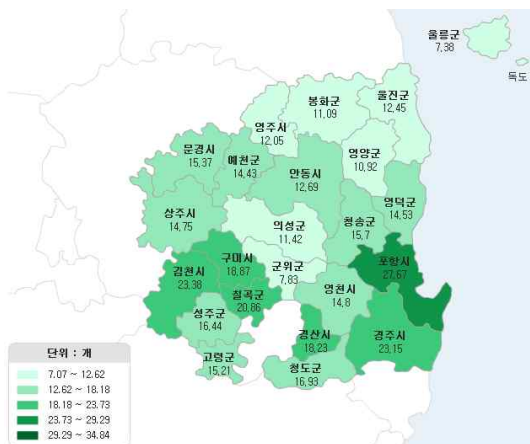


[그림 2-24] 일반회계중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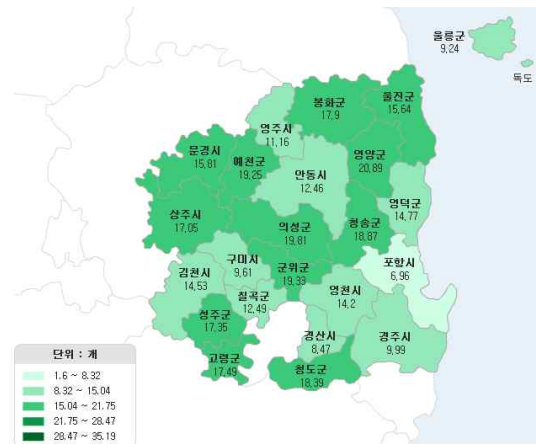


[그림 2-26]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는 영양군(43.86개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구미시(2.42개소)로 나타남
-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가 가장 높은 곳은 영양군(27.1개소)으로 나타났으며, 울진군(5.72개소)과 구미시(7.41개소)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남
- 유아천명당 보육시설수는 포항(27.67개소)과 김천·경주·칠곡·구미가 높게 나타났으며 군위·영양 등이 낮게 나타났음
-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는 포항(6.96개소)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김천·구미·칠곡 등에서 낮고 울진·영양·군위 등에서 높게 나타남
- 주관적건강수준 인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주군(53%)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영천시(26.3%)로 나타남
- 건강관련 삶의 지표를 나타내는 EQ-5D지표에서는 시급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타났고 군급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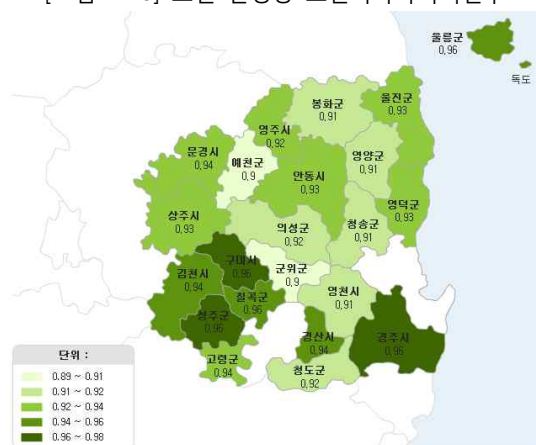
[그림 2-27] 유아(0~4세) 천명당 보육시설수



[그림 2-28]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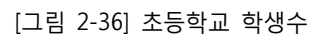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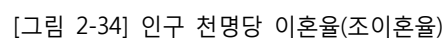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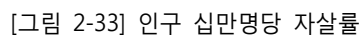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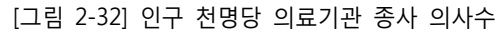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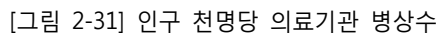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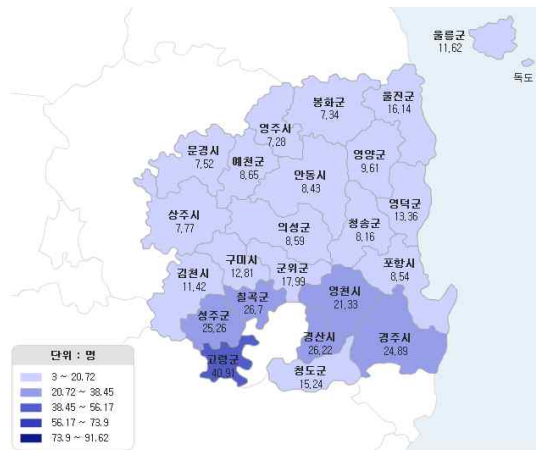
[그림 2-29] 주관적건강수준 인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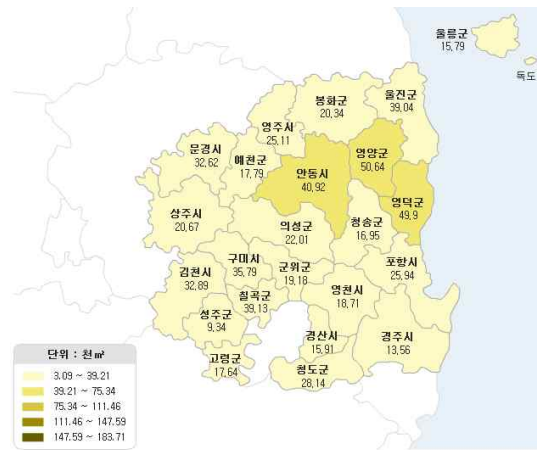
[그림 2-30] EQ-5D 지표

- 안동시의 병상수가 천명당 27.42병상으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군위군이 3.52병상으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2-37] 인구 천명당 외국인수



[그림 2-38]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조성면적

2) 대구·경북의 지역 내 격차실태 종합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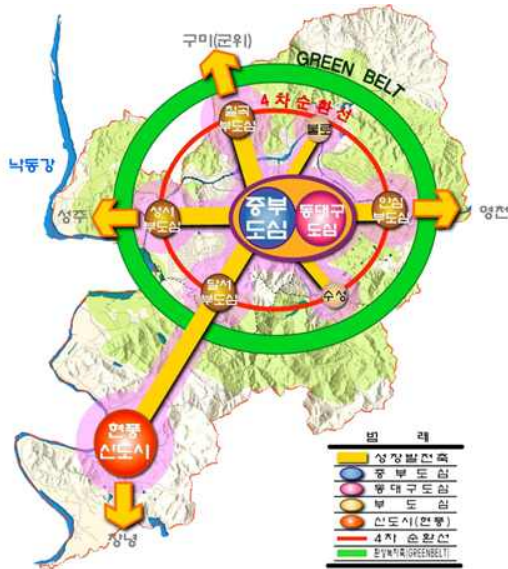
- 대구·경북에서의 격차실태는 대구는 하나의 도시로서 지역내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고 경북은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시·군과 타 시·군간의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대구의 지역내 격차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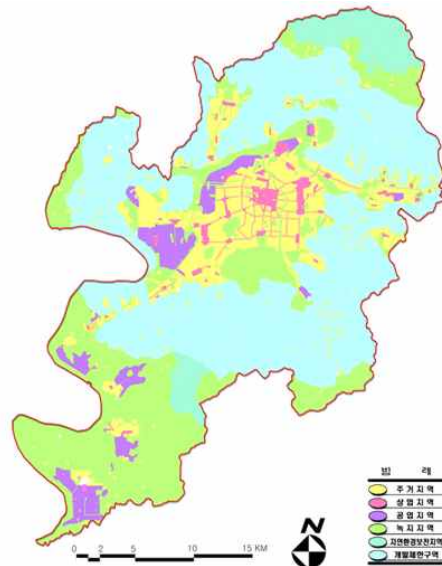
- 대구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간구조와 그에 맞는 용도지역의 설정을 통해 현재까지 관리되어 오고 있음
 - 대구의 공간구조에 맞게 관리되어 온 각 지역은 공간구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방향으로 관리됨에 따라 상업·공업·주거 등의 특징들이 잘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도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은 도시를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로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도시환경적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8개 구·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구는 중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구와 수성·달서구 그리고 달성군으로 이루어져 있음
 - 중구는 도심으로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도심의 범위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동대구를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되었음.
 - 서구와 남부의 경우 지형적 여건 등에 의해 시가지가 확장되지 못하고 기존의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어 기존시가지의 모습을 대변하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 동구·북구는 기존시가지와 시가지 확장에 의해 개발된 신시가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며,

수성구와 달서구는 도시기능의 확대와 성장에 따라 새로이 개발된 신시가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

- 달성군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현재 국가산단·DGIST 등의 개발에 따라 신시가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지역임



[그림 2-39] 대구 도시공간구조



[그림 2-40] 대구 용도지정현황

- 인구밀도와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지역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존시가지로서 도시성장에 따른 개발이 진행되지 못한 자치구와 신개발이 진행된 자치구의 차이가 나타났음

- 신개발이 진행되지 못한 자치구(서구·중구·남구)의 인구밀도는 매우 높고 노후주택의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신개발이 진행된 자치구의 경우 타 구에 비해 밀도가 비교적 낮고 노후주택의 비율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의 편의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각 자치구·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공간구조와 교통편의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파악됨

- 중구는 도심으로서의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어 유통업체 매장면적, 금융기관의 수, 평생직업 교육학원의 수, 의료관련 지표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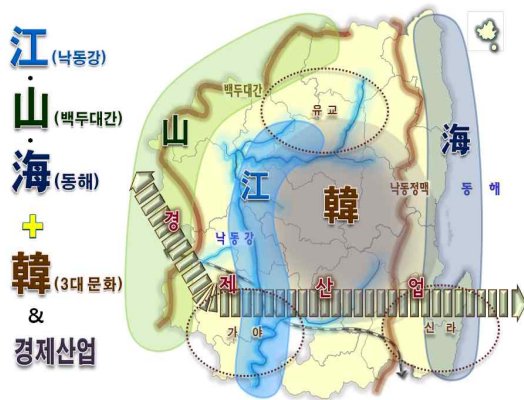
- 주차공간 확보율은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음

- 생산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살펴보면, 도시공간구조와 용도지역 지정 등에 따른 환경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공단(산단)이 입지한 지역에서는 사업체수, 생활쓰레기배출량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경북의 지역내 격차실태

- 경북은 경북종합계획(2012.12)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별 발전방향과 현재까지 국토개발이 이루어져 온 진행과정에 따라 몇 개의 특징이 있는 권역으로 구분가능
 - 경북종합계획에서는 경북발전 축과 방향을 자연적 여건과 문화 및 경제산업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군간의 연계·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활권을 남부도시권·서부산업권·북부자원권·동부해양권으로 구분
 - 경제산업축의 측면에서 그동안 경북은 김천·구미·칠곡·경산·경주·포항 등으로 이어지는 기존 경부산업벨트 중심의 한 도시적 개발지역과 안동·영주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지역 등으로 구분되어 왔음



[그림 2-41] 2020년 경북발전 공간 구조



[그림 2-42] 경북 생활권 설정 범위

- 경북의 시·군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적 개발지역들과 농업지역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간의 차이는 시와 군의 환경적 차이로 파악될 수 있음
 - 도로포장률, 상수 및 하수도보급률 등의 기반시설 보급률에 있어 시와 군의 차이가 나타남
 - 군지역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률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지역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고용률이 군지역에 비해 낮고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보육관련 시설들의 경우에도 군지역의 시설확보율이 시지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단위인구당 외국인수의 경우에는 시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경북은 전반적으로 연접한 각 시·군간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으로 파악됨
 - 각각의 지표들은 살펴보면 특징적인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향후 이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도종합계획에서 설정되어 있는 생활권 범위와 실제 주민들의 생활반경과 경제활동의 범위 등을 고려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할 것임

3) 대구·경북의 이슈와 과제

(1) 대구·경북의 공동과제

- 현재 진행 중인 경북 도청 이전사업과 후적지 개발을 특별법¹¹⁾의 개정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재원의 확보
 - 특별법 개정(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국비지원범위의 확대와 후적지 개발을 위한 국가사업화
- 남부권 신공항 건설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
 - 영남지역의 경제발전을 지탱할 신공항 건설을 위한 대구·경북의 공동노력

(2) 대구의 이슈와 과제

- 대구의 공간구조에 적합한 지역별 특성화 개발
 - 도심의 특성을 발전시키고 도시활력 부여를 위한 도심재생 사업
 - 도시내 노후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제3공단·서대구공단 재정비
 -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심기능강화를 위한 동대구도심개발(동대구역세권개발)
- 지역내 연계축진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철곡~범물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개발
 - 대구와 주변 시·군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도시철도 1·2호선 연장
 - 도시내 지역간 소통의 극대화를 위한 4차 순환선 개발
- 양질의 정주여건 공급을 위한 지역내 균형개발

(3) 경북의 이슈와 과제

- 권역별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
 - 경북 권역별 산업벨트의 형성(IT융·복합 신산업벨트,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조성 등)

1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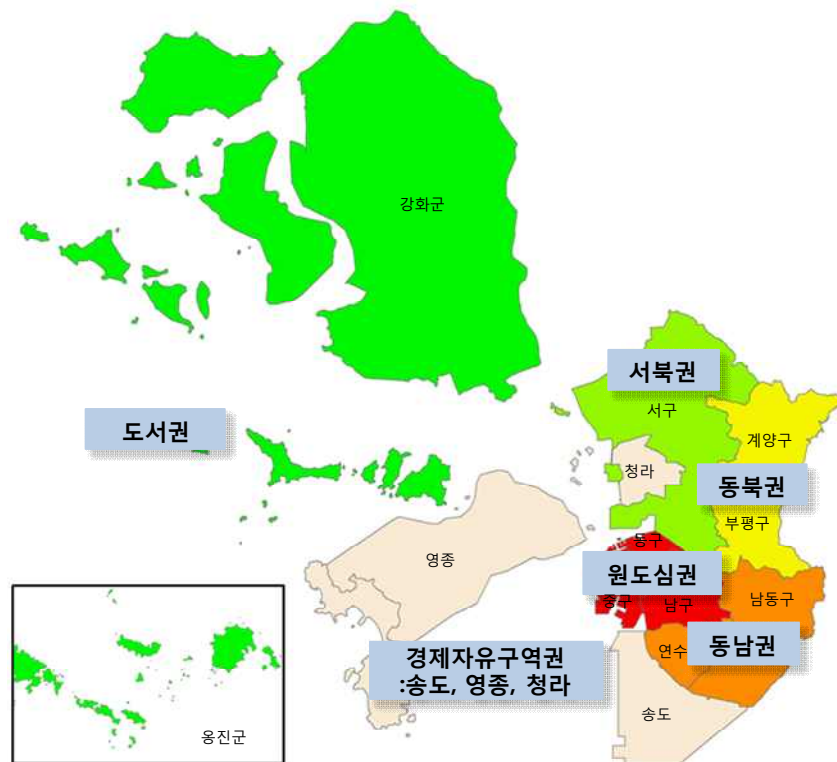
- 경북의 역사·문화와 자연을 기반으로 한 산업네트워크 구축(3대 문화권관련 사업, 백두대간관련사업 등)

○ 경북 지역간 연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

- 동해안 및 동서5축 고속도로 구축
-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건설, 중부내륙 고속·복선 철도 건설 등

4. 인천광역시

- 자연·물리적 환경,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특성, 행정구역, 주거지 및 거주인구특성,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6개 생활권역으로 구분.



[그림 2-43] 인천시 생활권역의 구분

[표 2-24] 인천시 생활권역의 구분

구 분	행 정 구 역
원도심권	도시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중·동·남구
동남권	송도를 제외한 연수·남동구
동북권	부평·계양구
서북권	청라를 제외한 서구
도서권	강화·옹진군
경제자유구역권	송도·영종·청라

1) 주요 지표를 통한 격차실태

(1) 인구증가율

- 인구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도별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남
- 지니계수는 1.0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각 군구의 발전속도가 크게 달라 여전히 지역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동구, 남구 등 전형적인 원도심 지역과 강화군과 같은 농촌지역이 있는 반면에, 연수구, 남동구, 서구와 같이 각종 대단위 주택단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도 존재하기 때문이라 판단됨

[표 2-25] 인천 군구별 인구증가율 (단위: %)

기준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천	-0.3	0.3	0.8	0.9	1.5	1.1	0.7	1.8	1.6	1.5
중구	9.0	5.4	2.6	-0.4	-2.3	-1.2	1.1	3.6	0.7	5.4
동구	8.3	0.3	-3.8	-3.1	-2.1	1.1	3.3	3.0	-1.2	-2.5
남구	0.1	-0.5	-2.4	-0.9	-1.0	2.0	-0.2	0.9	-1.4	-0.8
연수구	-0.7	-0.6	3.8	2.0	-0.8	0.0	1.1	2.8	3.1	1.6
남동구	-2.7	-2.1	-1.3	2.8	9.0	5.8	3.0	2.2	4.7	1.6
부평구	-0.8	0.6	1.8	0.5	-0.2	0.1	-0.9	0.6	-1.2	-0.3
계양구	-0.3	-0.9	-0.5	2.1	0.1	-0.1	0.5	1.1	-1.0	-0.6
서구	-0.9	4.4	5.1	0.9	3.9	-1.5	0.5	3.2	6.9	7.7
강화군	-1.0	0.1	0.4	0.2	1.5	1.4	-0.5	0.1	-0.5	0.0
옹진군	1.1	3.9	5.3	5.7	3.0	2.3	4.9	2.8	4.0	2.8
지니계수	1.67	1.38	1.73	1.40	1.76	1.20	0.85	0.36	1.22	1.20

(2) 고령화율

- 전체적으로 고령화율은 증가추세로, 군구의 고령화가 높아지고 있음
- 지니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지역간 편차가 작아지고 있으나, 고령화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인구가 전 지역에 걸쳐 증가하고 있음을 뜻함
- 강화 및 옹진의 경우는 약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원도심인 중구, 동구, 남구는 각각 11.8%, 13.5%, 10.8로 고령사회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원도심지역은 앞서 살펴본 인구감소 및 정체 현상에 더불어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표 2-26] 인천 군구별 고령화율 (단위: %)

기준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천	5.89	6.18	6.49	6.79	7.13	7.56	7.87	8.18	8.47	8.79
중구	9.06	9.04	9.12	9.32	9.74	10.39	10.81	11.10	11.40	11.84
동구	9.44	9.42	9.94	10.41	11.04	11.82	12.14	12.49	12.86	13.50
남구	6.58	6.94	7.37	7.87	8.38	9.05	9.42	9.85	10.29	10.82
연수구	4.99	5.21	5.50	5.66	5.88	6.20	6.47	6.72	6.82	7.04
남동구	5.18	5.43	5.76	6.09	6.41	6.64	6.95	7.19	7.50	7.79
부평구	5.34	5.66	6.02	6.31	6.67	7.17	7.46	7.81	8.15	8.55
계양구	4.35	4.58	4.78	5.02	5.30	5.67	5.96	6.18	6.43	6.72
서구	4.70	4.91	5.07	5.25	5.53	5.87	6.09	6.34	6.52	6.68
강화군	17.50	18.32	19.06	19.78	20.70	21.64	22.31	23.02	23.66	24.62
옹진군	19.26	19.35	19.33	19.11	18.44	18.78	19.13	18.88	19.20	19.31
지니계수	0.33	0.33	0.32	0.31	0.30	0.30	0.29	0.29	0.28	0.28

(3) 1인당 지방세징수실적

-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은 간접적으로 군구의 소득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지표로, 전체적으로 1인당 지방세징수실적은 증가하고 있음
- 지니계수는 해마다 부침이 있으므로 지역별로 경제수준의 편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조사가 요구됨
- 타 지표에 비해 1인당 지방세징수실적의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이는 인천시의 군구의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특히 송도, 영종,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속해 있는 연수구, 중구, 서구 등에서 높은 1인당 지방세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음

[표 2-27] 인천 군구별 1인당 지방세징수실적 (단위: 천원)

기준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천	594	603	607	669	741	828	862	871	738	996
중구	1760	1597	1403	1323	1426	1713	2026	2312	1630	2097
동구	423	538	460	612	642	720	744	834	449	757
남구	420	382	360	370	396	471	557	441	417	507
연수구	433	384	408	703	651	693	705	982	779	1189
남동구	506	543	540	592	730	901	803	757	535	963
부평구	417	378	377	451	455	470	557	443	386	487
계양구	383	364	350	366	454	446	474	462	414	424
서구	613	613	696	672	718	813	803	875	758	1035
강화군	397	456	581	504	616	739	851	1056	917	900
옹진군	608	655	1372	1150	1285	1379	1403	1487	1033	1222
지니계수	0.28	0.28	0.32	0.26	0.25	0.27	0.27	0.32	0.29	0.28

(4) 인구 10만인당 사회복지시설 수

- 전체적으로 인구 10만인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니계수 또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2011년 지니계수의 값이 0.51로 여전히 지역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강화군, 옹진군의 도서지역의 인구 10만인당 사회복지시설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됨
- 특히, 동구의 경우 타 지역 대비 사회복지시설 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28] 인천 군구별 인구 10만인당 사회복지시설수 (단위: 개소)

기준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천	1.4	1.6	1.5	1.8	2.2	3.1	4.9	7.2	10.2	10.8
중구	1.3	1.2	1.1	2.2	2.2	5.6	5.6	10.0	16.1	17.1
동구	1.3	1.2	1.2	1.3	1.3	1.3	1.3	1.3	6.3	3.8
남구	0.9	0.9	0.9	1.2	1.9	2.9	4.3	5.7	7.3	8.9
연수구	3.5	3.9	3.9	4.1	4.4	3.3	5.2	6.3	6.4	7.3
남동구	0.0	0.3	0.3	0.3	0.8	1.4	2.9	5.2	7.8	9.5
부평구	1.8	1.8	1.8	1.9	2.3	3.9	5.4	7.3	10.2	10.3
계양구	0.3	0.3	0.3	0.3	0.3	0.6	1.5	4.1	7.2	8.1
서구	1.7	1.7	1.7	1.6	1.6	4.3	5.6	7.6	10.3	9.9
강화군	4.6	6.1	4.6	9.2	13.7	15.0	32.6	44.7	59.6	59.9
옹진군	14.2	14.0	13.5	12.8	12.1	11.8	11.5	32.9	48.0	46.2
지니계수	0.65	0.64	0.63	0.62	0.60	0.51	0.54	0.55	0.51	0.51

(5) 인구 10만인당 병상수

- 전체적으로 인구 10만명 당 병상수는 증가추세이지만 최근 증가세가 둔화됨
- 2000년대 들어 지니계수도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중구, 동구 등 원도심의 병상 수는 하락 또는 정체임에 반해 연수구, 계양구 등 신시가지가 조성된 구의 병상 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는 신시가지의 조성과 함께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어 병원 및 병상 수의 증가로 연결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와 김단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인구가 증가한 서구와 도서지역인 옹진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병상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29] 인천 군구별 인구 10만인당 병상수 (단위: 개)

기준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천	634.8	656.9	668.0	699.2	718.2	788.2	853.7	855.8	852.9	811.6
중구	2190.6	1875.4	1782.3	1910.0	1803.1	1768.8	1787.1	1966.9	2030.2	1921.2
동구	1128.8	1021.3	1013.7	1113.4	1098.6	1013.7	1015.1	942.7	740.2	745.7
남구	478.5	520.0	533.1	584.4	601.9	769.1	699.6	865.5	845.5	874.0
연수구	388.9	377.8	383.2	378.6	424.8	545.9	436.0	612.5	644.4	612.9
남동구	801.1	794.3	799.9	834.3	860.2	860.9	1106.7	864.6	919.5	938.1
부평구	580.8	603.2	618.6	669.5	665.0	753.3	907.2	844.1	800.7	810.0
계양구	392.8	451.2	507.4	502.6	577.8	576.1	640.1	729.1	700.8	1072.2
서구	741.3	839.3	819.2	810.5	832.5	891.9	896.4	858.1	910.7	312.6
강화군	379.5	382.7	377.8	416.0	452.6	666.7	856.0	952.7	789.1	931.1
옹진군	210.8	207.5	241.2	229.1	215.4	354.7	263.0	360.1	244.0	254.8
지니 계수	0.40	0.36	0.34	0.35	0.32	0.25	0.27	0.22	0.25	0.30

(6) 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 전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노령인구의 증가 등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장기적 불황의 여파로 영세민의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정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이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됨
- 지니계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빈곤층이 전 지역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함
- 특히, 강화, 옹진 등 도서지역과 원도심 지역인 중구, 동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이 높음

[표 2-30] 인천 군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단위: %)

기준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천	2.2	2.1	2.3	2.5	2.6	2.7	2.7	2.7	2.7	2.6
중구	4.0	3.8	3.4	3.4	3.4	3.5	3.5	3.5	3.5	3.4
동구	3.8	3.8	3.7	3.7	4.1	4.4	4.5	4.4	4.0	3.5
남구	2.1	2.1	2.2	2.4	2.5	2.4	2.5	2.4	2.5	2.4
연수구	2.6	2.6	2.7	2.8	3.1	2.9	3.2	3.1	3.1	3.0
남동구	1.9	1.9	2.0	2.4	2.7	3.0	2.9	2.8	2.9	2.9
부평구	2.3	2.2	2.4	2.6	2.8	2.9	3.0	3.1	3.1	3.0
계양구	1.2	1.2	1.2	1.5	1.7	1.7	1.7	1.6	1.6	1.5
서구	1.8	1.9	2.2	2.2	2.2	2.1	2.2	2.0	2.0	1.8
강화군	3.2	3.5	3.8	4.4	4.6	4.8	4.8	5.0	4.9	4.7
옹진군	4.3	3.7	3.5	3.5	3.3	2.7	2.4	2.4	2.8	2.8
지니계수	0.23	0.21	0.18	0.18	0.17	0.18	0.19	0.20	0.18	0.18

(7) 인구 10만인당 문화기반시설 수

- 전체적으로 인구 10만 명 당 문화기반시설수는 증가추세로, 특히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 2007년부터 대규모 시설 확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지니계수도 하락하는 경향이므로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시설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강화·옹진군의 경우, 인구수가 적어 인구 10만 명 당 문화기반시설수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음
- 문화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최근의 사회현상과 비추어볼 때, 그 사회적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 2-31] 인천 군구별 인구 10만인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 개소)

기준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천	0.89	0.89	0.88	0.91	1.54	1.75	2.25	2.21	2.57
중구	1.17	1.11	1.08	1.09	3.34	3.38	6.69	6.46	8.55
동구	1.24	1.23	1.28	1.32	2.70	2.67	2.59	2.51	3.81
남구	0.92	0.93	0.95	0.96	1.45	1.90	3.10	3.07	3.35
연수구	0.78	0.78	0.75	1.11	2.23	2.23	2.21	2.15	2.43
남동구	0.76	0.78	0.79	0.51	0.71	0.89	1.29	1.27	1.41
부평구	0.36	0.36	0.35	0.53	1.05	1.05	1.24	1.23	1.78
계양구	0.59	0.59	0.60	0.58	0.88	1.17	1.45	1.44	1.74
서구	0.58	0.55	0.53	0.52	1.25	1.53	1.77	1.72	1.83
강화군	7.69	7.68	7.65	7.63	9.03	10.39	11.93	11.92	11.98
옹진군	7.01	6.75	6.41	6.06	5.89	5.76	5.49	5.34	5.13
지니계수	0.61	0.61	0.61	0.59	0.49	0.48	0.47	0.47	0.44

(8) 인구 10만인당 대형마트 수

- 전체적으로 인구 10만 인 당 대형마트수는 증가추세에 있음. 특히 서구, 연수구와 같이 경제자유구역 등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원도심(중구, 동구) 등에 대형할인점이 입점하면서 지니계수는 다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강화군, 옹진군 등 도서지역에 대형할인점이 입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니계수 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0.5 이상)

[표 2-32] 인천 군구별 인구 10만인당 대형마트수 (단위: 개소)

기준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천	0.42	0.58	0.54	0.53	0.60	0.74	0.77	0.73	0.82	0.84
중구	1.25	1.14	1.08	1.05	2.10	3.21	3.25	3.21	3.10	3.07
동구	0.00	0.00	1.22	1.27	1.31	1.33	1.31	1.27	1.24	1.25
남구	0.00	0.00	0.00	0.24	0.24	0.24	0.23	0.23	0.23	0.24
연수구	0.38	0.39	0.39	0.75	0.37	0.74	0.74	0.73	0.71	1.03
남동구	0.24	0.74	0.76	0.51	0.50	0.69	0.87	0.63	0.62	0.59
부평구	0.54	0.54	0.53	0.35	0.52	0.69	0.69	0.70	0.70	0.70
계양구	1.17	1.17	1.18	1.19	1.16	1.16	1.16	1.15	1.42	1.44
서구	0.28	0.85	0.27	0.26	0.51	0.49	0.50	0.49	0.96	0.90
강화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옹진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지니계수	0.67	0.58	0.54	0.50	0.55	0.57	0.56	0.57	0.54	0.53

(9) 인구 군구별 1천인당 사설학원수

- 전체적으로 인구 1천인 당 사설학원 수는 증가추세임
- 지니계수는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로써 사설학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연수, 남동, 부평, 서구, 계양구 등 신시가지가 조성되거나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하여 상주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설학원수의 지역 간 격차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시계열적으로도 격차가 조금씩 커지고 있음

[표 2-33] 인천 군구별 인구1천인당 사설학원수 (단위: 개소)

기준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천	1.10	1.12	1.14	1.16	1.13	1.18	1.18	1.28	1.31
중구	0.78	0.82	0.73	0.47	0.48	0.73	0.30	0.32	0.17
동구	0.43	0.49	0.59	0.36	0.31	0.53	0.25	0.30	0.13
남구	0.94	0.89	0.87	0.90	0.77	0.86	0.45	0.41	0.20
연수구	1.13	1.08	1.04	1.09	1.16	1.68	1.31	1.45	1.41
남동구	1.21	1.13	1.08	1.02	0.94	0.76	1.06	1.17	1.15
부평구	1.26	1.13	1.08	1.09	1.15	1.19	1.31	1.30	1.33
계양구	1.36	1.31	1.22	1.34	1.14	1.17	1.17	1.18	1.16
서구	1.35	1.20	1.17	1.01	1.22	1.29	1.50	1.35	1.27
강화군	0.72	0.71	0.69	0.73	0.75	0.45	0.55	0.54	0.69
옹진군	0.14	0.27	0.32	0.12	0.12	0.17	0.11	0.16	0.00
지니계수	0.26	0.22	0.19	0.28	0.28	0.30	0.38	0.36	0.44

(10) 인천 군구별 학급당 학생수

- 전체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감소추세임
- 지니계수는 0.11~0.12로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임
- 특히 연수, 남동, 부평, 서구, 계양구 등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급격히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서 학급당 학생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급당 학생수의 지역간 격차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어 지역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표 2-34] 인천 군구별 학급당 학생수 (단위: 명)

기준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천	39.4	36.8	35.8	35.0	34.0	33.6	32.5	33.3	30.8	29.9
중구	35.2	33.8	33.1	32.8	31.8	30.9	29.7	29.0	29.3	29.4
동구	36.9	34.0	33.6	32.8	31.7	31.4	30.3	29.8	28.9	28.2
남구	38.2	36.5	35.7	35.5	34.2	33.9	32.6	31.9	30.8	30.3
연수구	40.0	37.4	36.7	36.1	35.4	35.4	34.3	33.9	32.8	31.2
남동구	40.7	37.8	36.0	35.6	34.6	34.5	33.3	32.7	31.5	30.6
부평구	40.2	37.7	36.6	35.3	34.2	33.7	32.9	32.2	31.1	30.1
계양구	41.8	38.6	37.2	36.5	35.3	34.8	33.6	32.6	31.7	30.3
서구	41.3	37.9	36.7	35.7	34.4	34.3	33.0	32.0	31.1	30.4
강화군	27.1	26.1	25.0	24.1	23.1	22.5	21.9	21.0	20.6	20.6
옹진군	14.3	14.5	14.8	14.7	14.2	13.7	12.6	12.0	12.2	12.0
지니계수	0.12	0.11	0.11	0.11	0.11	0.11	0.11	0.12	0.11	0.10

(11) 인천 군구별 인구 1천인당 공원면적

- 전체적으로 인구 1천인당 공원면적은 증가추세임
- 지니계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지역간 격차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보임

[표 2-35] 인천 1천인당 공원면적 (단위: m²)

기준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천	2.011	2.028	2.052	2.088	2.467	2.404	2.420	2.471
중구	0.336	0.348	0.348	0.342	0.707	0.715	0.684	0.689
동구	7.030	6.887	6.680	6.560	6.636	6.856	7.056	6.969
남구	16.350	16.893	16.780	16.657	16.754	16.723	17.332	17.102
연수구	2.162	2.245	2.297	2.282	2.284	2.308	2.378	2.452
남동구	5.557	5.670	5.850	6.375	6.739	6.931	6.897	7.210
부평구	17.546	17.865	18.000	18.000	18.044	17.877	17.982	17.796
계양구	7.439	7.405	7.569	7.587	7.586	7.625	7.705	7.627
서구	2.727	2.763	2.801	2.914	3.718	3.080	3.181	3.391
강화군	0.159	0.160	0.160	0.163	0.169	0.164	0.165	0.166
옹진군	0.087	0.092	0.098	0.100	0.105	0.107	0.109	0.114
지니계수	0.61	0.61	0.60	0.60	0.58	0.58	0.58	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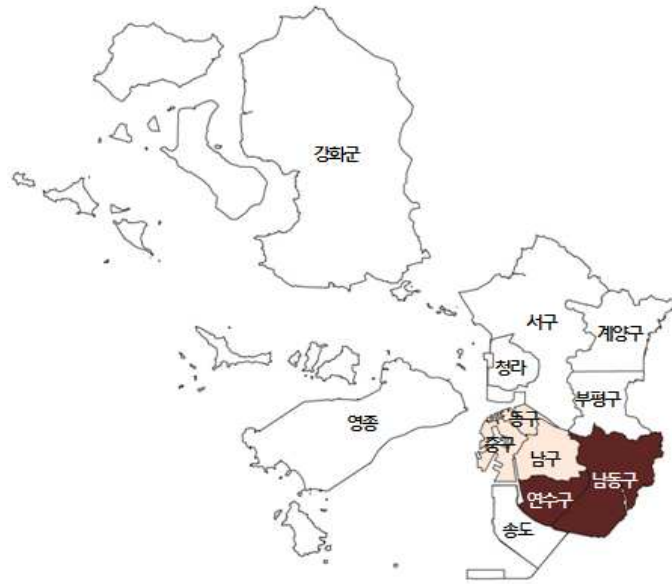
2) 인천시의 지역 내 격차실태 종합 및 시사점

- 11개 지표별로 10년단위로 인천의 지역격차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니계수는 인구 1천인당 사설학원수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시계열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역간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지니계수가 0.4이상으로 여전히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인구증가율, 인구 10만인당 사회복지시설수, 인구 10만인당 문화기반시설수, 인구 10만인당 대형마트수, 인구 1천인당 사설학원수, 인구 1천인당 공원면적의 지표로, 대체로 서비스 임계규모에 따라 시설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설로 강화군, 옹진군 등 도서지역이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임
- 또한, 원도심(중구, 동구, 남구)와 신시가지(연수구, 남동구) 간 지역격차 현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먼저, 신시가지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인구증가율, 문화기반시설, 대형마트수, 지방세징수실적, 사설학원수와 고령화율,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등으로 나타났음. 즉, 신시가지는 도시개발에 따른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증가로 이어져 왔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와 중산층이상이 인구가 이동함으로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편의시설의 입지가 이루어져 원도심과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대로, 원도심에서 신시가지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도심에 시설의 공급 및 확충이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인구감소에 의한 상대적인 증가현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중요한 것은 신시가지가 열위를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대규모 주택지 개발에 따라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임

(1) 만족도 조사 분석 총괄

■ 신시가지와 원도심간 균형발전 도모

- 인천시는 모든 분야의 만족도에서 연수·남동구가 11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만족 수준을 보이고 있음. 반면, 중·동·남구가 5개 항목에서, 송도·영종·청라가 4개 항목에서, 그리고 서구가 2개 항목에서 가장 낮은 만족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2-44] 인천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권역과 가장 낮은 권역

[표 2-36] 인천시 항목별 만족도 최상위 생활권역과 최하위 생활권역

	최상위 생활권역 및 등급		최하위 생활권역 및 등급	
치안	연수, 남동구	B-	서구	C+
교육환경	연수, 남동구	B-	중, 동, 남구	C+
행정	연수, 남동구	C+	송도, 영종, 청라	C-
경제	연수, 남동구	B-	서구	C+
환경	송도, 영종, 청라	B-	중, 동, 남구	C+
편의시설	부평, 계양구	B-	중, 동, 남구	C+
교통환경	연수, 남동구	B+	송도, 영종, 청라	B-
거주환경	송도, 영종, 청라	B-	중, 동, 남구	C+
의료보건환경	부평, 계양구	B-	송도, 영종, 청라	C+
복지시설	연수, 남동구	C+	송도, 영종, 청라	C-
안전	연수, 남동구	B-	중, 동, 남구	C+

- 인천시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만족 하고 있는 분야는 행정과 복지시설로 나타났다으며, 반대로 가장 만족하고 있는 분야는 교통환경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족수준의 평균이 3.0점(보통)이상은 교통환경>편의시설>안전>거주환경>치안수준>의료보건환경>환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0점미만은 행정>복지시설>여가생활>경제 순으로 나타남
- 시 및 자치구의 행정 및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불만족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인한 인천의 각종 개발사업의 침체와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복지시설에 대한 불만족은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수요 및 관심증가를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음

- 따라서 인천의 경우 신시가지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한 격차완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치안수준¹²⁾

- 치안수준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는 생활권은 연수·남동구(3.15점)로 나타났음. 연수·남동구는 인구 10만인 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낮은 곳으로, 실제 범죄 발생 건수와 치안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비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대로 치안수준에 대해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생활권은 송도,영종,청라(2.85점)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송도(3.23점)와 영종(2.96점)에 비해 만족수준이 낮은 청라(2.63점)의 만족수준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되는데, 청라의 경우, 송도와 영종에 비해 치안수준의 만족수준을 나타내는 길거리, 거주지역내 치안수준, 내집의 범죄로 부터의 안전, 경찰의 순찰활동 등 모든 세부항목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실제 청라의 경우, 송도와 영종 경제자유구역과는 달리 주변이 지방산업단지의 공장지대와 인접하고 있어 치안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실제 남동, 주안, 부평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이 입지해 있는 자치구의 치안수준의 만족도는 동구(2.94점), 서구(2.88점) 등으로 연수구(3.49점), 계양구(3.10점)보다 낮은 것으로 볼 때, 공업지역 주변에 대한 치안수준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도 치안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로등, CCTV 설치 등의 하드웨어적 방안과 더불어 커뮤니티의 형성 및 활성화, 커뮤니티의 지속·유지 등 소프트웨어적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3) 교육환경

- 교육환경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는 생활권은 연수,남동구(3.22점)로 나타났으며, 가장 불만족 하고 있는 생활권은 서구(2.81점)로,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생활권간 만족수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12)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F=1.83, p=0.095)

- 교육환경을 나타내는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공공교육의 수준 및 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은 최상위 생활권(연수, 남동구, 3.25점)과 최하위 생활권(서구, 2.86점)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중 “지역 내 교육 특성상 대학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족 현상은 원도심 지역(중, 동, 남구 및 서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수준과 실제 지표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교육수준 및 환경에 대한 만족수준과 해당 지역의 사설학원수, 지역내 교육특성상 대학진학 가능성과 대학진학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동·남구의 천명당 사설학원 수와 사교육 만족수준은 각각 0.17점과 2.89점인데 반해 신도시 지역인 연수·남동구는 각각 1.28점과 3.23점으로 나타남. 또한, 중, 동, 남구의 대학진학률과 대학진학 가능성의 만족수준은 각각 2.67점과 2.76점인데 반해 신도시 지역인 연수, 남동구는 각각 3.14점과 3.07점으로 나타남
- 지역내 다양한 사설학원의 입지는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 교과 외 학습 등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할 수 있다고 볼 때, 사설학원의 수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자녀의 대학 진학 가능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사설학원에 대한 서비스는 민간영역임으로, 원도심과 같은 지역에서는 대학진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대학 입시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공공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4) 행정 서비스

- 행정서비스 수준은 12개 부문중 가장 낮은 만족수준을 보이는 부문으로, 행정서비스 및 의회활동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족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연수, 남동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송도, 영종, 청라에서 가장 낮은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는 최근들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아파트 가격의 하락,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영종의 에잇시티 개발 전면 백지화)의 중단, 제3연육교 건설 지연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전반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결과라 할 수 있음
- 또한, 원도심 지역인 중, 동, 남구에서도 낮은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도시재생사업 및 정비사업의 해지 및 지연 등 원도심 재생정책에 전반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임
- 행정서비스의 만족수준을 나타내는 세부항목중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지방의회의 활동’이며, 그 뒤를 이어 “시로부터의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 “세금의 효율적

사용“ 등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수준은 행정서비스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인 생활권별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 수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재·개정 건수 등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의 경우,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각각 151.67명과 150.75명으로, 500~600인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수준은 하위권에 머무름. 즉, 이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수준은 통계적 수치와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행정 서비스의 만족수준에 대한 평가는 양적 수준이 아닌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의 양적인 향상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경제환경

- 경제환경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는 생활권은 연수,남동구(3.17점)로 나타났으며, 가장 불만족 하고 있는 생활권은 중,동구(2.84점)로, 앞서 살펴본 교육환경과 마찬가지로 경제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은 생활권간 만족수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향후 지역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대한 만족수준은 최상위 생활권(송도,영종,청라, 3.50점)과 최하위 생활권(중,동,남구, 2.90점)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자리 기회”에 대해 최상위 생활권(송도,영종,청라, 3.15점)과 최하위 생활권(서구, 2.66점)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일자리 기회”에 대해서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제환경에 대한 불만족 현상은 원도심지역(중,동,남구 및 서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경제환경에 대한 만족수준과 실제 지표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경제환경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인구 천인당 종사자수나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의 지표는 경제환경에 대한 만족수준과 별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서구의 인구 천인당 종사자수는 320.69명으로 다른 생활권과 비해 높은 반면, 일자리 기회 만족도는 2.66점으로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나타남. 반면에 부평, 계양구의 경우 천인당 종사자수는 234.95명으로 가장 작은 반면, 일자리 기회 만족수준은 2.83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인천 지역내 경제환경에 대한 격차완화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주

민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고급 일자리의 기회 제공 뿐만 아니라 원도심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확보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환경

- 환경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는 생활권은 연수,남동구(3.13점)로 나타났으며, 가장 불만족 하고 있는 생활권은 중,동,남구(2.82점)로 나타남
- 특히, 중,동,남구의 경우 지역내 공기의 질이나 집 주변 소음 등에 가장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지역에 국가산단, 지방산단, 인천항 배후지역 등 공업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화물차 등으로 인한 대기의 질 및 소음문제에 대해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시설의 개선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음

(7) 편의시설

- 백화점, 대형매장, 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는 생활권은 연수,남동구(3.29점)로 나타났으며, 가장 불만족 하고 있는 생활권은 서구(2.79점)로 나타남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시가지인 연수,남동구와 원도심인 중,동,남구와 서구간 격차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과 문화시설의 경우, 아직 주택 위주로 개발된 송도,영종,청라에서 가장 낮은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임. 이는 일반적으로 주택개발이 완료된 이후 상업, 문화 등 도시기능이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점차적으로 만족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서구의 경우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수준이 2.27점으로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시설의 설치 및 서비스 수준의 개선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음
- 한편, 편의시설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10만인당 백화점 및 대형마트수, 10만인당 문화시설수의 경우 원도심이 양적인 시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수준은 떨어지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민들은 편의시설의 양적인 수보다는 편의시설의 규모 및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편의시설에 대한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8) 교통환경

- 교통환경에 대해서는 다른 부문에 비해 가장 높은 만족수준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생활권은 연수,남동구(3.42점)이며,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생활권은 서구(2.96점)로 나타남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지하철 이용 편의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3점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공항철도 1개역(검암역)이 입지하고 있는 서구의 경우 가장 낮은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인천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면 만족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의 경우 지하철 이용 편의성 및 버스 이용 편의성 등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남¹³⁾.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중교통 노선의 확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9) 거주환경

- 거주환경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는 생활권은 송도,영종,청라(3.18점)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수,남동구(3.16점)으로 나타남. 거주환경에 대해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생활권은 중,동,남구(2.94점)로 나타남. 즉, 신시가지와 원도심간 거주환경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원도심에서 가장 불만족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집의 생활비용의 적절성” 및 “동네의 경관”으로, 이는 생활비용 수준과 비교할 때 거주환경 및 경관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동네의 경관”의 만족수준은 중,동,남구가 2.88점인데 반해 송도,영종,청라는 3.70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반대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수준은 중,동,남구가 3.14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어 오래 시간에 걸친 이웃과의 유대관계 등이 중요하다는 것임
- 따라서 거주환경에 대한 격차완화의 경우,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경관개선 및 지역공동체의 회복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13)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중 청라의 지하철 이용 편의성이 1.67로 극히 낮은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7호선 연장이 아직 검토중에 있고, 지하철 노선이 없어 지하철 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10) 의료보건환경

- 의료보건환경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는 생활권은 연수, 남동구(3.18점)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평, 계양구(3.12점)으로 나타남.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생활권은 송도, 영종, 청라(2.48점)로 나타남. 즉, 이는 앞서 살펴본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 수준과 마찬가지로 향후 의료시설의 입지가 예상되는 바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송도를 제외한 영종, 청라에서 가장 불만족 하고 있는 것은 ‘지역내 병원의 신뢰성’과 ‘지역 내 병원종류와 개수’를 들고 있음. 이는 현재 송도에서는 개인병원이 다수 입지하여 있고 종합병원의 입지가 결정된 반면, 영종과 청라에서는 의료시설의 입지가 극히 미비하여 이에 따른 불만족의 결과라고 판단됨
- 따라서 영종, 청라지역에서의 종합병원의 유치 등 의료시설의 확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1) 복지시설

- 복지시설의 경우, 앞서 살펴본 행정에 대한 만족수준과 함께 가장 낮은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는 부문임
- 상대적으로 만족수준이 높은 생활권은 연수, 남동구(2.94점)로 나타났으며, 만족수준이 가장 낮은 생활권은 송도, 영종, 청라(2.50점), 서구(2.67점)로 나타남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수준이 가장 낮은 나타남
- 따라서 육아,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 대한 확충 및 서비스 수준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복지시설의 경우 해당 생활권의 인구특성에 맞게 확충이 요구되며, 특히 자치구간 또는 생활권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설치 및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 안전

-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해는 안전환경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는 생활권은 연수, 남동구(3.24점)로 나타났으며, 가장 불만족 하고 있는 생활권은 송도, 영종, 청라(2.83점)로 나타남. 그러나 송도, 영종, 청라의 경우 안전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은 청라가 2.57점으로 극히 나타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석이 주의가 요구됨
- 이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부터의 안전”에 대한 만족수준은 해안 및 침수지역 등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바다를

매립하여 개발된 송도, 청라의 경우 각각 2.80점, 2.82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홍수 및 태풍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나타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임

- 화력발전소와 정유공장 등이 다수 입지하여 유해화학물 등에 취약한 서구, 청라와 동구의 경우는 “화재, 유해화학물 등 인적재해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만족수준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원도심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동네의 교통안전 환경”과 “어린이 안전 환경”의 경우, 중,동,남구에서 낮은 만족수준(각각 2.78점, 2.73점)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신시가지인 청라에서 낮은 만족수준(각각 2.45점, 2.55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임. 청라지역에 대한 어린이 교통대책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해안지역에 대한 홍수, 태풍 등 재해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방재기능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대전광역시

1) 주요 지표를 통한 격차실태

- 기본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인구측면에서 대전은 확연히 격차가 감소. 동구의 연평균 인구증가율 증가와 서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노령화지수의 격차 개선
- 산업 및 고용 경쟁력을 보여주는 총사업체종사자비율에 있어서의 뚜렷한 격차 감소
- 문화공간측면에서의 뚜렷한 격차 감소
- 그 외에 기초 지역의 자립적 정책추진 능력을 보여주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0.45로 타 지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격차수준을 보이고 있었음
- 도로포장율은 거의 100%에 근접
- 전반적으로 대전의 지역내 격차는 균형발전사업추진이후 인구측면, 산업경제측면, 문화공간측면, 도시인프라 측면 등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치단체 재정력지수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격차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2-37] 대전광역시 주요 지표

행정 구역	연평균 인구변화		노령화 지수		소득세할 주민세	총사업체 종사자비율		도로 포장율		문화 공간 ¹⁴⁾	
	'00~'05	'05~'10	'05	'10	'10	'07	'10	'07	'10	'07	'10
대전	9.4	8.8	34.6	51.1	165,407,335	28.9	32.4	100	100	70	98
동구	-6.9	6.6	58.3	78.0	12,803,822	22.4	25.9	100	100	4	11
중구	4.5	-4.0	50.1	76.3	21,128,565	28.7	31.1	100	100	30	26
서구	8.2	-6.3	27.2	43.3	55,062,045	26.4	30.1	100	100	21	31
유성구	9.0	9.3	23.0	28.7	43,969,470	34.0	38.1	100	100	13	17
대덕구	-6.5	-7.1	29.5	50.0	32,443,433	36.3	39.9	100	100	2	13

자료> 1) 통계청 >> 지역별통계 >> 인구·가구 >> 인구총조사 (<http://kosis.kr/>, 2012.09.26 검색)
2) 대전시 2011년도 통계연보

[표 2-38] 대전광역시 주요지표의 변이계수의 변화추이

인구		노령화지수		총사업체종사자비율		문화공간	
'05	'10	'05	'10	'07	'10	'07	'10
0.3860	0.3389	0.3706	0.3468	0.1706	0.1580	0.7491	0.3920

14) 문화시설 : 공공공연장 + 민간공연장 + 영화상영관 + 미술관 + 화랑

6. 경기도

- 『수도권 주민 안전사회 인식조사 및 개선방향(2013. 4),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도시특성별로 ‘신도시’, ‘도시지역’, ‘중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으로 구분함
- 지역의 특성 및 자연·물리적 환경, 공간구조,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13개 생활권역으로 구분



[그림 2-45] 경기도 생활권역의 구분

[표 2-39] 경기도 생활권역의 구분

생활권역	해당 시·군
1	성남시, 용인시
2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3	부천시, 광명시
4	안산시, 시흥시
5	구리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6	김포시
7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8	광주시, 하남시
9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10	가평군, 양평군
11	이천시, 여주시
12	평택시, 안성시
13	고양시, 파주시

1) 주요 지표를 통한 격차실태

2) 경기도 지역 내 격차실태 종합 및 시사점

(1) 총괄

- 경기도는 모든 분야의 만족도에서 이천시·여주시가 최하위 생활권으로 나타났으며, 최상위 생활권역은 의료보건환경과 안전을 제외하고 고양시·파주시가 최상위 생활권으로 나타나 대체로 고양시·파주시와 이천시·여주시 간 격차양상을 보임



[그림 2-46] 경기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권역과 가장 낮은 권역

[표 2-40] 경기도 항목별 만족도 최상위 생활권역과 최하위 생활권역

	최상위 생활권역 및 등급		최하위 생활권역 및 등급	
치안	고양시, 파주시	B+	이천시, 여주시	C-
교육환경	고양시, 파주시	B-	이천시, 여주시	D+
행정	고양시, 파주시	B-	이천시, 여주시	D+
경제	고양시, 파주시	B-	이천시, 여주시	C-
환경	고양시, 파주시	A-	이천시, 여주시	B-
편의시설	고양시, 파주시	B+	이천시, 여주시	D-
교통환경	고양시, 파주시	A-	이천시, 여주시	D-
거주환경	고양시, 파주시	B+	이천시, 여주시	C+
의료보건환경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B-	이천시, 여주시	D+
복지시설	고양시, 파주시	C+	이천시, 여주시	D-
안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B+	이천시, 여주시	C+

- 경기도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분야는 전철/지하철 서비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교통SOC 분야는 도로분야 보다는 전철/지하철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투자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도는 서울시나 인천시와는 달리 버스이용편의 대한 주민 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버스이용편의의 개선이 수도권 타시도에 비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의 버스이용 불편은 대부분 통근, 모임 등의 이유로 서울시로의 광역통행 수요가 높은 반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버스 서비스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타 시도와 차별화 되는 또 다른 한가지는 경기도 주민은 문화시설에 대해 부족함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화시설은 대체로 공연, 전시 등이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문화적 기회의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됨

(2) 치안수준

- 경기도 주민은 치안분야에서 경찰의 순찰활동과 경찰의 사건대응 수준에 대해 타 분야 비해 만족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찰들이 격무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치안업무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치안서비스에 대해 만족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은 경찰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경찰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민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인식을 주민에게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경기도에서 치안 서비스에 만족수준이 낮은 지역은 도시지역보다는 도농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과거와 같이 농촌지역 또는 한적한 시골이 범죄로부터 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더 이상 통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지역 중에서는 안산시와 시흥시와 같이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과 광주시, 하남시, 김포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소규모 공장이 산재한 지역에서 치안 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범죄 발생이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기 보다 산재한 공장들과 그와 관련하여 정리되지 않는 도시경관이 도시 치안 인식에 부정적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 내 치안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볼수 있는 ‘길거리, 거주지역내’ 치안에 대해 낮은 만족수준을 보인 이천시, 여주시 권역,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권역, 안산시, 시흥시 권역 등은 주민의 치안서비스 만족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치안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교육환경

- 교육환경에 있어서 경기도 주민들은 사교육 수준과 지역내 대학 진학 가능성에 대한 만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생활권역별로는 이천시, 여주시 권역의 교육환경 만족수준이 가난 낮게 나타났으며 가평군 양평군 권역, 김포시 권역 등도 낮게 나타나서 아무래도 도농지역의 교육환경 만족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해 많이 낮게 나타났음
- 이와 같이 도농지역의 불리한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도시지역내 기숙형 고등학교가 확충되고 도농지역의 학생들이 이들 학교로의 진학 기회가 보장된다면 도농지역내 거주하고자 하는 가구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천시, 여주시 권역은 타지역에 비해 특히 공교육 및 사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교육환경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권역으로 나타남

(4) 행정서비스

-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은 도농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도시지역, 도농지역 모두 타 분야에 비해 만족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만족수준과 내가 낸 세금의 효율적 사용 여부에 대한 만족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과 낭비적 세금에 대한 뉴스를 신문과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접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시 또는 구청의 행정서비스는 모든 생활권역에서 지방의회 활동보다는 높은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도농복합지역에서는 도시지역보다 다소 만족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활권역별로는 부천시, 광명시 권역과 고양시, 파주시 권역이 타지역에 비해 행정 서비스 만족수준이 대체로 높고 김포시 권역과 이천시, 여주시 권역이 낮게 평가되었음

(5) 경제환경

- 경기도 시군은 일반적으로 향후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으로 나타남에 반해 일자리 기회와 지역내 다양한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는 만족수준이 낮게 나타남
- 특히 고양시와 파주시 권역에서는 향후 지역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가평군, 양평군 권역과 이천시, 여주시 권역을 제외하고는 지역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를 생활권역 별로 비교해 보면 평택시, 안성시 권역, 안산시, 시흥시 권역, 김포시 권역, 이천시 여주시 권역 등은 실질적으로 인구당 종사자 수가 많지만 일자리 기회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현실상황과 인식상황이 다소 차이가 남
- 이러한 현상은 지역내 종사자가 상당부분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내 주민들이 일자리에 대해 충분히 실감을 못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됨
- 주민 1인당 지방세의 경우 도농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 소득에 대한 주민 만족수준은 도시지역보다 도농지역이 오히려 낮은 걸로 조사되어 도시지역의 1인당 소득이 더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환경

- 경기도 주민들은 대체로 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지역내 대기질과 녹지율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도 도농지역 못지않게 또는 더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집주변의 소음에 대해서는 만족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서 주거밀집 지역 중심으로 소음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동안 소음은 다른 환경문제와는 달리 다소 무시되어 온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층간소음을 비롯해서 집 주변 다양한 소음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

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 특히 유흥지역, 공장지역 등이 인접한 주거지에 대해서는 소음기준의 강화와 단속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녹지율의 해석에서는 주의를 요하는데 가평군, 양평군 권역과 이천시, 여주시 권역 등의 경우 녹지율이 낮음에도 지역내 녹지율 만족수준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녹지율 산정을 도시지역내 녹지율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녹지율이 지역현황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7) 편의시설

- 경기도 주민은 전반적으로 경기도내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상대적으로 공원, 오픈스페이스,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생활권역별로 살펴보면 신도시가 입지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권역과 고양시, 파주시 권역 그리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가평군과 양평군 권역에서는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남
- 하지만 이천시, 여주시 권역과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권역에서는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으로는 김포시 권역, 가평군, 양평군 권역, 이천시, 여주시 권역 등으로 나타났음
-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권역과 고양시 파주시 권역 등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문화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8) 교통환경

- 이천시, 여주시 권역은 교통환경 전반에 대해 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천시, 여주시 권역은 현재 건설중인 성남-여주선이 완공이 되면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외 보행환경, 주차환경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 지하철 이용편의성 부분은 아직 전철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김포시, 광주시, 하남

시, 이천시, 여주시 등에서 불만수준이 높게 나타남

- 버스이용 편의성은 상대적으로 지하철에 비해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김포시, 이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보행환경이 열악하게 인식되는 곳은 광주시, 하남시 권역 가평군, 양평군 권역, 이천시, 여주시 권역 등으로서 이들 지역에서는 보도확보와 보행축 연결 등 보행편의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9) 거주환경

- 경기도 주민은 주거비용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거주환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네의 청결성에 대한 만족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은 이천시, 여주시 권역,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권역 등으로서 이들 지역은 지역내 청결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주거생활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성남시, 용인시 권역,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권역, 고양시, 파주시 권역 등 실질적으로 타 지역보다 주거비용이 비싼 지역에서는 오히려 주거생활비용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례가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김포시 권역, 광주시 하남시 권역,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권역 등에서는 생활비용이 비싸다고 응답한 사례가 많았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지불하는 생활비용이 생활서비스 대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생활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임
- 이웃과의 관계는 대체로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평군, 양평군 권역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만족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부적절한 시설로 부터의 쾌적한 정도는 공장이 많은 안산시, 시흥시 권역, 이천시, 여주시 권역, 평택시, 안성시 권역 등에서 만족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10) 의료보건환경

- 경기도 주민들은 지역내 병원의 신뢰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천시, 여주시 권역을 비롯한 도농복합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짐
- 지역내 보건소의 신뢰성은 지역내 병원의 신뢰성이 낮은 곳에서 오히려 병원보다는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는 경향을 보임

(11) 복지시설

- 제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 주민들의 만족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간 복지관련 예산도 많이 증액되었고 도정의 주요 목표가 도민의 복지향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주민 만족수준이 타 시설 및 서비스에 비해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음

(12)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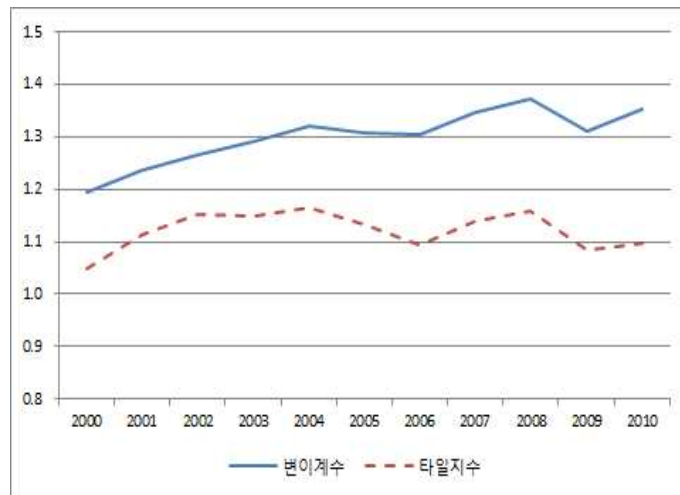
- 경기도 주민은 안전분야 대해서는 타시도에 비해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린이의 안전환경에 대해서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 유괴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7.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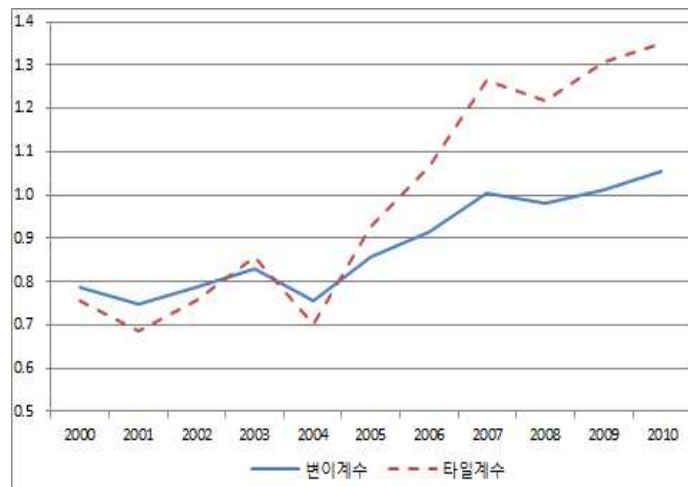
1) 주요 지표를 통한 격차실태

(1) 경제력 격차 실태 분석

-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와 타일지수(Theil Index)를 이용
- 지역내총생산 총액을 이용하여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측정한 경우
 - 측정된 격차지수의 크기는 차이가 있으나, 두 지수 모두 전반적으로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제약으로 2000~2010년 기간만을 대상으로 격차지수를 측정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정확한 추세를 포착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기는 하나, 지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강원도내 사군 경제력 격차가 지난 10년간에 걸쳐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이용하여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측정한 경우
 - 측정된 격차지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볼 수 있으나, 지역내총생산 총액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2004년까지는 변이계수와 타일지수 모두 연도별로 약간씩의 등락세를 보이기는 하나 큰 변화가 없어 지역 간 격차가 그리 심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2005년부터 두 지수 모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이용자료 제약으로 정확한 추세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기는 하나, 1인당 지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강원도 내 사군 경제력 격차가 지난 2005년 이후부터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47] 경제력 격차 추이: 지역내 총생산 이용



[그림 2-48] 경제력 격차 추이: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이용

[표 2-41] 경제력 격차지수 측정결과

	지역내총생산 이용		1인당 지역내총생산 이용	
	변이계수	타일계수	변이계수	타일계수
2000	1.195	1.047	0.786	0.755
2001	1.237	1.113	0.748	0.688
2002	1.267	1.151	0.787	0.757
2003	1.291	1.149	0.830	0.855
2004	1.319	1.164	0.755	0.703
2005	1.307	1.134	0.857	0.928
2006	1.306	1.093	0.917	1.065
2007	1.348	1.140	1.003	1.266
2008	1.373	1.159	0.981	1.219
2009	1.311	1.083	1.013	1.305
2010	1.352	1.096	1.056	1.348

주 : 타일계수는 지역내총생산을 이용한 경우는 편의상 원지수 × 10,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이용한 경우는 원지수 × 100으로 환산함.

(2) 지역격차 지표 분석

■ 경제 분야

- 1인당 지역대총생산은 정선군이 2,939만 원으로 가장 높고, 속초시가 1,219만 원으로 가장 낮아 최고지역이 최저지역에 비해 2.4배 높은 기록을 보임
- 고용률은 평균적으로는 도시지역(51.9%)에 비해 농촌지역(53.5%)이 높은 기록을 보이고 있음. 인제 군이 62.0%로 가장 높고, 횡성군이 43.5%로 가장 낮은 기록을 보임
- 재정자립도는 시 지역이 다소 나은 모습이나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인 실정임. 태백시의 재정자립도가 31.3%로 가장 높고, 철원군이 10.7%로 가장 낮은 기록을 보임
- 인구 천 명 당 산업종사자 수는 양양군이 4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철원군은 247명으로 가장 낮은 기록을 보였음

[표 2-42] 경제적 영역 지표 (단위: 만원, %, 명)

	1인당 GRDP(2010)	고용률(2012)	재정자립도(2013)	인구 천명 당 산업종사자수(2011)
춘천시	1,588	50.5	27.9	332
원주시	1,628	50.7	26.7	331
강릉시	1,500	52.2	21.3	339
동해시	2,195	50.9	17.5	328
태백시	1,435	54.5	31.3	330
속초시	1,219	53.5	19.7	300
삼척시	2,133	51.3	17.1	326
홍천군	2,489	50.8	15.9	293
횡성군	2,458	43.5	18.6	324
영월군	2,296	50.3	12.7	338
평창군	2,271	49.8	14.3	380
정선군	2,939	51.3	22.9	398
철원군	1,966	57.4	10.7	247
화천군	2,872	53.9	11.8	250
양구군	2,526	55.8	15.2	286
인제군	2,947	62.0	11.1	289
고성군	2,137	59.5	11.8	307
양양군	2,673	54.6	12.2	400

■ 사회복지 분야

-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원주시가 29.4%로 가장 높고, 양구군은 10.7%로 가장 낮은 기록을 보임. 대체로 시 지역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높고, 군 지역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양양군이 3.76%로 가장 높고, 원주시가 1.78%로 가장 낮음. 속초, 삼척, 고성, 양양 등 영동지역과 화천, 양구 등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원주시가 24.9개로 가장 많고, 정선군은 9.2개로 최하를 기록하여 최고 지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노인 천 명 당 여가시설 수는 양양군이 15.2개로 가장 많으며, 속초시는 5.1개로 최하를 기록함. 대체로 고령화율이 높은 군지역이 상위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인구 천 명 당 등록 자원봉사자는 화천군이 2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제군은 83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함

[표 2-43] 사회복지 영역 지표 (단위: %, 개, 명)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율 (2011)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2011)	유아 천 명 당 보육시설 수(2012)	노인 천 명 당 여가시설 수 (2012)	인구 천 명 당 등록자원봉사자 (2011)
춘천시	24.6	2.53	22.6	6.7	135.1
원주시	29.4	1.78	24.9	7.9	148.6
강릉시	24.5	2.18	21.9	6.9	163.9
동해시	23.3	2.36	18.1	5.6	172.3
태백시	15.9	2.30	11.3	8.0	188.6
속초시	28.3	3.26	20.5	5.1	159.3
삼척시	15.2	3.41	18.4	12.4	126.6
홍천군	14.8	2.33	17.3	11.0	110.3
횡성군	14.1	2.71	20.4	13.7	144.1
영월군	16.1	2.71	13.6	14.0	179.4
평창군	12.5	2.21	13.9	14.1	166.8
정선군	14.1	2.38	9.2	12.8	151.4
철원군	14.2	2.59	12.5	11.0	156.3
화천군	11.5	3.27	15.1	12.6	266.4
양구군	10.7	3.42	13.3	17.7	99.9
인제군	14.8	2.50	12.7	11.5	82.9
고성군	12.9	3.11	15.4	13.3	147.2
양양군	15.2	3.76	12.9	15.2	132.0

■ 교육·문화 분야

- 초·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정선군이 7.9명으로 가장 좋은 기록을 보였고, 속초시가 17.1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았음. 대체로 군지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었고, 시지역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 천 명 당 사설학원 수는 원주시가 2.1개로 가장 많았고, 고성군은 0.7개로 최하위를 기록함. 대체로 시지역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인구 십만 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소규모 박물관이 많은 영월군이 52.2개로 1위를 기록하였고, 원주시가 3.4개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대체적으로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인구 당 문화기반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 만 명 당 공공체육시설은 횡성군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속초시는 5.1개로 최하위를 기록함.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인구 당 공공체육시설이 많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음

[표 2-44] 교육·문화 영역 지표 (단위: %, 명, 개)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2011)	인구 천 명 당 사설학원 수(2011)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2011)	인구 만명 당 공공체육시설 (2011)
춘천시	16.3	1.7	7.3	7.0
원주시	16.6	2.1	3.4	6.6
강릉시	15.7	2.0	9.7	8.9
동해시	15.7	1.7	6.3	6.3
태백시	11.4	1.4	12.0	11.2
속초시	17.1	1.8	8.4	5.1
삼척시	10.7	1.3	12.5	5.3
홍천군	10.1	1.3	7.2	6.9
횡성군	9.5	0.9	6.8	21.0
영월군	8.3	0.9	52.2	15.9
평창군	9.1	1.0	13.8	7.3
정선군	7.9	1.0	12.4	12.7
철원군	12.1	1.3	12.5	9.2
화천군	8.6	1.1	24.1	15.6
양구군	9.4	1.3	31.4	18.8
인제군	9.5	1.1	18.8	10.9
고성군	7.8	0.7	36.6	12.0
양양군	9.2	0.9	14.3	15.7

■ 의료·보건 분야

- 인구 천 명 당 의료인력 수는 대학병원이 입지하고 있는 춘천과 원주가 높은 기록을 보이고 있음. 반면 군지역들은 대체로 낮은 기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은 인구 천 명 당 의료인력이 0.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인구 천 명 당 의료기관 수는 거의 대부분 기관이 1개 내외로 대동소이한데, 속초시가 1.3개로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음
-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철원군이 58.2%로 가장 높았고, 평창군은 33.0%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특이한 점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강원북부 접경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임
- 음주율은 원주시와 평창군이 63%로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고, 철원군이 43%로 가장 낮았음
- 흡연율은 전체지역이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태백시가 30%로 가장 높았고, 동해시와 횡성군이 21%로 가장 낮은 기록을 보였음

[표 2-45] 의료보건 영역 지표 (단위: 명, 개, %)

	인구 천 명 당 의료인력 수 (2012)	인구 천 명 당 의료기관 수 (2011)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2012)	음주율 (2012)	흡연율 (2012)
춘천시	2.8	1.1	46.3	59	22
원주시	2.9	1.2	37.2	63	29
강릉시	2.8	1.0	50.1	55	23
동해시	1.6	1.0	40.9	58	21
태백시	1.5	0.9	38.7	59	30
속초시	2.0	1.3	40.7	55	26
삼척시	1.3	1.0	38.1	57	25
홍천군	1.8	1.2	35.6	52	25
횡성군	1.3	1.1	35.9	52	21
영월군	1.5	1.0	43.5	52	26
평창군	1.3	1.2	33.0	63	23
정선군	1.2	1.0	38.9	57	25
철원군	1.3	0.9	58.2	43	25
화천군	1.4	1.0	53.7	54	26
양구군	1.5	0.9	50.7	57	27
인제군	1.4	1.0	53.4	54	25
고성군	0.9	1.0	48.1	52	23
양양군	1.0	0.9	38.8	51	26

■ 생활기반 및 환경 분야

- 1인당 풍수해 피해액은 21.8만 원을 기록한 화천군이 가장 많았고, 0원을 기록한 영월군이 가장 적었음. 양구군과 인제군 등이 높은 기록을 보인 반면 태백시와 원주시 등은 2011년 기준으로 풍수해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상수도보급률은 99.4%를 기록한 속초시가 가장 높았고, 60.7%를 기록한 화천군이 가장 낮았음. 대체적으로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높은 기록을 보이고 있음
- 하수도보급률도 98.1%를 기록한 속초시가 가장 높았고, 37.3%를 기록한 화천군이 가장 낮았음. 상수도보급률과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높은 기록을 보이고 있음
- 도로 포장률은 강릉시가 91.5%로 가장 높았고, 동해시가 47.9%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 주차환경은 대부분의 지역이 자동차 1대당 주차면수가 1 미만의 기록을 보이고 있으며, 춘천시와 정선군이 1.2면으로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음

- 인구 천명 당 범죄발생 건수는 강릉시가 82.5로 가장 높았고, 양구군이 16.2로 가장 낮았음. 대체로 유명 관광지가 있는 지역의 인구 당 범죄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자동차 천 대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속초시가 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구군이 6.3건으로 가장 낮은 기록을 보임
- 인구 천 명 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태백시가 50.9㎡로 가장 넓었고, 횡성군은 5.5㎡로 가장 낮은 기록을 보였음

[표 2-46] 생활기반 및 환경 영역 지표 (단위: 천원, %, 대, 천㎡)

	1인당 풍수해 피해액 (2011)	상수도 보급률 (2011)	하수도 보급률 (2011)	도로 포장률 (2012)	주차 환경 (2011)	인구 천 명 당 범죄발생 건수 (2011)	자동차 천 대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2012)	인구 천 명 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2012)
춘천시	62.6	93.6	92.0	77.7	1.2	30.4	15.5	13.7
원주시	0.6	87.5	86.7	83.2	1.0	64.4	16.3	24.6
강릉시	62.2	92.1	87.9	91.5	1.0	82.5	11.6	39.0
동해시	38.1	98.8	95.6	47.9	0.7	58.9	10.9	43.0
태백시	0.1	98.0	81.3	64.1	0.4	20.0	9.6	50.9
속초시	1.4	99.4	98.1	54.6	0.9	62.8	16.5	10.6
삼척시	95.9	87.3	82.9	72.9	1.1	30.9	11.1	24.5
홍천군	21.1	66.6	75.0	87.3	0.1	55.7	10.9	19.9
횡성군	3.7	65.7	51.9	82.1	0.4	37.7	8.4	5.5
영월군	0.0	78.7	70.1	77.2	0.4	21.9	10.0	29.6
평창군	1.2	76.1	65.8	84.2	0.8	37.8	10.6	33.5
정선군	2.9	78.0	77.7	76.4	1.2	38.5	7.5	47.6
철원군	4.9	84.5	48.6	67.3	0.4	44.7	8.8	26.9
화천군	217.5	60.7	37.3	77.8	0.7	24.5	8.9	32.0
양구군	148.5	76.0	83.1	76.6	0.5	16.2	6.3	30.4
인제군	142.4	73.1	81.7	81.7	0.3	26.4	7.1	35.0
고성군	1.0	88.8	88.3	51.6	0.9	28.0	15.3	18.6
양양군	30.5	81.4	54.7	70.5	0.8	-	13.1	9.0

주 : 주차환경은 등록 자동차 1대 당 주차장 면수임.

(3) 주민인식 조사결과 분석

■ 조사개요

-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 500명 조사
 - 인구비율과 최소 조사 표본을 감안하여 시·군별로 조사대상 선정
- 전문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원이 조사대상을 1: 1 면접하여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

[표 2-47] 조사대상 기본사항 분석결과 (단위: 명, %)

		조사대상	비율
전 체		500	100.0
거주권역	북부지역	159	31.8
	남부지역	167	33.4
	해안(영동)지역	174	34.8
도농구분	도시지역	267	53.4
	농촌지역	233	46.6
성 별	남 자	250	50.0
	여 자	250	50.0
연 령	20대	65	13.0
	30대	82	16.4
	40대	104	20.8
	50대	111	22.2
	60대	109	21.8
	70세 이상	29	5.8
학력수준	고졸이하	322	64.4
	전문대·대학교 졸업	171	34.2
	대학원 졸업 이상	7	1.4
소득수준	99만원 미만	53	10.6
	100만원-200만원 미만	109	21.8
	200만원-300만원 미만	126	25.2
	300만원-400만원 미만	86	17.2
	400만원-500만원 미만	64	12.8
	500만원 이상	62	12.4
직 업	행정/사무/관리직	112	22.4
	판매직	73	14.6
	서비스직	98	19.6
	생산/운수/일반노무직	55	11.0
	농업/어업/수산업	26	5.2
	주부	73	14.6
	무직	36	7.2
	기타(군인, 학생 등)	27	5.4

주 : 1. 북부지역은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남부지역은 원주, 횡성,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영동지역은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임.
 2.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읍·면 지역임.

■ 총괄적 만족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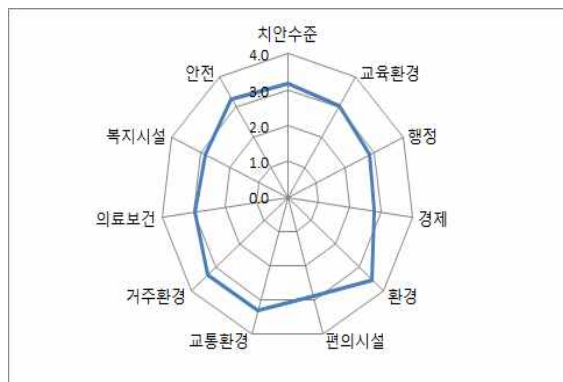
- 분석은 평균점수를 이용하며, 3개 권역과 도·농별로 구분하여 실시
- 3개 권역은 생활권 및 경제권을 기준으로 구분
 - 북부지역 :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 6개 시·군
 - 남부지역 :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등 6개 시·군
 - 영동지역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등 6개 시·군
- 도·농 구분은 동은 도시지역으로, 읍·면은 농촌지역으로 구분

■ 권역별 만족도 순위

- 전체적으로는, 환경 > 거주환경 > 안전 > 치안수준 > 교통 환경 > 교육환경 > 의료·보건 > 편의시설 > 복지시설 > 행정 > 경제 순
- 북부지역은, 환경 > 거주환경 > 교통 환경 > 안전 > 치안수준 > 교육환경 > 의료·보건 > 편의시설 > 행정 > 복지시설 > 경제 순
- 남부지역은, 환경 > 안전 > 거주환경 > 치안수준 > 교통 환경 > 교육환경 > 편의시설 > 의료·보건 > 복지시설 > 행정 > 경제 순
- 영동지역은, 환경 > 거주환경 > 치안수준 > 안전 > 교통 환경 > 의료·보건 > 교육환경 > 편의시설 = 복지시설 > 행정 > 경제 순



[그림 2-49] 전체 지표별 만족도



[그림 2-50] 북부지역 지표별 만족도



[그림 2-51] 남부지역 지표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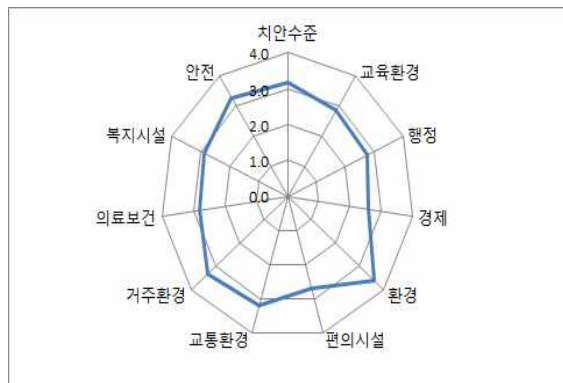
[그림 2-52] 영동지역 지표별 만족도

■ 도농구분별 만족도 순위

- 도시지역은, 환경 > 거주환경 = 안전 > 치안수준 > 교통 환경 > 교육환경 > 의료·보건 > 편의시설 > 복지시설 > 행정 > 경제 순
- 농촌지역은, 환경 > 거주환경 > 안전 > 교통 환경 > 치안수준 > 복지시설 > 교육 환경 > 의료·보건 > 행정 > 편의시설 > 경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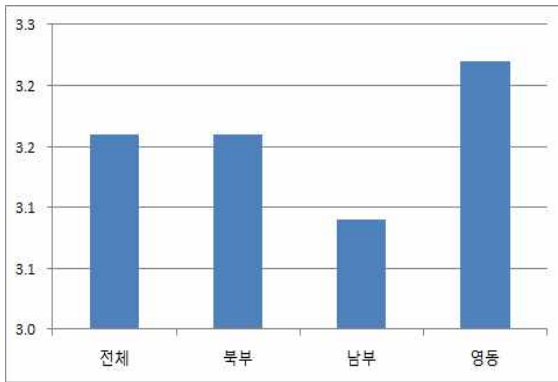
[그림 2-53] 도시지역 지표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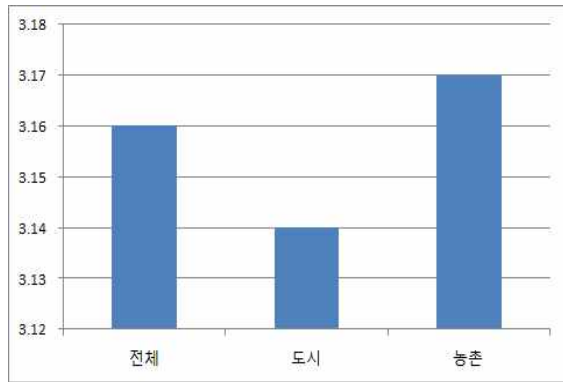
[그림 2-54] 농촌지역 지표별 만족도

■ 지표별 만족도 지역 순위

- 치안수준
 - 권역별로는, 영동 > 북부 > 남부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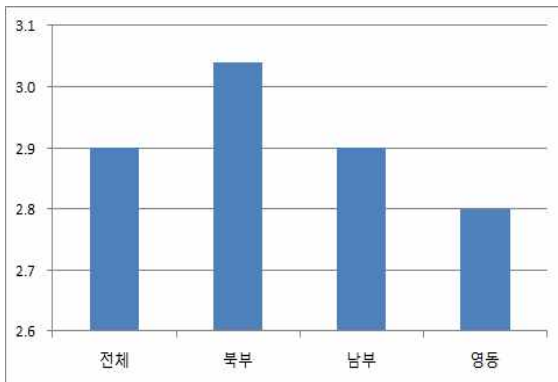
[그림 2-55] 권역별 치안수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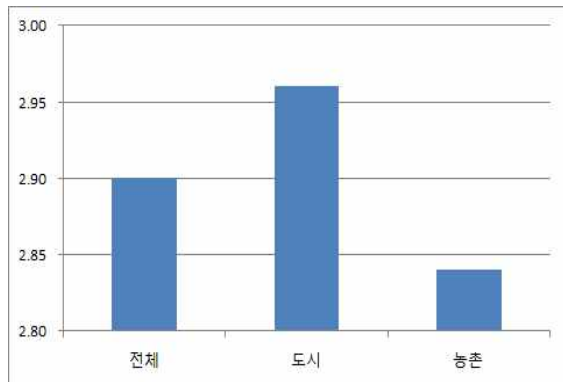
[그림 2-56] 도농별 치안수준 만족도

○ 교육환경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도시 > 농촌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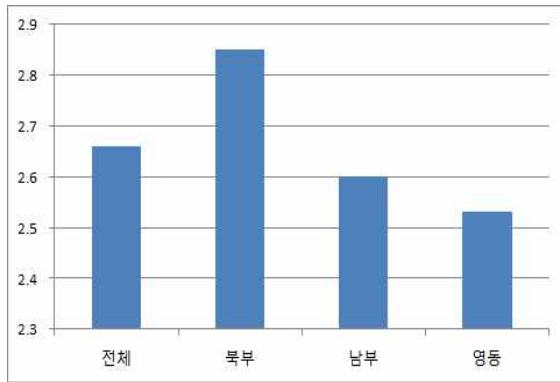
[그림 2-57] 권역별 교육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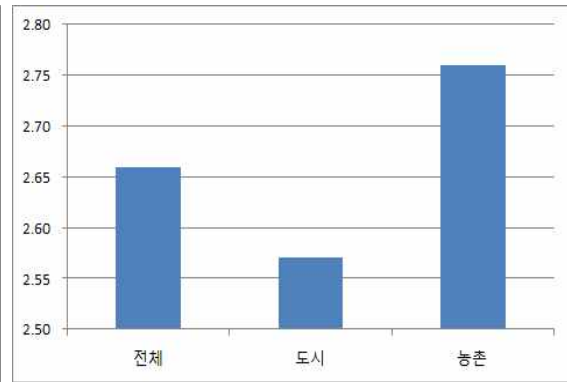
[그림 2-58] 도농별 교육환경 만족도

○ 행정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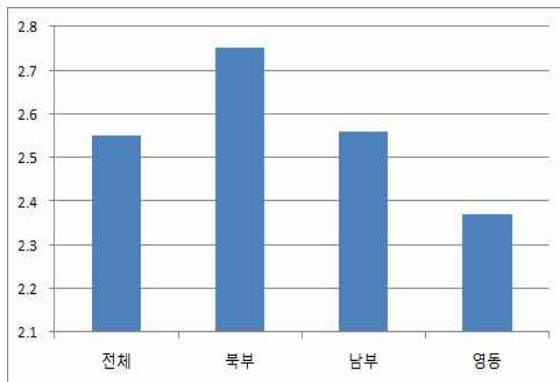
[그림 2-59] 권역별 행정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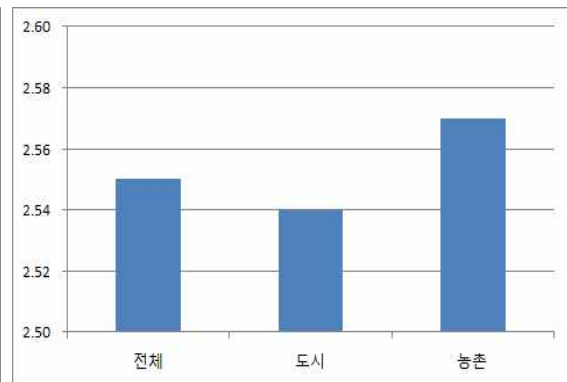
[그림 2-60] 도농별 행정서비스 만족도

○ 경제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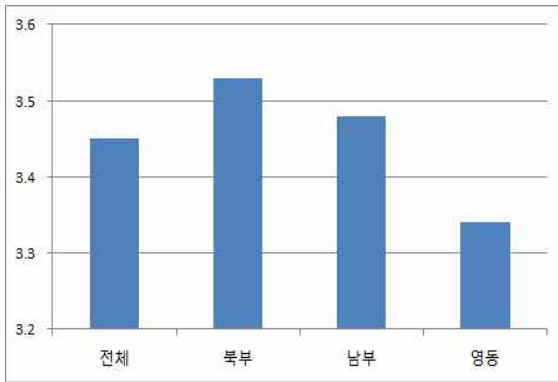
[그림 2-61] 권역별 경제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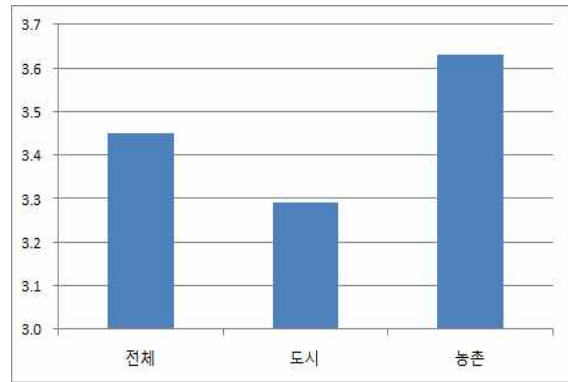
[그림 2-62] 도농별 경제환경 만족도

○ 환경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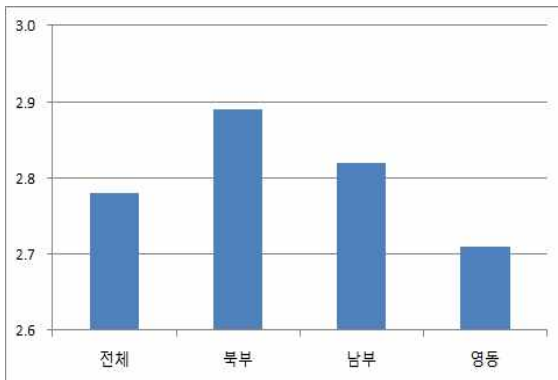
[그림 2-63] 권역별 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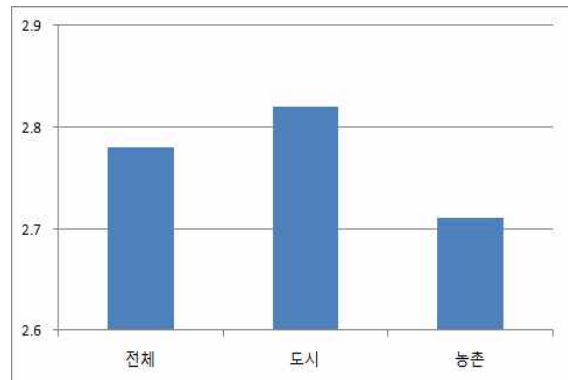
[그림 2-64] 도농별 환경 만족도

○ 편의시설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도시 > 농촌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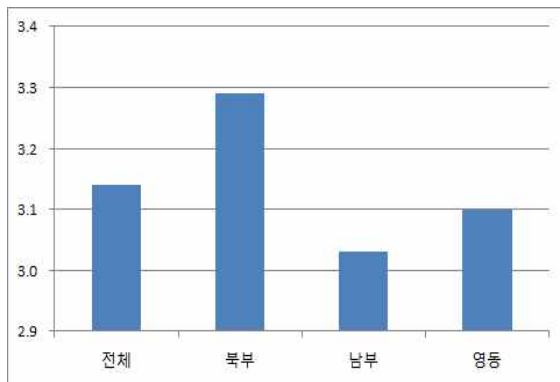
[그림 2-65] 권역별 편의시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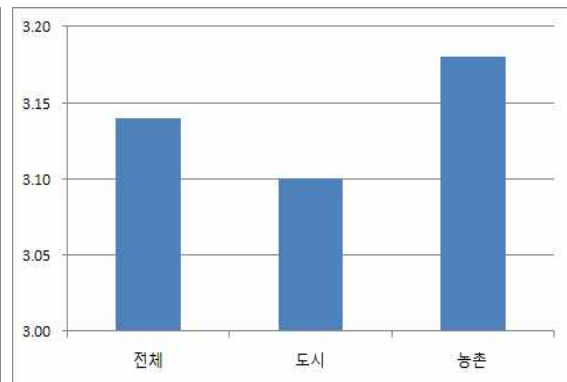
[그림 2-66] 도농별 편의시설 만족도

○ 교통 환경

- 권역별로는, 북부 > 영동 > 남부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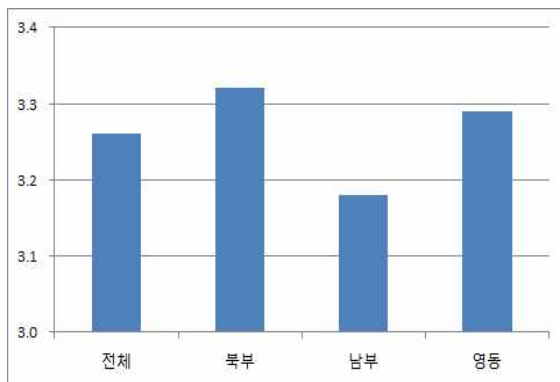
[그림 2-67] 권역별 교통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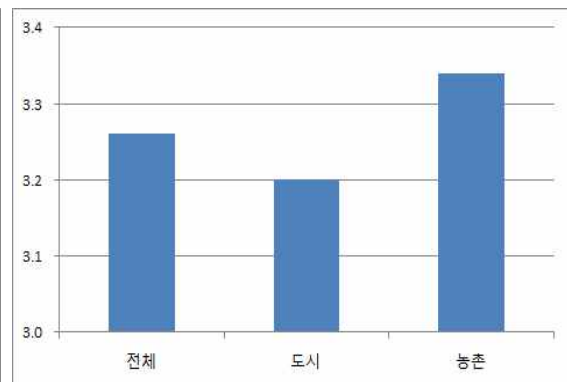
[그림 2-68] 도농별 교통환경 만족도

○ 거주환경

- 권역별로는, 북부 > 영동 > 남부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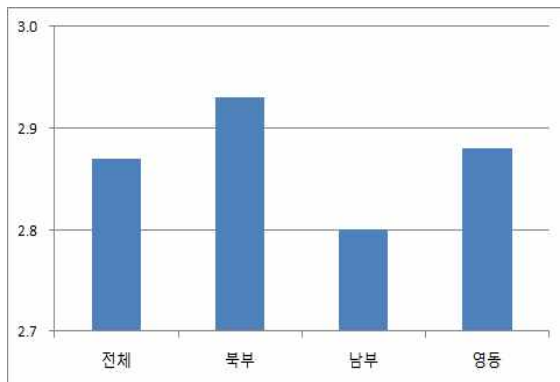
[그림 2-69] 권역별 거주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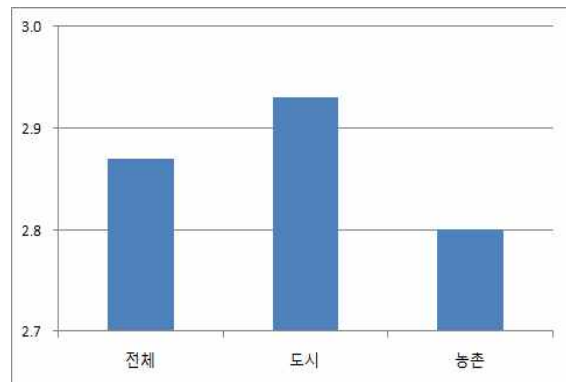
[그림 2-70] 도농별 거주환경 만족도

○ 의료·보건

- 권역별로는, 북부 > 영동 > 남부 순
- 도·농별로는, 도시 > 농촌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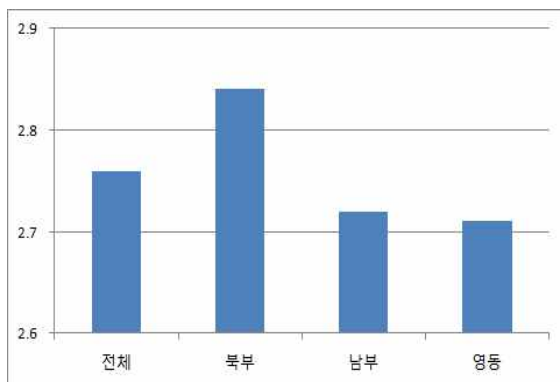
[그림 2-71] 권역별 의료보건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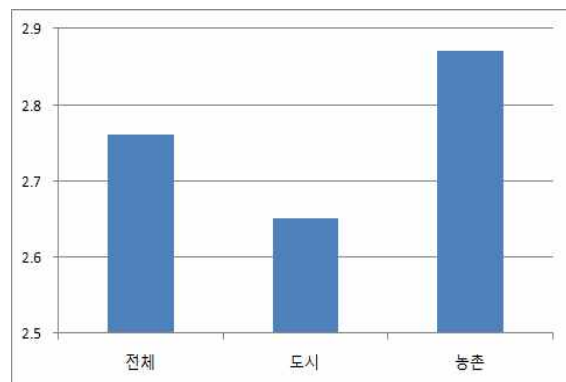
[그림 2-72] 도농별 의료보건환경 만족도

○ 복지시설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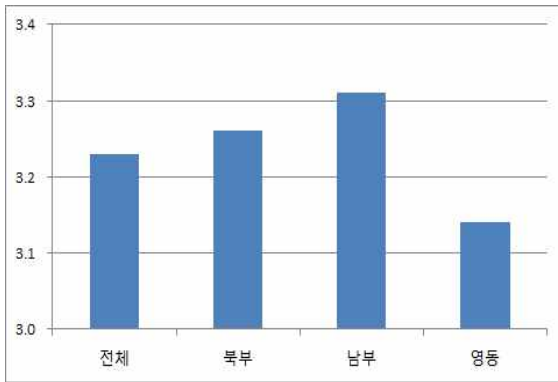
[그림 2-73] 권역별 복지시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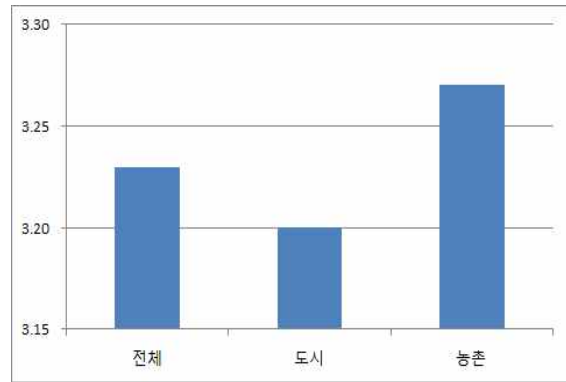
[그림 2-74] 도농별 복지시설 만족도

○ 안전

- 권역별로는, 남부 > 북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그림 2-75] 권역별 안전환경 만족도



[그림 2-76] 도농별 안전환경 만족도

[표 2-48] 만족도 평균점수 종합

	치안 수준	교육 환경	행정	경제	환경	편의 시설	교통 환경	거주 환경	의료 보건	복지 시설	안전
북부	3.16	3.04	2.85	2.75	3.53	2.89	3.29	3.32	2.93	2.84	3.26
남부	3.09	2.90	2.60	2.56	3.48	2.82	3.03	3.18	2.80	2.72	3.31
영동	3.22	2.80	2.53	2.37	3.34	2.71	3.10	3.29	2.88	2.71	3.14
도시	3.14	2.96	2.57	2.54	3.29	2.82	3.10	3.20	2.93	2.65	3.20
농촌	3.17	2.84	2.76	2.57	3.63	2.71	3.18	3.34	2.80	2.87	3.27
종합	3.16	2.90	2.66	2.55	3.45	2.78	3.14	3.26	2.87	2.76	3.23

(4) 세부지표별/지역구분별 만족도 분석

■ 지표별 만족도

□ 치안수준

- 지표별 평균 점수는 내 집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 길거리, 거주 지역 내 치안수준 > 경찰의 순찰활동 =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치안환경 > 경찰의 사건 대응 > CCTV 등 방범시설 수준 순
- 길거리, 거주 지역 내 치안수준
 - 전체 평균은 3.31, - 권역별로는 영동 > 북부 > 남부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내 집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 전체 평균은 3.36, - 권역별로는 영동 > 북부 > 남부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경찰의 순찰활동

- 전체 평균은 3.12, - 권역별로는 영동 > 북부 > 남부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경찰의 사건 대응
 - 전체 평균은 3.06, - 권역별로는 영동 > 남부 > 북부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CCTV 등 방범시설 수준
 - 전체 평균은 2.97, - 권역별로는 영동 > 남부 > 북부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 치안환경
 - 전체 평균은 3.12, - 권역별로는 북부 > 영동 > 남부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치안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 대체적으로 영동지역이 가장 높고, 북부 > 남부 순으로 나타남
 - 도농별로는 농촌이 도시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모습

[표 2-49] 치안수준 세부지표별 만족도 평균 점수

	길거리, 거주 지역 내 치안수준	내 집의 범죄 로부터의 안전	경찰의 순찰활동	경찰의 사건 대응	CCTV 등 방범시설수준	대중교통 수단 이용시 치안환경
북부	3.36	3.34	3.14	3.01	2.91	3.19
남부	3.15	3.32	3.05	3.03	2.95	3.04
영동	3.41	3.41	3.17	3.13	3.05	3.14
도시	3.27	3.30	3.11	3.01	3.06	3.11
농촌	3.35	3.43	3.14	3.10	2.86	3.13
전체	3.31	3.36	3.12	3.06	2.97	3.12

□ 교육환경

- 지표별 평균 점수는 자녀의 친구들 수준 > 공공교육 수준 및 환경 > 사교육 수준
및 환경 > 지역 내 교육특성상 대학진학 가능성 수준 순
- 공공교육 수준 및 환경
 - 전체 평균은 2.95,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도시 > 농촌 순
- 사교육 수준 및 환경
 - 전체 평균은 2.78,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도시 > 농촌 순
- 자녀의 친구들 수준

- 전체 평균은 3.11,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도시 = 농촌 순
- 지역 내 교육특성상 대학진학 가능성 수준
 - 전체 평균은 2.77,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도시 > 농촌 순
-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 북부지역이 가장 높고, 남부 > 영동 순으로 나타남
 - 도농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촌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모습

[표 2-50] 교육환경 세부지표별 만족도 평균점수

	공공교육 수준 및 환경	사교육 수준 및 환경	자녀의 친구들 수준	지역 내 교육특성상 대학진학 가능성
북부	3.01	2.94	3.20	2.99
남부	3.01	2.74	3.08	2.76
영동	2.84	2.69	3.06	2.59
도시	3.00	2.87	3.11	2.85
농촌	2.89	2.69	3.11	2.68
전체	2.95	2.78	3.11	2.77

□ 행정

-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표별 평균 점수는 시·군청의 주민을 위한 행정수준 > 도청으로부터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 > 시·군청의 우리지역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 지방의회(도의원, 시·군 의원)의 활동 > 내가 낸 세금의 효율적 사용 순
- 도청으로부터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
 - 전체 평균은 2.70,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시·군청의 주민을 위한 행정수준
 - 전체 평균은 2.77,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지방의회(도의원, 시·군 의원)의 활동
 - 전체 평균은 2.58,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시·군청의 우리지역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 전체 평균은 2.66,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내가 낸 세금의 효율적 사용

- 전체 평균은 2.57, - 권역별로는 북부 > 영동 > 남부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 북부지역이 가장 높고, 남부 > 영동 순으로 나타남
- 도농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촌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모습

[표 2-51] 행정 세부지표별 만족도 평균점수

	도로부터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	시.군청의 주민을 위한 행정수준	지방의회(도의원, 시.군 의원)의 활동	시.군의 우리지역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내가 낸 세금의 효율적 사용
북부	2.86	3.01	2.77	2.88	2.75
남부	2.68	2.76	2.53	2.58	2.47
영동	2.58	2.55	2.46	2.54	2.51
도시	2.67	2.69	2.48	2.51	2.48
농촌	2.74	2.86	2.70	2.84	2.68
전체	2.70	2.77	2.58	2.66	2.57

□ 경제

○ 세부지표 모두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표별 평균 점수는 지역 내 토지이용
규제 정도 > 향후 지역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 > 지역 주민소득 수준 > 일자리
기회 사용 순

○ 일자리 기회

- 전체 평균은 2.26,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지역 주민소득 수준

- 전체 평균은 2.50,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향후 지역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

- 전체 평균은 2.69,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지역 내 토지이용 규제 정도

- 전체 평균은 2.75,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경제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 북부지역이 가장 높고, 남부 > 영동 순으로 나타남
- 도농별로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모습

[표 2-52] 경제 세부지표별 만족도 평균점수

	일자리 기회	지역 주민소득 평균	향후 지역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	지역 내 토지이용 규제 정도
북부	2.48	2.72	2.94	2.84
남부	2.34	2.49	2.63	2.78
영동	1.99	2.31	2.51	2.65
도시	2.22	2.48	2.71	2.74
농촌	2.31	2.52	2.67	2.77
전체	2.26	2.50	2.69	2.75

□ 환경

- 다른 지표들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표별 평균 점수는 지역 내 공기의 질(대기오염) > 지역 내 녹지율 > 집 주변 소음 순
- 지역 내 공기의 질(대기오염)
 - 전체 평균은 3.60,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집 주변 소음
 - 전체 평균은 3.26,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지역 내 녹지율
 - 전체 평균은 3.48, - 권역별로는 남부 > 북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 대체적으로 북부지역이 가장 높고, 남부 > 영동 순으로 나타남
 - 도농별로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모습

[표 2-53] 환경 세부지표별 만족도 평균점수

	지역 내 공기의 질 (대기오염)	집 주변 소음	지역 내 녹지율
북부	3.73	3.33	3.53
남부	3.60	3.29	3.56
영동	3.49	3.16	3.37
도시	3.47	3.08	3.31
농촌	3.76	3.46	3.68
전체	3.60	3.26	3.48

□ 편의시설

- 지표별 평균 점수는 공원, 오픈 스페이스 > 전통시장, 집 인근 쇼핑시설 > 체육시설 >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 문화시설(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등) 순
- 공원, 오픈 스페이스
 - 전체 평균은 3.04,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 전체 평균은 2.63,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도시 > 농촌 순
- 전통시장, 집 인근 쇼핑시설
 - 전체 평균은 3.00, - 권역별로는 영동 > 남부 > 북부 순, - 도농별로는 도시 > 농촌 순
- 체육시설
 - 전체 평균은 2.92, - 권역별로는 남부 > 북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 북부지역이 가장 높고, 남부 > 영동 순으로 나타남
 - 도농별로는 평균적으로 도시지역이 농촌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모습

[표 2-54] 편의시설 세부지표별 만족도 평균점수

	공원, 오픈 스페이스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전통시장, 집 인근 쇼핑시설	문화시설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등)	체육시설
북부	3.28	2.82	2.97	2.36	3.01
남부	3.10	2.56	2.99	2.30	3.16
영동	2.77	2.54	3.02	2.61	2.61
도시	2.96	2.83	3.09	2.50	2.72
농촌	3.13	2.34	2.88	2.07	3.15
전체	3.04	2.63	3.00	2.30	2.92

□ 교통 환경

- 지표별 평균 점수는 승용차 이용 편의성 > 보행환경 > 주차환경 > 버스 이용 편의성 순
- 버스 이용 편의성

- 전체 평균은 2.90,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도시 > 농촌 순
- 승용차 이용 편의성
 - 전체 평균은 3.42, 권역별로는 북부 > 영동 > 남부 순,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보행환경
 - 전체 평균은 3.23, 권역별로는 북부 > 영동 > 남부 순,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주차환경
 - 전체 평균은 3.01, 권역별로는 북부 > 영동 > 남부 순,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 북부지역이 가장 높고, 영동 > 남부 순으로 나타남
 - 도농별로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모습

[표 2-55] 교통 환경 세부지표별 만족도 평균점수

	버스 이용 편의성	승용차 이용 편의성	보행환경	주차환경
북부	2.97	3.56	3.43	3.21
남부	2.88	3.27	3.09	2.86
영동	2.84	3.43	3.18	2.96
도시	2.91	3.37	3.19	2.94
농촌	2.88	3.47	3.27	3.08
전체	2.90	3.42	3.23	3.01

□ 거주환경

- 지표별 평균 점수는 이웃과의 관계 > 동네의 경관 > 유흥업소, 공장 등 부적합 시설로부터의 주거 환경 쾌적 정도 > 동네의 청결성 > 우리 동네 주거비용(집값, 전세값)의 적절성 > 우리 집의 생활비용의 적절성(난방, 전기 등) 순
- 동네의 경관
 - 전체 평균은 3.42, - 권역별로는 영동 > 북부 > 남부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동네의 청결성
 - 전체 평균은 3.35, - 권역별로는 북부 > 영동 > 남부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우리 집의 생활비용의 적절성(난방, 전기 등)
 - 전체 평균은 2.93, - 권역별로는 북부 > 영동 > 남부 순, - 도농별로는 도시 > 농촌 순

- 우리 동네 주거비용(집값, 전세값)의 적절성
 - 전체 평균은 2.93, - 권역별로는 북부 > 영동 > 남부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이웃과의 관계
 - 전체 평균은 3.52, - 권역별로는 영동 > 북부 > 남부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유흥업소, 공장 등 부적합시설로부터의 주거환경 쾌적 정도
 - 전체 평균은 3.42,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 평균적으로 북부지역이 가장 높고, 영동 > 남부 순으로 나타남
 - 도농별로는 농촌이 도시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모습

[표 2-56] 거주환경 세부지표별 만족도 평균점수

	동네의 경관	동네의 청결성	우리 집 생활 비용의 적절성	우리 동네 주거 비용의 적절성	이웃과의 관계	부적합 시설로부터 주거환경 쾌적정도
북부	3.49	3.42	3.01	3.01	3.52	3.44
남부	3.34	3.24	2.83	2.86	3.39	3.44
영동	3.52	3.39	2.95	2.98	3.53	3.37
도시	3.34	3.21	2.96	2.91	3.37	3.38
농촌	3.57	3.50	2.90	3.00	3.60	3.45
전체	3.45	3.35	2.93	2.95	3.48	3.42

□ 의료·보건환경

- 지표별 평균 점수는 지역 내 보건소의 신뢰성 > 지역 내 병원의 신뢰성 > 지역 내 병원종류와 수 순
- 지역 내 병원의 신뢰성
 - 전체 평균은 2.78, - 권역별로는 북부 = 영동 > 남부 순, - 도농별로는 도시 > 농촌 순
- 지역 내 보건소의 신뢰성
 - 전체 평균은 3.10,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지역 내 병원종류와 수
 - 전체 평균은 2.72, - 권역별로는 북부 > 영동 > 남부 순, - 도농별로는 도시 > 농촌 순

○ 의료·보건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 북부지역이 가장 높고, 영동 > 남부 순으로 나타남
- 도농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촌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모습

[표 2-57] 의료·보건환경 세부지표별 만족도 평균점수

	지역 내 병원의 신뢰성	지역 내 보건소의 신뢰성	지역 내 병원종류와 수
북부	2.80	3.18	2.81
남부	2.75	3.07	2.57
영동	2.80	3.05	2.78
도시	2.87	3.03	2.88
농촌	2.69	3.17	2.54
전체	2.78	3.10	2.72

□ 복지시설

○ 지표별 평균 점수는 노인복지 시설 > 육아보육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 여성복지 시설 > 청소년 복지시설 순

○ 육아보육 시설

- 전체 평균은 2.91, - 권역별로는 북부 > 영동 > 남부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노인복지 시설

- 전체 평균은 2.94,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청소년 복지시설

- 전체 평균은 2.62,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여성복지 시설

- 전체 평균은 2.65, - 권역별로는 북부 > 영동 > 남부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장애인복지 시설

- 전체 평균은 2.66,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 북부지역이 가장 높고, 남부와 영동지역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도농별로는 농촌이 도시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모습

[표 2-58] 복지시설 세부지표별 만족도 평균점수

	육아보육 시설	노인복지 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여성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북부	2.99	3.06	2.67	2.76	2.70
남부	2.83	2.95	2.62	2.54	2.68
영동	2.90	2.84	2.57	2.64	2.59
도시	2.88	2.75	2.56	2.55	2.51
농촌	2.94	3.16	2.68	2.75	2.82
전체	2.91	2.94	2.62	2.65	2.66

□ 안전

- 지표별 평균 점수는 화재, 유해화학물 등 인적 재해로부터 안전 > 홍수, 태풍 등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 > 동네의 교통안전 환경 > 어린이 안전 환경 순
- 홍수, 태풍 등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
 - 전체 평균은 3.37, - 권역별로는 남부 > 북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화재, 유해화학물 등 인적 재해로부터 안전
 - 전체 평균은 3.38, - 권역별로는 남부 > 북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동네의 교통안전 환경
 - 전체 평균은 3.15,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어린이 안전 환경
 - 전체 평균은 3.02, - 권역별로는 북부 = 남부 > 영동 순, - 도농별로는 농촌 > 도시 순
- 안전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해보면
 - 권역별로는 남부지역이 가장 높고, 북부 > 영동 순으로 나타남
 - 도농별로는 농촌이 도시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모습

[표 2-59] 안전 세부지표별 만족도 평균점수

	홍수, 태풍 등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	화재, 유해화학물 등 인적 재해로부터 안전	동네의 교통안전 환경	어린이 안전 환경
북부	3.42	3.41	3.16	3.04
남부	3.55	3.47	3.16	3.04
영동	3.15	3.27	3.14	2.99
도시	3.35	3.33	3.13	2.99
농촌	3.39	3.44	3.18	3.07
전체	3.37	3.38	3.15	3.02

■ 지역구분별/지표별 만족도

□ 치안수준

- 전체적인 만족도를 보면, 내 집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 길거리, 거주 지역 내 치안 수준 > 경찰의 순찰활동 = 대중 교통수단 이용 시 치안환경 > 경찰의 사건 대응 > CCTV 등 방범시설 수준 순
- 권역별 만족도를 보면
 - 북부지역은 길거리, 거주 지역 내 치안수준 > 내 집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 대중 교통수단 이용시 치안환경 > 경찰의 순찰활동 > 경찰의 사건 대응 > CCTV 등 방범시설 수준 순
 - 남부지역은 내 집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 길거리, 거주 지역 내 치안수준 > 경찰의 순찰활동 > 대중 교통수단 이용 시 치안환경 > 경찰의 사건 대응 > CCTV 등 방범시설 수준 순
 - 영동지역은 길거리, 거주 지역 내 치안수준 = 내 집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 경찰의 순찰활동 > 대중 교통수단 이용 시 치안환경 > 경찰의 사건 대응 > CCTV 등 방범시설 수준 순
- 도농별 만족도를 보면
 - 도시지역은 내 집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 길거리, 거주 지역 내 치안수준 > 경찰의 순찰활동 = 대중 교통수단 이용 시 치안환경 > CCTV 등 방범시설 수준 > 경찰의 사건 대응 순
 - 농촌지역은 내 집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 길거리, 거주 지역 내 치안수준 > 경찰의 순찰활동 > 대중 교통수단 이용 시 치안환경 > 경찰의 사건 대응 > CCTV 등 방범시설 수준 순

□ 교육환경

- 전체적인 만족도를 보면, 자녀의 친구들 수준 > 공공교육 수준 및 환경 > 사교육 수준 및 환경 > 지역 내 교육특성상 대학진학 가능성 순
- 권역별 만족도를 보면
 - 북부지역은 자녀의 친구들 수준 > 공공교육 수준 및 환경 > 지역 내 교육특성 상 대학진학 가능성 > 사교육 수준 및 환경 순
 - 남부지역은 자녀의 친구들 수준 > 공공교육 수준 및 환경 > 지역 내 교육특성 상 대학진학 가능성 > 사교육 수준 및 환경 순
 - 영동지역은 자녀의 친구들 수준 > 공공교육 수준 및 환경 > 사교육 수준 및 환경 > 지역 내 교육특성상 대학진학 가능성 순
- 도농별 만족도를 보면
 - 도시지역은 자녀의 친구들 수준 > 공공교육 수준 및 환경 > 사교육 수준 및 환경 > 지역 내 교육특성상 대학진학 가능성 순

- 농촌지역은 자녀의 친구들 수준 > 공공교육 수준 및 환경 > 사교육 수준 및 환경 ≈ 지역 내 교육 특성상 대학진학 가능성 순

□ 행정

- 전체적인 만족도를 보면, 시·군청의 주민을 위한 행정수준 > 도청으로부터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 > 시·군의 우리지역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 > 지방의회(도의원, 시·군 의원)의 활동 > 내가 낸 세금의 효율적 사용 순

○ 권역별 만족도를 보면

- 북부지역은 시·군청의 주민을 위한 행정수준 > 시·군의 우리지역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 > 도청으로부터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 > 지방의회(도의원, 시·군 의원)의 활동 > 내가 낸 세금의 효율적 사용 순
- 남부지역은 시·군청의 주민을 위한 행정수준 > 도청으로부터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 > 시·군의 우리지역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 > 지방의회(도의원, 시·군 의원)의 활동 > 내가 낸 세금의 효율적 사용 순
- 영동지역은 도청으로부터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 > 시·군청의 주민을 위한 행정수준 > 시·군의 우리지역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 > 내가 낸 세금의 효율적 사용 > 지방의회(도의원, 시·군 의원)의 활동 순

○ 도농별 만족도를 보면

- 도시지역은 시·군청의 주민을 위한 행정수준 > 도청으로부터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 > 시·군의 우리지역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 > 지방의회(도의원, 시·군 의원)의 활동 = 내가 낸 세금의 효율적 사용 순
- 농촌지역은 시·군청의 주민을 위한 행정수준 > 시·군의 우리지역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 > 도청으로부터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 > 지방의회(도의원, 시·군 의원)의 활동 > 내가 낸 세금의 효율적 사용 순

□ 경제

- 전체적인 만족도를 보면, 지역 내 토지이용 규제 정도 > 향후 지역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 > 지역주민소득 평균 > 일자리 기회 순

○ 권역별 만족도를 보면

- 북부지역은 향후 지역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 > 지역 내 토지이용 규제 정도 > 지역 주민소득 평균 > 일자리 기회 순

- 남부지역은 지역 내 토지이용 규제 정도 > 향후 지역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 > 지역 주민소득 평균 > 일자리 기회 순

- 영동지역은 지역 내 토지이용 규제 정도 > 향후 지역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 > 지역 주민소득 평균 > 일자리 기회 순

○ 도농별 만족도를 보면

- 도시지역은 지역 내 토지이용 규제 정도 > 향후 지역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 > 지역 주민소득 평균 > 일자리 기회 순

- 농촌지역도 지역 내 토지이용 규제 정도 > 향후 지역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 > 지역 주민소득 평균 > 일자리 기회 순

□ 환경

○ 전체적인 만족도를 보면, 지역 내 공기의 질(대기오염) > 지역 내 녹지율 > 집 주변 소음 순

○ 권역별 만족도를 보면, 모든 권역에서 지역 내 공기의 질(대기오염) > 지역 내 녹지율 > 집 주변 소음 순

○ 도농별 만족도를 보면,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지역 내 공기의 질(대기오염) > 지역 내 녹지율 > 집 주변 소음 순

□ 편의시설

○ 전체적인 만족도를 보면, 공원, 오픈 스페이스 > 전통시장, 집 인근 쇼핑시설 > 체육시설 >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 문화시설(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등) 순

○ 권역별 만족도를 보면

- 북부지역은 공원, 오픈 스페이스 > 체육시설 > 전통시장, 집 인근 쇼핑시설 >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 문화시설(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등) 순

- 남부지역은 체육시설 > 공원, 오픈 스페이스 > 전통시장, 집 인근 쇼핑시설 >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 문화시설(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등) 순

- 영동지역은 전통시장, 집 인근 쇼핑시설 > 공원, 오픈 스페이스 > 문화시설(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등) = 체육시설 >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순

○ 도농별 만족도를 보면

- 도시지역은 전통시장, 집 인근 쇼핑시설 > 공원, 오픈 스페이스 >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

체육시설 > 문화시설(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등) 순

- 농촌지역은 체육시설 > 공원, 오픈 스페이스 > 전통시장, 집 인근 쇼핑시설 >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 문화시설(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등) 순

□ 교통 환경

○ 전체적인 만족도를 보면, 승용차 이용 편의성 > 보행환경 > 주차환경 > 버스이용 편의성 순

○ 권역별 만족도를 보면

- 북부지역은 승용차 이용 편의성 > 보행환경 > 주차환경 > 버스이용 편의성 순

- 남부지역은 승용차 이용 편의성 > 보행환경 > 버스이용 편의성 > 주차환경 순

- 영동지역은 승용차 이용 편의성 > 보행환경 > 주차환경 > 버스이용 편의성 순

○ 도농별 만족도를 보면,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승용차 이용 편의성 > 보행환경 > 주차환경 > 버스이용 편의성 순

□ 거주환경

○ 전체적인 만족도를 보면, 이웃과의 관계 > 동네의 경관 > 유흥업소, 공장 등 부적합시설로부터의 주거환경 쾌적 정도 > 동네의 청결성 > 우리 동네 주거비용(집값, 전세값)의 적절성 > 우리 집의 생활비용의 적절성(난방, 전기 등) 순

○ 권역별 만족도를 보면

- 북부지역은 이웃과의 관계 > 동네의 경관 > 유흥업소, 공장 등 부적합시설로부터의 주거환경 쾌적 정도 > 동네의 청결성 > 우리 동네 주거비용(집값, 전세값)의 적절성 = 우리 집의 생활비용의 적절성(난방, 전기 등) 순

- 남부지역은 유흥업소, 공장 등 부적합시설로부터의 주거환경 쾌적 정도 > 이웃과의 관계 > 동네의 경관 > 동네의 청결성 > 우리 동네 주거비용(집값, 전세값)의 적절성 > 우리 집의 생활비용의 적절성(난방, 전기 등) 순

- 영동지역은 이웃과의 관계 > 동네의 경관 > 동네의 청결성 > 유흥업소, 공장 등 부적합시설로부터의 주거환경 쾌적 정도 > 우리 동네 주거비용(집값, 전세값)의 적절성 > 우리 집의 생활비용의 적절성(난방, 전기 등) 순

○ 도농별 만족도를 보면

- 도시지역은 유흥업소, 공장 등 부적합시설로부터의 주거환경 쾌적 정도 > 이웃과의 관계 >

동네의 경관 > 동네의 청결성 > 우리 집의 생활비용의 적절성(난방, 전기 등) > 우리 동네 주거비용(집값, 전세값)의 적절성 순

- 농촌지역은 이웃과의 관계 > 동네의 경관 > 유흥업소, 공장 등 부적합시설로부터의 주거환경 쾌적 정도 > 동네의 청결성 > 우리 동네 주거비용(집값, 전세값)의 적절성 > 우리 집의 생활비용의 적절성(난방, 전기 등) 순

□ 의료·보건환경

○ 전체적인 만족도를 보면, 지역 내 보건소의 신뢰성 > 지역 내 병원의 신뢰성 > 지역 내 병원종류와 수 순

○ 권역별 만족도를 보면

- 북부지역은 지역 내 보건소의 신뢰성 > 지역 내 병원종류와 수 > 지역 내 병원의 신뢰성 순

- 남부지역은 지역 내 보건소의 신뢰성 > 지역 내 병원의 신뢰성 > 지역 내 병원종류와 수 순

- 영동지역도 지역 내 보건소의 신뢰성 > 지역 내 병원의 신뢰성 > 지역 내 병원 종류와 수 순

○ 도농별 만족도를 보면

- 도시지역은 지역 내 보건소의 신뢰성 > 지역 내 병원종류와 수 > 지역 내 병원의 신뢰성 순

- 농촌지역은 지역 내 보건소의 신뢰성 > 지역 내 병원의 신뢰성 > 지역 내 병원 종류와 수 순

□ 복지시설

○ 전체적인 만족도를 보면, 노인복지 시설 > 육아보육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 여성복지 시설 > 청소년 복지시설 순

○ 권역별 만족도를 보면

- 북부지역은 노인복지 시설 > 육아보육 시설 > 여성복지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 청소년 복지시설 순

- 남부지역은 노인복지 시설 > 육아보육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 청소년 복지시설 > 여성복지 시설 순

- 영동지역은 육아보육 시설 > 노인복지 시설 > 여성복지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 청소년 복지시설 순

○ 도농별 만족도를 보면

- 도시지역은 육아보육 시설 > 노인복지 시설 > 청소년 복지시설 > 여성복지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순

- 농촌지역은 노인복지 시설 > 육아보육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 여성복지 시설 > 청소년

복지시설 순

□ 안전

- 전체적인 만족도를 보면, 화재, 유해화학물 등 인적 재해로부터 안전 > 홍수, 태풍 등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 > 동네의 교통안전 환경 > 어린이 안전 환경 순
- 권역별 만족도를 보면
 - 북부지역은 홍수, 태풍 등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 > 화재, 유해화학물 등 인적재해로부터 안전 > 동네의 교통안전 환경 > 어린이 안전 환경 순
 - 남부지역도 홍수, 태풍 등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 > 화재, 유해화학물 등 인적 재해로부터 안전 > 동네의 교통안전 환경 > 어린이 안전 환경 순
 - 영동지역은 화재, 유해화학물 등 인적 재해로부터 안전 > 홍수, 태풍 등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 > 동네의 교통안전 환경 > 어린이 안전 환경 순
- 도농별 만족도를 보면
 - 도시지역은 홍수, 태풍 등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 > 화재, 유해화학물 등 인적재해로부터 안전 > 동네의 교통안전 환경 > 어린이 안전 환경 순
 - 농촌지역은 화재, 유해화학물 등 인적 재해로부터 안전 > 홍수, 태풍 등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 > 동네의 교통안전 환경 > 어린이 안전 환경 순

8. 충청북도

1) 주요 지표를 통한 격차실태

(1) 인구 지표

- 충북 면적은 7,433km²으로 북부권이 2,648km²(35.6%)로 가장 넓었으며, 남부권(26.4%), 중부권(24.9%), 청주권(13%)의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인구수는 청주권이 전체의 52%인 817,794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부권이 24.3%, 중부권 14.8%, 남부권 9%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청주권의 인구집중(52%)은 수도권의 전국비중인 49.2%¹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노령화 지수는 남부권 지역이 가장 높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성장 동력인 인적자원 부족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한계로 작용

[표 2-60] 권역별 인가지표 현황

구 분	면적(km ²)	주민등록인구 (천명)	인구 밀도 (명/km ²)	노령화 지수 (%)	출생(명)	순인구이동 (명)
충 북	7,433	1,573,981	212	81	14,670	5,964
청주권	967 (13.0%)	817,794 (52.0%)	846	51	8,779 (59.8%)	5,821 (97.6%)
청주시	153	661,793	4,312	44	6,961	4,443
청원군	814	156,001	191	86	1,828	1,378
중부권	1,851 (24.9%)	232,988 (14.8%)	126	116	2,055 (14.0%)	220 (3.7%)
괴산군	842	37,402	44	304	179	-61
음성군	520	96,214	184	102	841	281
진천군	407	65,444	160	94	629	17
증평군	82	33,928	414	77	406	-17
북부권	2,648 (35.6%)	382,161 (24.3%)	144	102	2,958 (20.2%)	527 (8.8%)
충주시	984	211,295	214	93	1,722	247
제천시	883	138,779	157	100	1,061	531
단양군	781	32,087	41	190	175	-251
남부권	1,966 (26.4%)	141,038 (9.0%)	72	202	878 (6.0%)	-604 (-10.1%)
보은군	584	35,328	60	251	182	-25
옥천군	537	54,725	101	167	354	-499
영동군	845	50,985	60	213	342	-80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1

15) 2010년 기준으로 전국인구는 50,734천명이며, 수도권인구는 24,987천명으로 49.2%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음

- 출생인구도 청주권이 전체의 5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인구이동의 경우도 청주권이 97.6%를 보이고 있어 순인구이동의 대부분이 청주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남부권의 경우 음(-)의 순 인구이동을 보이고 있어 극심한 인구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청주권을 제외한 타 권역은 상대적으로 과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남부권의 경우 가장 낮은 인구지표 순위를 보이고 있음
- 1970년~2010년간 청주권 인구는 충북 증가 인구의 50.8%인 469,635명이 증가하여 지난 40년간 충북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 청주권을 제외한 타 권역은 지속적인 음(-)의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중부권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양(+)의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음

[표 2-61] 1970~2010년 권역별 인구 증가 추이 (단위: 명)

년도	충북(A)	청주권(B)	B/A(%)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1970-1980	-57,282	78,224	-	-24,291	-52,744	-58,471
1980-1990	9,866	165,921	1,681	-67,625	-68,102	-20,136
1990-2000	67,352	115,412	171	-9,542	-36,010	-33,839
2000-2010	72,490	110,078	151	-7,987	-22,127	8,858
계	92,426	469,635	508	-94,646	-178,983	-103,580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각년도

- 1970년~2010년간 권역별 인구변화 추이를 보더라도 청주권은 지속적으로 높은 인구증가를 보이는 반면, 비청주권은 인구가 감소하여 청주권과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비청주권 지역의 인구감소는 인적자원 부족 및 고령인구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쟁력 강화에 저해요소로 작용함



[그림 2-77] 1970~2010년 권역별 인구변화 추이

(2) 산업 지표

- 충북의 전업농가수는 총 42,691가구로 이 중 북부권이 28.4%로 가장 많았고, 남부권 27.8%, 중부권 24.8%, 청주권 19.0%의 순으로 나타남
- 공업용지면적은 청주권이 32.8%로 가장 높았으며, 북부권 29.2%, 중부권 24.1%, 남부권 13.9%로 나타남
- 광업 및 제조업 현황은 사업체수의 경우 중부권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종사자수와 생산액은 청주권이 각각 43.7%, 48.8%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 다음으로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및 공장수요가 높은 경부축 중심의 청주권과 중부권의 산업관련 지표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북부권과 남부권은 낮은 지표 순위를 보이고 있음

[표 2-62] 권역별 산업지표 현황

구 분	경지면적 (ha)	전업농가 (가구)	공업용지 면적 (천㎡)	총사업체 수(개)	광업및제조업(10인이상)			산업 및 농공단지	
					사업체수 (개소)	종사자수 (명)	생산액 (십억)	개수	입주 업체수
충북	116,973	42,691	45,968	105,756	2,081	117,526	43,246	57	1,131
청주권	21,627 (18.5%)	8,101 (19.0%)	15,059 (32.8%)	51,789 (49.0%)	718 (34.5%)	51,368 (43.7%)	21,100 (48.8%)	8 (14.0%)	485 (42.9%)
청주시	3,931	2,096	5,275	42,959	224	24,616	9,398	1	263
청원군	17,696	6,005	9,783	8,830	494	26,752	11,702	7	222
충부권	36,723 (31.4%)	10,588 (24.8%)	11,097 (24.1%)	15,611 (14.8%)	860 (41.3%)	44,737 (38.1%)	15,767 (36.5%)	21 (36.8%)	226 (20.0%)
괴산군	12,478	3,662	1,407	2,468	62	2,269	570	2	18
음성군	13,414	3,929	5,080	6,358	452	21,559	6,517	8	140
진천군	8,686	2,286	3,734	4,491	314	18,523	7,966	8	55
증평군	2,145	711	877	2,294	32	2,386	714	3	13
북부권	31,289 (26.7%)	12,134 (28.4%)	13,407 (29.2%)	29,120 (27.5%)	311 (14.9%)	13,707 (11.7%)	4,569 (10.6%)	17 (29.8%)	285 (25.2%)
충주시	15,049	6,155	7,676	15,640	195	9,033	2,732	8	153
제천시	10,588	3,801	3,284	10,767	86	2,904	928	6	107
단양군	5,652	2,178	2,448	2,713	30	1,770	909	3	25
남부권	27,334 (23.4%)	11,868 (27.8%)	6,405 (13.9%)	9,236 (8.7%)	192 (9.2%)	7,714 (6.6%)	1,804 (4.2%)	11 (19.3%)	135 (11.9%)
보은군	9,769	3,532	2,332	2,455	37	1,716	374	3	54
옥천군	8,045	3,844	2,103	3,693	111	4,027	959	5	63
영동군	9,520	4,492	1,970	3,088	44	1,971	471	3	18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1

(3) 교통 지표

- 충북 도로연장은 총 6,699,223m로 이 중 북부권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청주권 23.7%, 중부권과 남부권이 20.9%로 나타남
- 도로포장율은 평균적으로 70% 후반대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부권의 경우는 70% 초반대의 낮은 포장율을 보이고 있음
- 자동차 등록대수는 청주권이 전체 자동차수의 50.8%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남부권과 중부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이고 있음

[표 2-63] 권역별 교통지표 현황

구 분	도로연장(m)	포장율(%)	1인당 도로연장 (m/인)	자동차 등록대수	
				전체 자동차	승용차
총 북	6,699,223	77.3	0.23	617,225	443,053
청주권	1,588,219 (23.7%)	77.8	0.51	313,381 (50.8%)	241,615 (54.5%)
청주시	939,767	76.3	0.70	244,555	194,209
청원군	648,452	79.3	0.24	68,826	47,406
중부권	1,400,696 (20.9%)	79.2	0.17	108,131 (17.5%)	64,327 (14.5%)
괴산군	553,723	76.4	0.07	25,596	8,614
음성군	414,337	83.7	0.23	41,409	27,354
진천군	352,543	82.1	0.19	27,840	19,080
증평군	80,093	74.7	0.42	13,286	9,279
북부권	2,311,676 (34.5%)	79.4	0.17	150,863 (24.4%)	103,809 (23.4%)
충주시	1,097,634	75.7	0.19	82,742	58,556
제천시	822,397	76.8	0.17	55,124	37,583
단양군	391,645	85.7	0.08	12,997	7,670
남부권	1,398,632 (20.9%)	72.9	0.10	54,850 (8.9%)	33,302 (7.5%)
보은군	440,036	75.6	0.08	14,176	7,787
옥천군	399,653	65.6	0.14	21,129	13,623
영동군	558,943	77.6	0.09	19,545	11,892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1

(4) 재정 지표

- 1인당 지방세징수액은 충북 평균이 845,621원이며, 이중 중부권이 992,638원으로 가장 높고, 청주권이 784,161원, 북부권 703,537원, 남부권 528,793원으로 나타남
- 지역내총생산(GRDP)은 청주권이 충북 전체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부권이 22.7%, 북부권이 19.8%, 남부권이 7.4%의 순임
- 재정력지수도 청주권이 0.542로 타 권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부권은 0.306, 북부권 0.233, 남부권 0.167의 순임
- 인구 및 산업지표와 마찬가지로 재정지표도 충북에서 청주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남부권과 북부권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산업수요가 낮은 남부권과 북부권의 경우 낮은 재정지표 순위를 보이고 있어, 경제·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표 2-64] 권역별 재정지표 현황

구 분	1인당 지방세징수액(원)	GRDP(십억)	재정력지수
총 북	845,621	32,175	0.292
청주권	784,161	16,325 (50.7%)	0.542
청주시	695,072	10,416	0.662
청원군	1,166,265	5,909	0.422
중부권	992,638	7,108 (22.1%)	0.306
괴산군	682,797	724	0.151
음성군	1,075,100	2,825	0.427
진천군	1,193,480	2,925	0.371
증평군	737,004	634	0.268
북부권	703,537	6,360 (19.8%)	0.233
충주시	717,252	3,500	0.306
제천시	652,769	2,024	0.247
단양군	832,703	836	0.146
남부권	523,793	2,376 (7.4%)	0.167
보은군	592,591	647	0.159
옥천군	564,613	938	0.188
영동군	432,544	791	0.155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1

(5) 보건·문화·교육 지표

- 충북지역의 의료기관은 총 1,485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 중 청주권에 54.5%, 북부권 24.0%, 중부권 12.7%, 남부권 8.8%가 소재하고 있음
- 금융기관수도 마찬가지로 청주권에 57.6%가 소재하고 있으며, 북부권 21.6%, 중부권 14.4%, 남부권 6.5%로 나타남
- 대학수는 총 56개소로 청주권에 50%가 소재하고 있으며, 북부권 28.6%, 중부권 16.1%, 남부권 5.4%가 소재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청주권의 비중이 높으며, 남부권과는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음

[표 2-65] 권역별 보건문화 교육지표 현황

구 분	문화공간수 (개)	의료 기관수 (개)	1인당 기초생활 수급자수(명)	대학수 (개)	대학생수 (명)	금융기관수 (개)
총 북	144	1,485	0.036	56	134,216	139
청주권	43 (29.9%)	810 (54.5%)	0.027	28 (50.0%)	77,117 (57.5%)	80 (57.6%)
청주시	29	723	0.027	20	56,765	70
청원군	14	87	0.026	8	20,352	10
충부권	27 (18.8%)	188 (12.7%)	0.048	9 (16.1%)	14,428 (10.7%)	20 (14.4%)
괴산군	9	23	0.067	1	1,228	2
음성군	7	76	0.052	8	13,200	9
진천군	5	53	0.033	0	0	5
증평군	6	36	0.040	0	0	4
북부권	46 (31.9%)	357 (24.0%)	0.045	16 (28.6%)	35,848 (26.7%)	30 (21.6%)
충주시	15	193	0.038	10	18,239	17
제천시	19	144	0.053	6	17,609	11
단양군	12	20	0.059	0	0	2
남부권	28 (19.4%)	130 (8.8%)	0.050	3 (5.4%)	6,823 (5.1%)	9 (6.5%)
보은군	12	30	0.049	0	0	2
옥천군	9	53	0.050	1	1,805	4
영동군	7	47	0.052	2	5,018	3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1

2) 충청북도 지역내 격차실태 종합 및 시사점

(1)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에 따른 권역간 불균형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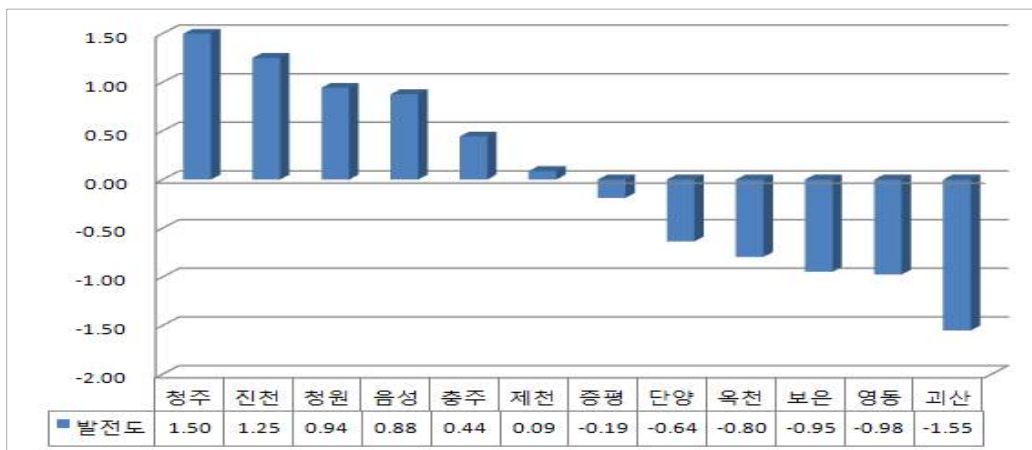
- 2014년 7월 출범 예정인 청주·청원 통합시는 충북인구의 절반이 넘고(84만명) 경제력도 절반 이상(GRDP 50%)을 차지
 - － 세출 규모도 충북 전체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중 면적 2위, 재정 4위, 인구 6위에 해당
- 청주·청원 통합시는 중추관리 기능과 산업이 집중하게 되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공공투자도 청주권에서 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 － 이에 따라 고용기회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인재와 자본이 청주권으로 유출되고, 지방의 저발전은 지속되고 청주권의 발전과 집중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지속

(2) 충북 전체의 경쟁력 악화

- 현재 청주권의 집중도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
 - GRDP의 경우 충북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나, 소득이나 소비의 경우 비중이 더욱 커서 비청주권에서 생산한 잉여가 청주권으로 흡수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대학 진학과 취업 등의 이유로 비청주권에서 청주권으로 해마다 인구이동이 지속됨

(3) 충북 지역발전도 비교·분석

- 충북 시·군별 지역발전 정도¹⁶⁾를 살펴 보면 충북의 시·군 가운데 청주시, 진천군, 청원군, 음성군, 충주시, 제천시 6개 시·군만이 양(+)의 발전수준을 나타내며 6개 군은 음(-)의 발전 정도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청주권 및 음성·진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은 현격한 격차를 두고 발전 혹은 낙후된 상태에 머물러 있음
- 충북도내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는 충북에서 청주권(청주시, 청원군)이 점하는 비중이 국토차원에서 수도권에 차지하는 양상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발전격차는 청주·통합 후 더 높은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



[그림 2-78] 시군별 발전도 순위

(4) 수도권 집중도와 비교한 청주권 집중 정도¹⁷⁾

16) 충청북도의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12년~2016년) 대상지역 선정에 위한 지표분석 결과를 제시함. 분석 지표는 재정력지수, 총사업체 종사자수 비율, 인구변화율, 노령화지수, 도로포장율, 1인당 기초생활 수급자수, 1인당 의사수 등 7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2단계 균형발전 대상지역으로 제천시가 추가되었음.

17)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토·지역발전정책 내용 중 수도권 집중 현황을 설명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함

- 청주권은 충북면적의 13.%에 불과하나, 현재 충북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수용하고 있고 주요 경제, 사회기능의 2/3이상 특히, 부가가치가 높고, 자원배분의 통제력이 높은 의료 및 교육 일수록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충북 인구(52.5%), 지역내총생산(50.7%), 제조업체(34.7%), 서비스업체(50.0%) 집중
 - 의료기관(56.9%), 대학수(50.0%), 대학생수(57.4%) 집중
- 청주권 집중정도는 수도권에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2-66] 수도권 집중과 비교한 청주권 집중 정도

구 분		충북	청주권	청주권 집중도(%)	수도권 집중도(%)
		(A)	(B)	(B/A)	
국토면적('11)	km ²	7,433.26	967.58	13.0	11.8
인 구('11)	천인	1,562,903	820,315	52.5	49.2
지역내총생산('09)	(10억)	32,175	16,325	50.7	48.9
제조업('09)	사업체수(10인 이상)	2,050	712	34.7	50.7
	종업원(천인)	116,892	51,239	43.8	41.1
서비스업('09)	사업체수	25,020	12,490	50.0	48.4
	종업원(천인)	114,156	55,820	48.9	55.0
금융('10)	예금액(10억)	11,318	7,133	63.0	71.1
	대출액(10억)	13,527	9,012	66.6	69.8
대학교('11)	학교수	56	28	50.0	46.4
	학생수(천인)	134,216	77,117	57.4	45.7
의료('10)	의사수	11,167	6,361	56.9	53.0
	의료기관	1,485	810	54.5	52.2
자동차 등록대수('10)	천대	617,225	313,381	50.8	44.8

자료 : 지역발전포럼(<http://www.redis.go.kr>), 지역통계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각년도

3) 충청북도의 이슈와 과제

(1) 지방정부의 정책 : 선택과 집중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단체장은 공약실천 이행 및 재집권을 위해 집중적 개발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법정계획 비중이 큰 현실에서 임기 중 가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개발계획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선택의 집중 경향이 청주권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오게 하였고, 상대적으로 타 시·군의 저발전을 초래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
- 또한 소득의 재분배적 개념에 바탕을 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예산배분 보다는 총면적, 정치적 비중, 국가시책과의 연관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

- 충북도청이 소재해 있는 청주시 및 그 주변지역인 청원지역과 비교한 타 시·군과의 지방정부 차원의 주요 업무계획의 편향적 차이로 인한 소외문제도 지역불균형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충청북도의 주요 업무계획이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국제공항, 호남고속철도 등 주로 청주권에 대한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인구, 교육시설, 행정기관 등의 청주권 집중문제도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타 지역에 대한 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2) 지리적 요인에 따른 개발규제

- 청주, 청원 일부를 비롯하여, 진천, 음성 등은 타 시·군에 비해 국토개발촉에 입지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각종 국가사업에 혜택을 받고 있음
- 산업화 과정의 개발연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부축의 청주·청원권을 중심으로 도의 각종 산업기반시설을 집적시킴에 따라 지역간, 권역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되고 있음
 - 사례 : 오창·오송단지, 오송신도시(역세권 개발), 청주국제공항, 중부내륙화물기지, 각종 국책사업지역 등
- 국가기간교통망과 인접한 지역의 경우, 교통접근성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각종 산업단지, 교육·문화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입지되고 있으나, 충북 북부권인 충주, 제천, 단양 지역의 경우, 충주호 수변 및 국립공원 규제가 있으며, 충북 남부권인 보은, 옥천, 청원군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대청호 수변규제로 인해 성장동력을 잃게 됨
- 조건불리지역은 해당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그동안 규제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없이 규제만 지속되어 왔음

(3)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의 미비

- 지역개발을 위해 각종 개발규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문화산업 육성을, 양호한 자연환경이 있는 지역에서는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발전전략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아이템을 통해 지역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이디어의 부족, 경험부족, 기존 지역문화와의 부적합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그 성과가 가시적이진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행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성과품 위주의 지역발전전략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역문화를 성숙화시키는 깊이 있는 전략 모색이 요구됨

(4) 개발 시·군 중심 사업추진에 따른 공동협력사업 추진 미흡

- 지역발전 사업이 개별 시·군 단위로 추진되어 효율성이 낮고 소지역주의에 의한 과잉경쟁이 발생됨
- 국가 및 도 사업의 유치시 인접 시·군간 과열경쟁으로 갈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간 공동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축이 필요함

(5) 산업 및 기업체 유치 전략의 미비

- 지역 발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요인인 인구측면에서 볼 때 정주인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이 같은 일자리 창출은 산업이나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역 내에 유치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관건임
- 산업이나 기업의 입지가 청주권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도로나 기타 시설 등 주변여건상 청주권이 양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타지역의 유치전략 등이 입지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불일치된 경우도 있음
-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충북도내의 저발전 지역의 경우, 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지역에 적합한 산업이나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함

(6) 도로 등 인프라시설의 미비

- 인프라 시설은 산업이나 기업을 유치할 때 가장 우선시 고려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저발전 지역의 인프라 시설 정비는 늦출 수 없는 실정임

(7) 교육 및 문화시설의 질적 향상

-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우수한 교육시설의 입지가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충북지역에서는 교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교육시설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전략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

9. 충청남도

1) 주요 지표를 통한 격차실태

(1) 인구격차

■ 인구변화추이

- 충청남도의 인구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연평균 0.47% 증가하였으나, 2005년부터 2010년 동안 연평균 1.42% 증가하였음
- 2000년이후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연기군(세종시)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
 - 아산시의 경우 연평균 4.42% 증가하여 2010년에는 2000년 대비 1.3배 이상 성장함
 - 반면, 청양군과 서천군 등은 동 기간 동안 각각 연평균 2.1%,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7] 충청남도 시군별 총 인구수

구분	인구(명)				증가율 (00-10, %)
	2000년	2005년	2010년		
충남 계	1,765,290	1,808,677	1,946,555	100.0%	1.0
천안	417,835	521,887	574,623	29.5%	3.2
공주	130,376	127,076	122,153	6.3%	-0.6
보령	109,535	97,176	97,770	5.0%	-1.1
아산	180,763	208,415	278,676	14.3%	4.4
서산	143,154	144,091	156,843	8.1%	0.9
논산	137,452	125,332	119,222	6.1%	-1.4
계룡	27,122	31,699	41,528	2.1%	4.4
당진	117,652	113,267	137,006	7.0%	1.5
금산	57,929	53,570	52,952	2.7%	-0.9
부여	83,687	73,464	67,584	3.5%	-2.1
서천	66,929	57,875	53,914	2.8%	-2.1
청양	38,601	31,316	29,755	1.5%	-2.6
홍성	90,658	82,793	82,811	4.3%	-0.9
예산	97,669	81,977	77,830	4.0%	-2.2
태안	65,928	58,739	53,888	2.8%	-2.0

자료 : 인구총조사(통계청, 2000-2010), 충남에서 연기군 제외

- 충남의 도시화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도시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농촌인구는 감소함
 - 연평균증가율(00-10) : 도시인구는 2.49% 증가, 농촌인구는 1.82% 감소
 - 충남 도시화율은 2010년 68.8%로 나타남

[표 2-68] 충남 도시화율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0-05	05-10	00-10
충남전체(천인)	1,765	1,808	1,947	0.24	0.74	0.98
도시인구(천인)	1,047	1,155	1,339	0.99	1.49	2.49
농촌인구(천인)	793	723	660	-0.92	-0.91	-1.82
충남 도시화율(%)	59.3	63.9	68.8			

자료 : 인구총조사(통계청, 2000-2010), 충남에서 연기군 제외

■ 인구격차 추이

- 인구격차는 충남의 서북부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지역에서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도시와 농촌 인구를 비교해 보면 도시지역의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충남 서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 지역의 인구는 1,118천명으로 5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957천명으로 46.1%의 비중을 나타냄

(2) 도시인구 격차

■ 도시인구

- 충청남도의 도시인구는 2010년 현재 1,355천인으로 2000년 이후 약 305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2.59%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충남의 도시화율은 2000년 56.9%에서 2010년 66.8%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전국 도시화율(90.9%)에 비해 낮은 편임

[표 2-69] 도시인구 변화 추이(2000~2010)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00~'05	'05~'10	'00~'10
충남 전체(천인)	1,845	1,889	2,028	0.47	1.42	0.95
도시인구(천인)	1,049	1,160	1,355	2.04	3.14	2.59
농촌인구(천인)	796	729	673	- 1.75	-1.58	-1.66
충남 도시화율(%)	56.9	61.4	66.8	-	-	-

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충남지역의 도시인구의 경우 매년 2% 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

■ 가구 및 가구원수

- 충남은 평균 가구원수가 전국보다 작고, 1~2인 가구 비율이 높음
 - 충남 평균 가구원수는 2.5명으로 전국 2.7명 보다 작음
 - 1~2인 가구 비율도 충남은 55.7%로 전국 48.1% 보다 높음
 - 충남 시군 중 평균 가구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계룡시로 3.0명이며, 천안 2.7명 순임
 - 1~2인 가구 비율이 높은 시군은 서천 68.5%, 청양 68.0%, 부여 66.3% 순임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비율이 높은 시군은 계룡 10.4%, 연기 8.8% 순임
 - * 계룡시의 경우 1~2인 가구수 비율이 충남 시군 중 가장 낮은 반면, 5인 이상 가구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평균가구원수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충남의 1~2인 가구 중 고령자 비율이 군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1~2인 가구 중 20~40대 비율은 시 지역에 높게 나타남

[표 2-70] 가구원수별 가구 현황(2010년, 일반가구)

구분	일반 가구 (천가구)	1인가구 (백가구)	가구원수1~2인		가구원수3~4인		가구원수5인이상		평균 가구 원수 (명)
			(백가구)	비율	(백가구)	비율	(백가구)	비율	
전국 계	17,288	41,422	83,472	48.1%	75,938	43.8%	13,984	8.1%	2.7
동부	13,989	32,441	63,980	45.6%	64,932	46.3%	11,399	8.1%	2.7
읍무	1,483	3,466	7,468	50.2%	6,109	41.1%	1,298	8.7%	2.7
면부	1,815	5,515	12,025	66.0%	4,897	26.9%	1,288	7.1%	2.3
충남 계	720	1,932	4,012	55.7%	2,620	36.5%	565	7.9%	2.5
천안	206	561	1,018	49.3%	877	42.5%	168	8.2%	2.7
공주	44	124	261	58.8%	144	32.5%	38	8.7%	2.5
보령	38	103	232	60.3%	126	32.6%	27	7.0%	2.5
아산	94	252	485	51.3%	386	40.8%	75	7.9%	2.6
서산	58	146	315	54.1%	224	38.4%	44	7.5%	2.6
논산	45	127	272	60.8%	139	31.2%	36	8.0%	2.4
계룡	13	21	50	37.8%	69	51.8%	14	10.4%	3.0
당진	52	138	295	56.5%	186	36.0%	41	7.8%	2.5
금산	21	63	137	65.4%	57	27.3%	15	7.3%	2.3
부여	27	74	179	66.3%	70	25.9%	21	7.8%	2.4
서천	23	66	156	68.5%	58	25.4%	14	6.0%	2.3
청양	12	36	84	68.0%	30	24.4%	9	7.6%	2.3
홍성	32	89	201	62.2%	97	30.1%	25	7.7%	2.4
예산	30	75	186	61.4%	94	31.1%	23	7.5%	2.5
태안	22	59	141	64.3%	63	28.9%	15	6.8%	2.4

자료 : 인구총조사(통계청, 2000~2010), 충남에서 연기군 제외

■ 인구이동

- 2005~2009년간 충남지역과 여타 지역간의 인구이동을 보면, 충남은 전입 144,393명, 전출 135,836명으로 총 8,557명의 인구유입을 보여 2000~2005년까지의 인구유출지역에서 인구유입지역으로 전환됨
- 2000~2005년간 충남지역에서 유출되는 인구의 지역분포를 보면, 총 유출인구의 26%가 광역충청권 내에서 이동하였으며, 광역수도권으로의 유출비중은 2000~2005년간 55.5%에서 2005~2009년에는 55.3%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2-71] 권역별 인구이동패턴(지역별 추이) (단위: 인)

구분	2000~2005년			2005~2009년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충남 계	133,062	135,186	-2,124	144,393	135,836	8,557
광역수도권	70,083	75,023	-4,940	77,025	75,102	1,923
강원권	3,749	3,092	657	3,987	3,397	590
광역충청권	31,925	35,100	-3,175	32,846	33,050	-204
전북권	6,766	5,807	959	7,176	6,214	962
광역광주권	4,853	3,953	900	5,513	4,497	1,017
광역대구권	6,344	4,938	1,406	7,580	5,614	1,966
광역부산권	8,695	6,706	1,989	9,535	7,339	2,196
제주도	649	568	81	733	624	109

주: 광역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강원도), 광역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중 충남은 제외), 전북권(전북),
 광역광주권(광주, 전남), 광역대구권(대구, 경북), 광역부산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도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3) 지역총생산 격차

- 충남은 매년 10.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군별로 살펴보면 당진군 14.7%, 아산시 13.2%, 서산시 11.7%, 천안시 11.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표 2-72]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억원)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0	비중	연평균 증가율
천안시	86,154	114,378	136,363	162,116	179,708	23.5%	11.1%
공주시	17,003	19,107	21,019	23,473	25,823	3.4%	6.2%
보령시	20,535	20,610	23,002	22,149	24,708	3.2%	2.7%
아산시	89,588	108,960	125,426	161,532	213,087	27.9%	13.2%
서산시	41,614	53,512	66,045	76,993	90,522	11.9%	11.7%
논산시	16,772	18,944	20,783	22,735	25,239	3.3%	6.0%
계룡시1)	2,726	3,195	4,368	4,058	4,482	0.6%	7.4%
당진시	27,712	38,100	47,874	60,282	72,559	9.5%	14.7%
금산군	10,409	10,960	12,652	14,297	15,606	2.0%	6.0%
연기군	14,000	15,556	17,562	21,095	24,822	3.3%	8.5%
부여군	10,517	11,081	12,814	14,201	15,052	2.0%	5.3%
서천군	12,459	12,659	13,653	13,633	15,088	2.0%	2.8%
청양군	6,033	6,346	7,155	6,646	6,737	0.9%	1.6%
홍성군	12,318	14,284	14,542	16,855	16,679	2.2%	4.4%
예산군	11,784	13,441	13,614	16,082	17,518	2.3%	5.8%
태안군	12,888	13,840	14,612	15,161	15,907	2.1%	3.1%
충청남도	392,511	474,973	551,484	651,338	763,538	100.0%	10.0%

주 : 1) 2003년 이전 : 계룡출장소

자료 :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충청남도.

- 2010년 당해년기준으로 763,538억원으로 연평균 11.1%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성장률이 큰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지역이 충남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충남 시군별로는 북부권과 남부권의 권역간 경제불균형 문제가 심화됨
 - 권역내 시군별 연평균증가율(00-10)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북부권 : 아산 16.9%, 당진 12.1%, 천안 9.6%
 - 남부권 : 청양 0.3%, 서천 1.6%, 부여 1.9%
 - 천안, 아산 두 지역의 지역내총생산(2010년 기준)이 충남 전체의 57.3%를 차지함

(4) 기업수

- 시군별 기업수의 경우 천안, 아산, 서산지역의 기업 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평균 증가율이 큰 지역은 계룡시, 아산시, 당진시, 천안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주시,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의 경우 소폭 감소하고 있음

[표 2-73] 충남 시군별 기업수

구분	2001	2005	2008	2011	비중	연평균증가율
계	118,197	125,538	131,549	140,507	100	1.74
천안시	27,437	33,616	35,825	38,263	27.2	3.38
공주시	8,261	8,200	8,111	8,246	5.9	-0.02
보령시	6,975	7,680	7,739	7,773	5.5	1.09
아산시	10,044	11,327	12,958	15,453	11.0	4.40
서산시	9,156	9,151	9,695	10,417	7.4	1.30
논산시	9,479	9,077	9,300	9,487	6.8	0.01
계룡시	975	1,388	1,592	1,913	1.4	6.97
금산군	4,574	4,548	4,682	5,060	3.6	1.01
연기군	5,275	5,212	4,953	5,268	3.7	-0.01
부여군	5,477	4,837	4,694	4,742	3.4	-1.43
서천군	4,406	4,416	4,425	4,342	3.1	-0.15
청양군	2,368	2,212	2,112	2,159	1.5	-0.92
홍성군	6,504	5,943	6,524	6,788	4.8	0.43
예산군	6,109	5,847	5,843	6,101	4.3	-0.01
태안군	4,221	4,506	4,851	5,101	3.6	1.91
당진시	6,936	7,578	8,245	9,394	6.7	3.08

자료 : 통계청

(5) 종사자수

- 종사자수의 경우 천안, 아산등의 시지역의 종사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에는 모든 시군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천안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의 연평균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2-74] 충남 시군별 종사자수

	2001	2005	2008	2011	비중(%)	연평균증가율
계	509,575	589,493	641,731	748,377	100	3.9
천안시	143,748	182,186	194,751	227,608	30.4	4.7
공주시	31,923	33,065	35,071	39,202	5.2	2.1
보령시	26,531	28,633	29,362	30,920	4.1	1.5
아산시	63,062	82,840	100,945	126,829	16.9	7.2
서산시	35,627	40,944	45,310	53,581	7.2	4.2
논산시	32,187	33,803	36,157	39,406	5.3	2.0
계룡시	4,114	5,838	6,723	7,624	1.0	6.4
금산군	17,734	18,212	19,009	21,557	2.9	2.0
연기군	27,160	27,610	25,991	29,696	4.0	0.9
부여군	17,837	17,201	18,423	18,033	2.4	0.1
서천군	15,125	17,275	17,300	19,172	2.6	2.4
청양군	9,067	8,241	8,469	9,177	1.2	0.1
홍성군	21,598	21,479	23,789	27,688	3.7	2.5
예산군	21,473	21,966	22,423	24,555	3.3	1.4
태안군	14,552	15,455	17,317	17,951	2.4	2.1
당진시	27,837	34,745	40,691	55,378	7.4	7.1

자료: 통계청

2) 충청남도 지역 내 격차실태 종합 및 시사점

- 충남의 경우 군지역과 시지역의 지역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농촌의 특성이 큰 군 지역과 도시의 특성이 큰 시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음
- 충남 서북부권의 편중현상 심화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경제, 인구, 산업 등의 편중에 따른 충남도내 타 지역과의 격차 발생

10. 전라북도

1) 주요 지표를 통한 격차실태

(1) 인구, 세대, 인구밀도, 세대당 인구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전라북도의 인구는 1,868,963명이며, 세대수는 740,650세대임
- 전국의 인구밀도는 505.0명/km²이며 전라북도의 인구밀도는 전국의 절반수준인 231.8명/km²으로 인구밀도는 낮은 상황임
-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시로서 3,112.7명/km²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진안군이 34.9명/km²으로 나타났음

[표 2-75] 전라북도 주민등록인구, 세대, 인구밀도, 세대당 인구수(단위: 명, 세대, km²)

구분	인구수	세대수	면적	인구밀도	세대당 인구
전 국	50,515,666	19,865,179	100,033	505.0	2.5
전라북도	1,868,963	740,650	8061.40	231.8	2.5
전주시	641,525	234,415	206.1	3,112.7	2.7
군산시	272,601	106,405	390.2	698.6	2.6
익산시	307,289	118,174	506.65	606.5	2.6
정읍시	122,000	51,812	692.65	176.1	2.4
남원시	87,775	36,425	752.63	116.6	2.4
김제시	94,346	41,481	544.9	173.1	2.3
완주군	85,119	35,099	820.15	103.8	2.4
진안군	27,543	12,463	789.14	34.9	2.2
무주군	25,578	11,402	631.89	40.5	2.2
장수군	23,386	10,464	533.43	43.8	2.2
임실군	30,593	13,876	597.15	51.2	2.2
순창군	30,209	13,197	495.76	60.9	2.3
고창군	60,861	27,814	607.71	100.1	2.2
부안군	60,138	27,623	493.04	122.0	2.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2) 인구추이

- 2010년 기준 전라북도의 총 인구는 1,869,963명으로 전국의 3.7%임
- 1995년부터 수도권의 인구는 45.1%에서 2010년 49.2%로 약 4.1%의 증가를 보인 반면, 전라북도의 인구는 1995년 4.4%에서 2010년 3.7%로 약 0.7%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 전국 인구는 소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전라북도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5년전에 비해 감소세는 둔화되는 등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표 2-76] 전라북도 시군별 주민등록 인구 (단위: 명, %)

구분		1995	2000	2005	2010
전라북도	인구	2,006,602	1,999,255	1,885,335	1,868,963
	증감율	-3.0	-0.37	-5.7	-0.87
전주시	인구	569,804	620,521	621,749	641,525
	증감율	10.2	8.9	0.2	3.2
군산시	인구	275,819	277,491	263,120	272,601
	증감율	-3.9	0.6	-5.2	3.6
익산시	인구	328,152	334,324	318,506	307,289
	증감율	6.1	1.9	-4.7	-3.5
정읍시	인구	151,039	152,022	129,050	122,000
	증감율	-18.5	0.7	-15.1	-5.5
남원시	인구	109,185	103,571	93,670	87,775
	증감율	-12.3	-5.1	-9.6	-6.3
김제시	인구	128,415	115,865	102,720	94,346
	증감율	-14.8	-9.8	-11.3	-8.2
완주군	인구	86,461	84,009	83,651	85,119
	증감율	-2.1	-2.8	-0.4	1.8
진안군	인구	40,086	31,273	29,021	27,543
	증감율	-10.4	-22.0	-7.2	-5.1
무주군	인구	32,293	29,207	25,876	25,578
	증감율	-13.2	-9.6	-11.4	-1.2
장수군	인구	31,485	30,051	24,755	23,386
	증감율	-7.9	-4.6	-17.6	-5.5
임실군	인구	44,612	37,514	32,511	30,593
	증감율	-7.7	-15.9	-13.3	-5.9
순창군	인구	39,728	34,587	32,012	30,209
	증감율	-12.6	-12.9	-7.4	-5.6
고창군	인구	85,173	74,104	63,676	60,861
	증감율	-0.7	-13.0	-14.1	-4.4
부안군	인구	84,350	74,716	65,018	60,138
	증감율	-18.0	-11.4	-13.0	-7.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3) 노령인구

- 2010년 기준 전라북도의 노령인구는 284,373명으로 전국의 노령인구 비율인 10.9% 보다 4.3% 높은 15.2%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고령화는 전라북도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음
- 전라북도는 초고령사회의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이 초고령사회임(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경우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라고 하고,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정의)
- 전라북도의 각 시군별 노령인구비율을 살펴보면, 임실군의 인구대비 노령인구 비율이 28.9%로 가장 많은 노령인구를 보이고 있으며, 전주시가 9.6%로 가장 낮은 노령인구를 나타내고 있음

[표 2-77] 전라북도 노인인구, 노령인구비율 (단위: 명, %)

구분	1995		2010	
	65세이상	노령인구비율	65세이상	노령인구비율
전국	2,665,241	5.8	5,506,352	10.9
전라북도	170,027	8.5	284,373	15.2
전주시	30,114	5.3	61,560	9.6
군산시	18,455	6.7	33,555	12.3
익산시	23,209	7.1	39,268	12.8
정읍시	16,443	10.9	25,096	20.6
남원시	11,793	10.8	18,100	20.6
김제시	14,921	11.6	22,332	23.7
완주군	9,181	10.6	15,414	18.1
진안군	5,421	13.5	7,547	27.4
무주군	4,157	12.9	6,825	26.7
장수군	4,120	13.1	6,338	27.1
임실군	6,112	13.7	8,854	28.9
순창군	5,755	14.5	8,579	28.4
고창군	10,432	12.2	16,117	26.5
부안군	9,914	11.8	14,788	24.6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주: 효자출장소(95년 신설되어 98년에 완산구로 편입) 1995년분 완산구에 편입하여 산정

(4) 1~2인 가구

- 전국의 1~2인가구는 2000년 전체가구의 34.6%에서 2010년 48.1%로 증가, 같은 기간 전라북도의 1~2인 가구는 40.9%에서 54.7%로 증가하였음
- 1~2인 가구 중 20세 미만 가구의 비중은 익산시가 1.7%로 가장 높으며, 65세 이상은 임실군이 65.4%로 가장 높음
- 노령층에서의 1~2인 가구 증가는 전라북도가 가진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노인 복지 및 주거 등에 있어 정책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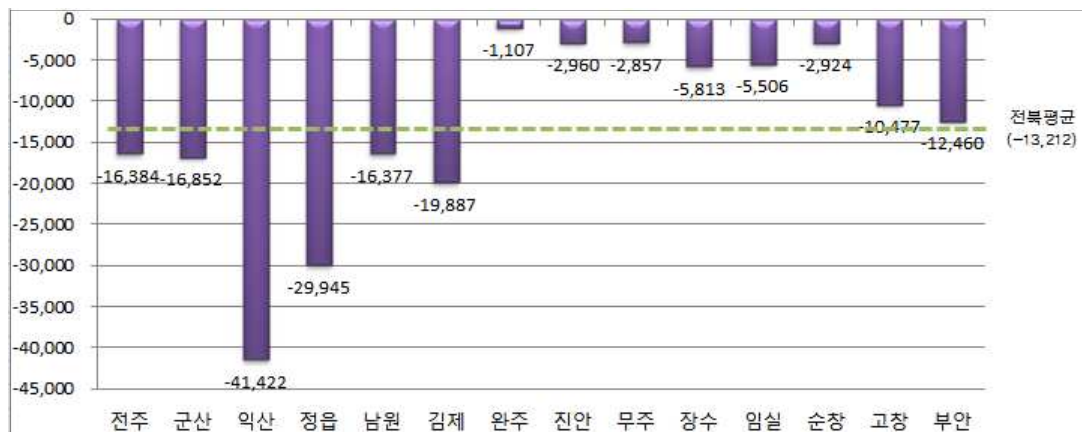
[표 2-78] 전라북도 시군별 1~2인 가구 비교(2010) (단위: 가구, %)

구분	계		20세미만		20세~39세		40세~64세		65세이상	
전북	361,217	100	3,028	0.8	69,327	19.2	142,845	39.5	146,017	40.4
전주시	103,164	100	1,308	1.3	31,763	30.8	43,415	42.1	26,678	25.9
군산시	49,117	100	362	0.7	11,459	23.3	21,691	44.2	15,605	31.8
익산시	58,369	100	1,005	1.7	14,751	25.3	23,428	40.1	19,185	32.9
정읍시	27,204	100	60	0.2	2,297	8.4	10,483	38.5	14,364	52.8
남원시	19,614	100	80	0.4	1,766	9.0	7,654	39.0	10,114	51.6
김제시	21,299	100	33	0.2	1,244	5.8	7,505	35.2	12,517	58.8
완주군	16,520	100	128	0.8	3,033	18.4	5,889	35.6	7,470	45.2
진안군	6,754	100	9	0.1	283	4.2	2,259	33.4	4,203	62.2
무주군	6,686	100	5	0.1	442	6.6	2,367	35.4	3,872	57.9
장수군	5,837	100	1	0.0	288	4.9	2,022	34.6	3,526	60.4
임실군	7,942	100	2	0.0	231	2.9	2,512	31.6	5,197	65.4
순창군	7,820	100	6	0.1	285	3.6	2,469	31.6	5,060	64.7
고창군	16,237	100	22	0.1	803	4.9	5,703	35.1	9,709	59.8
부안군	14,654	100	7	0.0	682	4.7	5,448	37.2	8,517	58.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5) 인구추이

- 전북지역 내 시·군별 순수 인구규모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인구이동으로 인한 순증
가 경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전무함
- 인구 유출이 가장 큰 시·군은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군산시, 전주시, 남원시 순이
며 부안군과 고창군과 지역도 매우 높아 지역의 정주기반 강화가 필요함
- 완주군은 전북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안정적 순이동 경향을 보유한 지역임



[그림 2-79] 전북 지역 내 시·군별 순인구 이동패턴(2001-2010)

[표 2-79] 시·군별 순인구 이동(2001-2010) (단위: 명)

구분	전입	전출	순이동
계	3,350,859	3,535,830	-184,971
전주시	1,268,129	1,284,513	-16,384
군산시	495,270	512,122	-16,852
익산시	534,625	576,047	-41,422
정읍시	225,984	255,929	-29,945
남원시	145,989	162,366	-16,377
김제시	149,962	169,849	-19,887
완주군	146,043	147,150	-1,107
진안군	59,847	62,807	-2,960
무주군	34,168	37,025	-2,857
장수군	45,036	50,849	-5,813
임실군	42,770	48,276	-5,506
순창군	45,498	48,422	-2,924
고창군	76,294	86,771	-10,477
부안군	81,244	93,704	-12,460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6) 지역내 총생산

- 전라북도는 전체 14개 시군에서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그리고 완주군 등 서북지역 4개 시군의 지역내총생산이 전라북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이상을 차지함
-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내 시군들은 2005년 이후 지역내총생산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09년 이후 일부 시군지역에서는 감소하기도 하였음
- 전라북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업 등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조업 중심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농업의 6차산업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중임

[표 2-80] 시·군별 순인구 이동(2001-2010) (단위 : 명)

시군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역내 총생산 (백만원)	비율 (%)	지역내 총생산 (백만원)	비율 (%)	지역내 총생산 (백만원)	비율 (%)	지역내 총생산 (백만원)	비율 (%)	지역내 총생산 (백만원)	비율 (%)	지역내 총생산 (백만원)	비율 (%)
전라북도	25,221,161	100.0	26,488,000	100.0	28,586,477	100.0	29,471,304	100.0	31,854,976	100.0	34,643,065	100.0
전주시	6,580,921	26.1	6,937,710	26.2	7,394,691	25.9	7,499,423	25.4	7,699,609	24.2	8,189,314	23.6
군산시	4,623,213	18.3	4,766,698	18.0	5,374,978	18.8	6,236,616	21.2	6,508,638	20.4	7,383,205	21.3
익산시	3,994,274	15.8	4,188,596	15.8	4,458,074	15.6	4,591,228	15.6	4,834,159	15.2	5,482,668	15.8
정읍시	1,558,478	6.2	1,646,449	6.2	1,729,106	6.0	1,823,669	6.2	2,037,274	6.4	2,131,841	6.2
남원시	1,107,012	4.4	1,185,599	4.5	1,200,988	4.2	1,266,952	4.3	1,443,807	4.5	1,442,546	4.2
김제시	1,430,632	5.7	1,497,387	5.7	1,593,483	5.6	1,609,161	5.5	1,714,653	5.4	1,814,413	5.2
완주군	2,143,834	8.5	2,245,890	8.5	2,672,379	9.3	2,270,834	7.7	2,740,681	8.6	3,100,399	8.9
진안군	502,483	2.0	547,006	2.1	489,930	1.7	434,578	1.5	512,378	1.6	626,043	1.8
무주군	394,972	1.6	400,203	1.5	396,533	1.4	412,602	1.4	559,052	1.8	511,111	1.5
장수군	340,136	1.3	389,728	1.5	382,135	1.3	351,178	1.2	440,693	1.4	421,008	1.2
임실군	447,227	1.8	467,038	1.8	495,952	1.7	523,791	1.8	616,154	1.9	670,497	1.9
순창군	400,748	1.6	429,196	1.6	469,201	1.6	473,342	1.6	590,593	1.9	568,332	1.6
고창군	966,693	3.8	1,001,477	3.8	1,080,841	3.8	1,069,680	3.6	1,087,392	3.4	1,191,393	3.4
부안군	730,537	2.9	785,022	3.0	848,188	3.0	908,251	3.1	1,069,891	3.4	1,110,295	3.2

자료: 통계청, KOSIS

(7) 제조업

- 2009년 전북의 제조업체는 총 1,593개소의 사업체에 73,721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의 제조업은 고용측면에서는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출하액과 부가가치는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전북의 제조업은 노동집약형이면서 노동생산성이 낮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생산기반이 취약하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지역별로는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에 전북 제조업체의 69%가 입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78%, 출하액은 85% 그리고 부가가치의 86%가 집중되어 있음

[표 2-81] 전라북도 제조업 현황 (단위: 개소, 명, 십억원, %)

구분	사업체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업체당		
					종업원	출하액	부가가치
전국	57,996	2,452,880	1,122,987	374,501	100.0	100.0	100.0
전북	1,593	73,721	30,144	10,173	109.4	97.7	98.9
전주	214	7,393	2,986	941	81.7	72.1	68.1
군산	408	21,460	11,004	3,696	124.4	139.3	140.3
익산	336	16,178	5,783	1,920	113.8	88.9	88.5
정읍	121	4,618	1,457	414	90.2	62.2	53.0
남원	57	2,037	402	125	84.5	36.4	34.1
김제	163	5,284	1,751	504	76.6	55.5	47.8
완주	149	12,724	5,705	2,211	201.9	197.7	229.8
진안	15	411	61	22	64.8	20.9	23.0
무주	5	131	25	8	61.9	25.5	24.7
장수	13	438	60	31	79.7	23.8	36.6
임실	17	728	211	84	101.3	64.1	76.7
순창	21	492	162	39	55.4	39.9	28.4
고창	34	884	308	110	61.5	46.8	49.9
부안	40	943	229	68	55.7	29.6	26.5

자료: 통계청, KOSIS(10인 이상 사업장 기준)

2) 전라북도 지역 내 격차실태 종합 및 시사점

- 전라북도는 시군별 지표 등을 비교해 볼 때,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익산, 군산, 완주, 김제 등 서북권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높음
- 특히, 무주군과 진안군 그리고 장수군 등 산악지역인 동부권에 대한 인구감소 및 기반부족 등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고령인구의 증가는 전라북도가 향후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
- 혁신도시와 식품클러스터 등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은 전주시를 중심으로한 서북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시군의 경우 농공단지 및 관광자원 개발 등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임

3) 전라북도의 이슈와 과제

-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 실패에 따른 지역간 갈등이 대두되고 있음
-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지역에서는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주시와 익산시 그리고 군산시 등에 집중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하고 있음
- 전라북도 내에는 변산반도, 내장산, 지리산, 덕유산 등 총 4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특히 국립공원을 보유한 시군에서는 국립공원 관리 등의 이유로 기존 관광시설 노후화 및 신규투자 제약 등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 지역내 낙후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며, 일부 지역에서 인구유출에 따른 과소화 마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귀농귀촌 활성화로 일부 군지역에서의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초기 단계 이후 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11. 경상남도

1) 주요 지표를 통한 격차실태

(1) 인구분포

- 2012년 기준 경남인구 대비 인구비율은 시지역(84.7%), 군지역(15.3%)로 나타났으며, 시군별로는 창원시(32.9%), 김해시(15.5%), 진주시(10.2%) 순으로 높고, 낮은 순은 의령군(0.9%), 산청군(1.1%), 함양군(1.2%) 등으로 나타남
- 시지역의 경우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증가(0.9%)한 반면 군지역은 감소(0.8%)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함안군(0.5% 증가)을 제외하고는 모든 군지역이 감소하였고, 진주시, 사천시, 밀양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지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동서지역 간 격차를 보면 2012년 기준 경남인구 대비 인구비율은 동부지역(77.7%), 서부지역(22.3%)로 나타나 서부지역 인구는 동부지역 인구의 약 29%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권역으로 보면 동부권의 인구가 48%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서북부권이 5.7%로 가장 낮은 실정임
- 동서지역 간의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동부지역이 증가(0.9%), 서부지역이 감소(0.5%)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세부권역에서는 동북부권이 1.9% 증가하여 가장 큰폭으로 증가하였고 서북부권이 0.9%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세를 보임
- 동북부권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이유는 김해시와 양산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것이며, 서북부권에서는 함천군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1.4%)함에 따른 것으로 예상됨

[표 2-82] 인구분포 (단위: 인, %)

구 분	2002년	2007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02~'07	'07~'12	'02~'12
경 남	3,124,418 (100.0)	3,196,953 (100.0)	3,319,314 (100.0)	0.5	0.8	0.6
시지역	2,577,439 (82.5)	2,677,130 (83.7)	2,812,872 (84.7)	0.8	1.0	0.9
군지역	546,979 (17.5)	519,823 (16.3)	506,442 (15.3)	-1.0	-0.5	-0.8
동부지역	2,347,083 (75.1)	2,447,806 (76.6)	2,577,863 (77.7)	0.8	1.0	0.9
동부권	1,528,520 (48.9)	1,545,740 (48.4)	1,592,093 (48.0)	0.2	0.6	0.4
동북부권	818,563 (26.2)	902,066 (28.2)	985,770 (29.7)	2.0	1.8	1.9
서부지역	777,335 (24.9)	749,147 (23.4)	741,451 (22.3)	-0.7	-0.2	-0.5
서부권	569,754 (18.2)	553,807 (17.3)	551,664 (16.6)	-0.6	-0.1	-0.3
서북부권	207,581 (6.6)	195,340 (6.1)	189,787 (5.7)	-1.2	-0.6	-0.9
창원시	1,087,686 (34.8)	1,082,843 (33.9)	1,091,471 (32.9)	-0.1	0.2	0.0
진주시	339,943 (10.9)	330,756 (10.3)	337,314 (10.2)	-0.5	0.4	-0.1
통영시	134,107 (4.3)	134,431 (4.2)	139,347 (4.2)	0.0	0.7	0.4
사천시	117,076 (3.7)	112,499 (3.5)	115,321 (3.5)	-0.8	0.5	-0.2
김해시	390,292 (12.5)	464,964 (14.5)	513,260 (15.5)	3.6	2.0	2.8
밀양시	120,342 (3.9)	111,473 (3.5)	108,755 (3.3)	-1.5	-0.5	-1.0
거제시	182,035 (5.8)	208,208 (6.5)	236,944 (7.1)	2.7	2.6	2.7
양산시	205,958 (6.6)	231,956 (7.3)	270,460 (8.1)	2.4	3.1	2.8
의령군	32,751 (1.0)	31,418 (1.0)	30,329 (0.9)	-0.8	-0.7	-0.8
함안군	64,318 (2.1)	64,865 (2.0)	67,425 (2.0)	0.2	0.8	0.5
창녕군	69,220 (2.2)	62,255 (1.9)	62,966 (1.9)	-2.1	0.2	-0.9
고성군	60,374 (1.9)	55,393 (1.7)	56,906 (1.7)	-1.7	0.5	-0.6
남해군	55,958 (1.8)	55,026 (1.7)	48,223 (1.5)	-0.3	-2.6	-1.5
하동군	56,777 (1.8)	55,526 (1.7)	50,806 (1.5)	-0.4	-1.8	-1.1
산청군	38,726 (1.2)	35,274 (1.1)	35,691 (1.1)	-1.8	0.2	-0.8
함양군	43,982 (1.4)	40,637 (1.3)	40,714 (1.2)	-1.6	0.0	-0.8
거창군	67,224 (2.2)	63,979 (2.0)	63,103 (1.9)	-1.0	-0.3	-0.6
합천군	57,649 (1.8)	55,450 (1.7)	50,279 (1.5)	-0.8	-1.9	-1.4

주1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주2 : ()의 수치는 경남인구 대비 비율임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해당연도

(2) 고령화 추이

- 경남의 고령인구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18개 시군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2012년 기준 경남의 시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10.0%로 2002년(7.0%) 대비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군지역의 경우 2012년 고령인구 비율이 26.4%로 2002년(19.5%) 대비 6.9% 증가하여 시지역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83] 고령화 추이(단위: 명, %)

구 분	노인인구수(명)		고령인구 비율(%)		
	2002	2012	2002	2012	증감폭
경 남	285,782	414,831	9.1	12.5	3.4
시지역	179,181	281,103	7.0	10.0	3.0
군지역	106,601	133,728	19.5	26.4	6.9
동부지역	178,207	271,188	7.6	10.5	2.9
동부권	106,568	157,888	7.0	9.9	2.9
동북부권	71,639	113,300	8.8	11.5	2.7
서부지역	107,575	143,643	13.8	19.4	5.5
서부권	65,917	90,260	11.6	16.4	4.8
서북부권	41,658	53,383	20.1	28.1	8.1
창원시	60,964	96,199	5.6	8.8	3.2
진주시	28,005	42,193	8.2	12.5	4.3
통영시	12,343	17,772	9.2	12.8	3.5
사천시	13,817	19,024	11.8	16.5	4.7
김해시	21,776	39,588	5.6	7.7	2.1
밀양시	17,122	22,721	14.2	20.9	6.7
거제시	12,541	17,710	6.9	7.5	0.6
양산시	12,613	25,896	6.1	9.6	3.5
의령군	7,772	9,274	23.7	30.6	6.8
함안군	9,765	12,675	15.2	18.8	3.6
창녕군	12,356	15,821	17.9	25.1	7.3
고성군	10,955	13,532	18.1	23.8	5.6
남해군	13,071	15,308	23.4	31.7	8.4
하동군	11,024	13,735	19.4	27.0	7.6
산청군	8,348	10,844	21.6	30.4	8.8
함양군	9,038	11,624	20.5	28.6	8.0
거창군	11,514	14,591	17.1	23.1	6.0
합천군	12,758	16,324	22.1	32.5	10.3

주1 : 노인인구수 : 65세 이상 인구수

주2 : 고령인구 비율 = (노인인구수 / 총인구수) × 100

주3 : 고령화사회 : 고령인구 비율 ≥ 7%, 고령사회 : 고령인구 비율 ≥ 14%, 초고령사회 : 고령인구 비율 ≥ 20%

주4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해당연도

- 군지역의 10년간 고령인구 비율 증가폭을 보면 합천군이 10.3% 증가하여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산청군(8.8%), 남해군(8.4%), 함양군(8.0%) 순으로 큰 증가세를 보임
- 18개 시군지역 중 10년간 가장 낮은 고령인구 증가세를 나타낸 거제시(0.6%)는 노동집약산업인 조선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동서지역 간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 증감폭은 동부지역이 2.9%, 서부지역이 5.5%로 나타나 서부지역이 동부지역의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권역으로 보면 서북부권이 8.1%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서북부권의 고령인구 비율 증감폭이 가장 높은 이유는 4개 군지역 중 합천군이 10.3%의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예상됨

(3) 인구이동 특성

- 경남의 전출입차는 4,332세대로 동부지역에서는 전입이 53,641세대, 서부지역에서는 전출이 49,309세대로 나타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서 인구이동의 뚜렷한 특성이 나타남
- 인근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이 위치하고 있는 동부지역의 전입 증가와 타 시도와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진주시와 사천시를 제외하고는 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부지역의 전출 증가를 보면, 이러한 특성은 접근성 보다는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주요권역별로는 동북부권에 61,459세대가 증가한 반면 동부권(7,818세대)과 서부권(34,300세대), 서북부권(15,009세대)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진주·사천·남해·하동이 포함된 서부권에서는 2002~2011년간 34,300세대가 감소하여 4개 권역 중 가장 많은 인구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진주·사천시의 인구이동 경향을 보면 사천시에서는 진주로, 진주시에서는 서울·부산으로 많은 인구가 경남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84] 인구이동 특성(단위: 세대)

구분		구분	전출입차	전출지역					전입지역				
		계	4,332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내부지역	동부권	창원시	-10,831	마산	김해	부산	서울	진해	마산	부산	김해	서울	진해
		마산시	-32,128	창원	부산	서울	경기	김해	창원	부산	함안	서울	경기
		진해시	16,996	부산	창원	경기	서울	마산	부산	창원	마산	경기	서울
		통영시	-3,668	부산	거제	서울	경기	창원	부산	거제	서울	경기	고성
		거제시	26,369	부산	통영	서울	경기	경북	부산	서울	통영	경기	경북
		함안군	-1,228	마산	창원	부산	서울	경기	마산	창원	부산	서울	김해
		고성군	-3,328	부산	마산	창원	통영	진주	부산	마산	통영	창원	진주
	소계	-7,818											
	동북부권	김해시	53,969	부산	창원	서울	경기	마산	부산	창원	마산	경기	서울
		밀양시	-10,548	부산	서울	김해	경북	창원	부산	김해	경북	창원	서울
		양산시	24,810	부산	울산	경기	서울	경북	부산	울산	경기	경북	서울
		의령군	-1,744	마산	부산	창원	진주	서울	부산	마산	창원	진주	함안
		창녕군	-5,028	대구	부산	창원	마산	경북	대구	부산	창원	마산	경북
		소계	61,459										
	계	53,641											
서부지역	서부권	진주시	-19,991	서울	부산	사천	경기	창원	사천	부산	서울	경기	하동
		사천시	-6,432	진주	부산	서울	경기	창원	진주	부산	경기	서울	창원
		남해군	-4,311	부산	서울	경기	진주	창원	부산	진주	서울	경기	창원
		하동군	-3,566	진주	부산	서울	경기	전남	진주	부산	경기	서울	전남
		소계	-34,300										
	서북부권	합천군	-4,542	대구	부산	경북	진주	서울	대구	부산	경북	진주	서울
		산청군	-2,494	진주	부산	서울	경기	창원	진주	부산	서울	경기	창원
		함양군	-2,921	서울	부산	경기	진주	거창	부산	서울	경기	진주	거창
		거창군	-5,052	서울	대구	경기	부산	경북	대구	부산	서울	경기	경북
		소계	-15,009										
	계	-49,309											

주 : 인구이동 특성은 2002년~2011년 자료임

(4) 경제지표

■ 주요산업 구성배분

- 2009년 지역내총생산 기준 구성비율은 농림어업의 경우 시지역과 군지역에서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과 사업 서비스업의 경우 90%이상이 시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
- 공공행정의 경우도 시지역에서 72.7%로 나타나 군지역보다는 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서지역 간의 격차를 보면 농림어업은 동부지역(56.0%)과 서부지역(44.0%)이 8% 정도의 차이를 보여 심화양상을 나타내지는 않으나, 제조업과 사업 서비스업은 동부지역(제조업 93.9%, 사업 서비스업 83.9%)에 80% 이상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서부지역 제조업 6.1%, 사업 서비스업 16.1%에 불과)

[표 2-85] 주요산업 구성배분(2009년 GRDP 기준) (단위: %)

시지역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계					
농림어업	6.6		11.3		7.0		4.9		4.5		12.9		2.1		2.0		51.3					
제조업	43.6		1.6		4.2		4.0		10.7		0.8		20.1		9.1		94.1					
사업 서비스업	49.7		10.2		3.0		1.8		11.6		2.9		8.1		4.4		91.7					
공공행정	37.3		9.9		3.8		5.7		5.3		3.3		3.1		4.3		72.7					
군지역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계	
농림어업	4.4		5.8		6.2		5.5		3.8		3.7		4.7		3.9		5.7		5.0		48.7	
제조업	0.3		3.0		0.8		1.1		0.0		0.1		0.1		0.2		0.2		0.1		5.9	
사업 서비스업	0.2		1.0		0.7		1.3		0.8		1.6		0.4		0.5		1.2		0.6		8.3	
공공행정	2.3		2.3		4.7		2.6		2.0		2.6		2.4		2.4		2.9		3.1		27.3	
동부지역	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계	
농림어업	6.6		7.0		4.5		12.9		2.1		2.0		4.4		5.8		6.2		5.5		56.0	
제조업	43.6		4.2		10.7		0.8		20.1		9.1		0.3		3.0		0.8		1.1		93.9	
사업 서비스업	49.7		3.0		11.6		2.9		8.1		4.4		0.2		1.0		0.7		1.3		83.9	
공공행정	37.3		3.8		5.3		3.3		3.1		4.3		2.3		2.3		4.7		2.6		69.0	
서부지역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계					
농림어업	11.3		4.9		3.8		3.7		4.7		3.9		5.7		5.0		44.0					
제조업	1.6		4.0		0.0		0.1		0.1		0.2		0.2		0.1		6.1					
사업 서비스업	10.2		1.8		0.8		1.6		0.4		0.5		1.2		0.6		16.1					
공공행정	9.9		5.7		2.0		2.6		2.4		2.4		2.9		3.1		31.0					

주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자료 : 통계청, 지역계정, 2011

(5) 산업지표

■ 산업단지 현황

- 지정면적은 시지역이 77.1%, 군지역이 22.9%로 나타남에 따라 시지역은 군지역의 약 2.4배 지정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지역 중 가장 높은 지정비율을 보이는 창원시(36.2%)에는 기계류 생산의 집적지인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거제시(12.1%)에는 조선산업의 메카인 옥포국가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음
- 지정면적의 동서지역 간 격차를 보면 동부지역(79.2%)이 서부지역(22.8%)의 약 3.5배 수준이며, 세부권역에서는 동부권이 64.0%로 나타나 경남의 지정면적 대부분이 동부권에 편중되어 있음
- 미분양율은 동부지역(2.4%)이 서부지역(5.9%)의 약 45% 수준이며, 세부권역에서는 동부권이 1.8%로 타 3개 권역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표 2-86] 산업단지 현황 (단위: 개소, 천㎡, %)

구분	단지수 (개소)	지정면적 (천㎡)	산업시설용지				
			분양대상 면적(천㎡)	개발면적 (천㎡)	분양 (천㎡)	미분양 (천㎡)	미분양율 (%)
경 남	176	124,230 (100.0)	80,906 (100.0)	59,203 (100.0)	57,376 (100.0)	1,826	3.1
시지역	95	95,725 (77.1)	60,274 (74.5)	48,319 (81.6)	47,282 (82.4)	1,036	2.1
군지역	81	28,505 (22.9)	20,632 (25.5)	10,884 (18.4)	10,094 (17.6)	790	7.3
동부지역	115	98,333 (79.2)	62,443 (77.2)	48,376 (81.7)	47,193 (82.3)	1,184	2.4
동부권	59	79,542 (64.0)	48,896 (60.4)	39,121 (66.1)	38,425 (67.0)	696	1.8
동북부권	56	18,791 (15.1)	13,547 (16.7)	9,255 (15.6)	8,768 (15.3)	488	5.3
서부지역	61	25,897 (20.8)	18,463 (22.8)	10,827 (18.3)	10,183 (17.7)	642	5.9
서부권	35	21,303 (17.1)	15,213 (18.8)	8,045 (13.6)	7,561 (13.2)	483	6.0
서북부권	26	4,594 (3.7)	3,250 (4.0)	2,782 (4.7)	2,622 (4.6)	159	5.7
창원시	15	45,016 (36.2)	25,435 (31.4)	22,929 (38.7)	22,464 (39.2)	465	2.0
진주시	12	5,916 (4.8)	3,943 (4.9)	3,652 (6.2)	3,239 (5.6)	412	11.3
통영시	4	6,811 (5.5)	5,285 (6.5)	3,089 (5.2)	3,089 (5.4)	0	0.0
사천시	16	7,915 (6.4)	5,819 (7.2)	4,143 (7.0)	4,072 (7.1)	71	1.7
김해시	21	6,216 (5.0)	4,514 (5.6)	2,361 (4.0)	2,328 (4.1)	34	1.4
밀양시	11	3,714 (3.0)	2,572 (3.2)	1,733 (2.9)	1,696 (3.0)	36	2.1
거제시	7	14,994 (12.1)	9,058 (11.2)	7,527 (12.7)	7,527 (13.1)	0	0.0
양산시	9	5,143 (4.1)	3,648 (4.5)	2,885 (4.9)	2,867 (5.0)	18	0.6
의령군	6	1,260 (1.0)	949 (1.2)	679 (1.1)	679 (1.2)	0	0.0
함안군	20	9,334 (7.5)	6,667 (8.2)	4,402 (7.4)	4,171 (7.3)	231	5.2
창녕군	9	2,458 (2.0)	1,864 (2.3)	1,597 (2.7)	1,198 (2.1)	400	25.0
고성군	13	3,387 (2.7)	2,451 (3.0)	1,174 (2.0)	1,174 (2.0)	0	0.0
남해군	1	59 (0.0)	48 (0.1)	48 (0.1)	48 (0.1)	0	0.0
하동군	6	7,413 (6.0)	5,403 (6.7)	202 (0.3)	202 (0.4)	0	0.0
산청군	6	726 (0.6)	550 (0.7)	411 (0.7)	411 (0.7)	0	0.0
함양군	8	1,699 (1.4)	1,119 (1.4)	1,026 (1.7)	1,023 (1.8)	3	0.3
거창군	9	1,726 (1.4)	1,216 (1.5)	980 (1.7)	823 (1.4)	156	15.9
합천군	3	443 (0.4)	365 (0.5)	365 (0.6)	365 (0.6)	0	0.0

주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2013.09

■ 개별용지 공급현황

- 개별입지면적(경남 39,957천㎡) 또한 군지역(29.5%)에 비해 시지역(70.5%)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난개발의 대표적인 도시로 거론되는 김해시가 36.2%로 압도적으로 나타나 군지역 전체(29.5%)보다도 높은 실정임
- 동서지역 간 격차는 개별입지면적의 경우 동부지역이 88.7%, 서부지역이 11.3%로 나타나 급격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음

[표 2-87] 개별용지 공급현황 (단위: 개소, 천㎡, %)

구 분	개 별 입 지		
	공장수(개소)	용지면적(천㎡)	면적비중(%)
경 남	11,286 (100.0)	39,957	100.0
시지역	9,184 (81.4)	28,163	70.5
군지역	2,102 (18.6)	11,794	29.5
동부지역	10,183 (90.2)	35,446	88.7
동부권	3,034 (26.9)	11,780	29.5
동북부권	7,149 (63.3)	23,666	59.2
서부지역	1,103 (9.8)	4,511	11.3
서부권	776 (6.9)	2,877	7.2
서북부권	327 (2.9)	1,634	4.1
창원시	1,536 (13.6)	3,350	8.4
진주시	349 (3.1)	940	2.4
통영시	146 (1.3)	533	1.3
사천시	279 (2.5)	1,361	3.4
김해시	5,184 (45.9)	14,444	36.2
밀양시	257 (2.3)	1,478	3.7
거제시	116 (1.0)	1,254	3.1
양산시	1,317 (11.7)	4,803	12.0
의령군	68 (0.6)	559	1.4
함안군	1,098 (9.7)	5,101	12.8
창녕군	323 (2.9)	2,383	6.0
고성군	138 (1.2)	1,541	3.9
남해군	55 (0.5)	136	0.3
하동군	93 (0.8)	441	1.1
산청군	86 (0.8)	464	1.2
함양군	93 (0.8)	517	1.3
거창군	77 (0.7)	355	0.9
합천군	71 (0.6)	298	0.7

주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2013.09.

■ 특례법에 의한 경남지역의 산업단지 개발

- 중앙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특례법을 제정하였음(2008.9)
- 이에 따라 경남에서도 특례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2010년 말 특례법 절차에 의한 90개 단지 중 38개 단지가 승인되었고, 52개는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기존에 국가지방 산업단지가 많이 입지해 있어서 이미 산업기능이 집적해 있거나 대도시 지역에 인접해 있어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음
 - 산업단지 건수로는 대도시 지역과 인접해 있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기존에 산업 집적지를 이루고 있는 김해시가 2010년말 현재 전체 90건중 22건(20.4%)으로 가장 많은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함안·고성·창원·사천·양산·거제·창녕에서 비교적 많이 일어나고 있음
 - 면적의 경우, 역시 김해시가 건수의 경우보다 점유비가 더 높은 경남 전체(40,314천㎡)의 27.7%(12,734천㎡)를 차지하고 있고¹⁸⁾, 다음으로 함안(8.7%)·거제(8.3%)·사천(7.5%)·통영(6.4%)·창원(6.2%)·고성(6.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모두 개발된다고 할 경우 2010년말 현재 경남지역에 공급되어 있는 산업용지(계획+개별:82,715천㎡)의 1/3에 해당하는 산업용지(27,573천㎡)¹⁹⁾가 추가 공급되는 상황임
- 그리고 경남도내에는 특례법 시행 이후 2010년말 현재 특례법에 의해 38개 단지가 승인되었는데, 고성군이 6개 단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김해·함안·창원(각 4개)·사천·통영·밀양·창녕(각 3개)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음
 - 면적의 경우는 통영이 가장 많은 2,942천㎡ 지정면적에 17.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고성(13.3%)·함안(12.9%)·밀양(10.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들은 기존 산업집적지 주변지역이거나 국가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어서 산업용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최근 산업입지로 부상하고 있는 곳임

18) 건수나 면적에서 공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김해시의 경우는 2010년말 현재 산업용지(15,443천㎡)의 약 75%에 해당하는 산업용지가 특례법 절차에 의해 추가 공급될 예정임.

19) 산업단지 면적의 60%를 가정한 산업시설용지 면적임.

[표 2-88] 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동향(2010.12) (단위: 개소, 천㎡, %)

구 분		승인절차 진행 산단		승인(지정) 산단		합 계	
		단지수(비율)	면적(비율)	단지수(비율)	면적(비율)	단지수(비율)	면적(비율)
합 계		67(100)	29,416(100)	41(100)	16,539(100)	108(100)	45,955(100)
경 남	소 계	52(77.6)	24,224(82.3)	38(92.7)	16,090(97.3)	90(83.3)	40,314(87.7)
	김해시	18(26.9)	12,156(41.3)	4(9.8)	578(3.5)	22(20.4)	12,734(27.7)
	함안군	7(10.4)	1,863(6.3)	4(9.8)	2,134(12.9)	11(10.2)	3,997(8.7)
	거제시	4(6.0)	2,586(8.8)	1(2.4)	1,210(7.3)	5(4.6)	3,796(8.3)
	사천시	5(7.5)	2,359 (8.0)	3(7.3)	1,067(6.5)	8(7.4)	3,426(7.5)
	통영시	-	-	3(7.3)	2,942(17.8)	3(2.8)	2,942(6.4)
	창원시	5(7.5)	1,953(6.6)	4(9.8)	898(5.4)	9(8.3)	2,851(6.2)
	고성군	4(6.0)	599(2.0)	6(14.6)	2,193(13.3)	10(9.3)	2,792(6.1)
	밀양시	1(1.5)	296(1.0)	3(7.3)	1,714(10.4)	4(3.7)	2,010(4.4)
	창녕군	2(3.0)	280(1.0)	3(7.3)	1,660(10.0)	5(4.6)	1,940(4.2)
	양산시	4(6.0)	1,436(4.9)	2(4.9)	458(2.8)	6(5.6)	1,894(4.1)
	거창군	-	-	1(2.4)	745(4.5)	1(0.9)	745(1.6)
	함양군	2(3.0)	696(2.4)	-	-	2(1.9)	696(1.5)
	진주시	-	-	2(4.9)	270(1.6)	2(1.9)	270(0.6)
	하동군	-	-	1(2.4)	147(0.9)	1(0.9)	147(0.3)
	산청군	-	-	1(2.4)	74(0.4)	1(0.9)	74(0.2)

자료 : 승인절차 진행 중인 산업단지는 투자의향서, 승인된 산업단지는 승인 후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

(6) 사회복지지표

■ 시설현황

-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시지역과 군지역이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여성복지시설의 경우 17개소 모두 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창원시 58.8%)
-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함양군,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창녕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에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군지역에 복지시설이 부족함
- 동서지역 간 격차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은 대등한 수준이며, 여성복지시설은 94.1%가 동부권에 편중되어 있고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동부권에 각각 80.8%, 70.0%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서부권에는 복지시설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표 2-89]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경 남	7,401 (100.0)	30 (100.0)	26 (100.0)	17 (100.0)
시지역	3,653 (49.4)	19 (63.3)	18 (69.2)	17 (100.0)
군지역	3,748 (50.6)	11 (36.7)	8 (30.8)	- (-)
동부지역	4,140 (55.9)	21 (70.0)	21 (80.8)	16 (94.1)
동부권	2,211 (29.9)	13 (43.3)	13 (50.0)	13 (76.5)
동북부권	1,929 (26.1)	8 (26.7)	8 (30.8)	3 (17.6)
서부지역	3,261 (44.1)	9 (30.0)	5 (19.2)	1 (5.9)
서부권	1,529 (20.7)	5 (16.7)	3 (11.5)	1 (5.9)
서북부권	1,732 (23.4)	4 (13.3)	2 (7.7)	0 (0.0)
창원시	1,014 (13.7)	7 (23.3)	6 (23.1)	10 (58.8)
진주시	535 (7.2)	1 (3.3)	1 (3.8)	1 (5.9)
통영시	208 (2.8)	1 (3.3)	1 (3.8)	3 (17.6)
사천시	340 (4.6)	1 (3.3)	1 (3.8)	- (-)
김해시	565 (7.6)	3 (10.0)	3 (11.5)	2 (11.8)
밀양시	404 (5.5)	1 (3.3)	3 (11.5)	- (-)
거제시	312 (4.2)	3 (10.0)	2 (7.7)	- (-)
양산시	275 (3.7)	2 (6.7)	1 (3.8)	1 (5.9)
의령군	298 (4.0)	1 (3.3)	1 (3.8)	- (-)
함안군	344 (4.6)	1 (3.3)	1 (3.8)	- (-)
창녕군	387 (5.2)	1 (3.3)	- (-)	- (-)
고성군	333 (4.5)	1 (3.3)	3 (11.5)	- (-)
남해군	280 (3.8)	2 (6.7)	1 (3.8)	- (-)
하동군	374 (5.1)	1 (3.3)	- (-)	- (-)
산청군	359 (4.9)	2 (6.7)	- (-)	- (-)
함양군	402 (5.4)	- (-)	1 (3.8)	- (-)
거창군	436 (5.9)	1 (3.3)	- (-)	- (-)
합천군	535 (7.2)	1 (3.3)	1 (3.8)	- (-)

주1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주2 : 아동복지시설 - 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주3 : 여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시설, 소외여성복지시설

주4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2

(7) 교육지표

■ 초등학교 학생수

- 2012년 기준 시지역의 교원1인당 초등학교수는 16.6명으로 군지역(9.0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대등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기준 교원1인당 초등학교수는 동서간 지역에서 또한 동부지역(16.0명)이 서부지역(12.8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권역으로 보면 서북부권이 8.8명으로 동부지역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90] 초등학교 학생수 (단위: 명, %)

구 분	2002		2007		2012		연평균 증가율(%)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경 남	278,337	26.8	264,776	22.1	202,320	15.2	-3.1	-5.5
시지역	244,500	29.5	235,253	24.0	181,197	16.6	-3.0	-5.6
군지역	33,837	16.2	29,523	13.4	21,123	9.0	-4.6	-5.7
동부지역	220,387	28.3	211,496	23.1	162,712	16.0	-3.0	-5.6
동부권	143,051	29.2	129,734	23.6	97,319	16.1	-3.8	-5.8
동북부권	77,336	26.8	81,762	22.4	65,393	15.8	-1.7	-5.1
서부지역	57,950	22.3	53,280	18.7	39,608	12.8	-3.7	-5.4
서부권	45,548	25.0	41,974	21.0	31,558	14.5	-3.6	-5.3
서북부권	12,402	16.0	11,306	13.2	8,050	8.8	-4.2	-5.8
창원시	107,402	32.1	92,546	25.4	66,278	17.0	-4.7	-6.2
진주시	29,858	28.7	27,619	23.6	21,185	16.3	-3.4	-5.5
통영시	10,150	23.1	9,867	19.9	8,162	15.3	-2.2	-4.0
사천시	8,916	24.6	8,600	20.9	6,577	14.2	-3.0	-5.3
김해시	40,630	29.8	47,827	25.3	38,809	17.7	-0.5	-5.1
밀양시	8,651	23.4	7,122	17.5	4,974	12.7	-5.4	-6.0
거제시	17,084	27.3	19,936	23.3	17,017	16.3	0.0	-5.1
양산시	21,809	29.5	21,736	23.1	18,195	16.3	-1.8	-5.7
의령군	1,770	11.4	1,414	9.1	998	5.7	-5.6	-6.7
함안군	4,664	18.4	4,245	15.5	3,514	11.8	-2.8	-4.3
창녕군	4,476	17.7	3,663	14.3	2,417	9.5	-6.0	-6.1
고성군	3,751	15.8	3,140	13.2	2,348	8.5	-4.6	-6.0
남해군	3,232	17.7	2,663	14.2	1,768	9.4	-5.9	-6.2
하동군	3,542	15.1	3,092	13.4	2,028	8.6	-5.4	-5.4
산청군	1,952	13.2	1,710	10.6	1,280	7.6	-4.1	-5.4
함양군	2,665	16.0	2,426	13.4	1,857	9.2	-3.5	-5.3
거창군	4,808	20.2	4,530	16.1	3,293	10.8	-3.7	-6.0
합천군	2,977	13.5	2,640	11.4	1,620	6.8	-5.9	-6.7

주1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주2 : 연평균 증감률은 2002~2012 수치임

자료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 중학교 학생수

- 2012년 기준 시지역의 교원1인당 중학생수는 19.3명으로 군지역(11.3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시지역과 군지역이 각각 1.0%, 0.1% 감소함에 따라 시지역의 중학생 유입을 예상할 수 있음
- 2012년 기준 교원1인당 중학생수는 동서간 지역에서 또한 동부지역(18.7명)이 서부지역(15.4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권역으로 보면 서북부권이 11.6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91] 중학교 학생수 (단위: 명, %)

구 분	2002		2007		2012		연평균 증가율(%)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경 남	120,998	19.1	138,629	19.0	126,510	17.9	0.4	-0.7
시지역	105,087	21.3	123,435	20.9	112,427	19.3	0.7	-1.0
군지역	15,911	11.3	15,194	10.7	14,083	11.3	-1.2	-0.1
동부지역	93,492	20.3	110,037	19.9	100,239	18.7	0.7	-0.9
동부권	63,656	20.9	69,468	20.3	61,547	18.9	-0.3	-1.0
동북부권	29,836	19.2	40,569	19.4	38,692	18.3	2.6	-0.5
서부지역	27,506	15.9	28,592	15.9	26,271	15.4	-0.5	-0.3
서부권	21,307	18.0	22,846	18.2	20,771	16.8	-0.3	-0.7
서북부권	6,199	11.3	5,746	10.5	5,500	11.6	-1.2	0.2
창원시	47,674	22.7	52,027	21.8	43,246	19.9	-1.0	-1.3
진주시	14,219	21.5	15,682	22.4	14,280	20.0	0.0	-0.8
통영시	5,221	19.6	5,085	18.4	4,798	17.3	-0.8	-1.3
사천시	3,745	16.9	4,035	16.4	3,789	16.1	0.1	-0.5
김해시	15,274	22.3	23,311	22.3	23,519	20.4	4.4	-0.9
밀양시	4,199	16.3	4,149	15.5	2,405	10.0	-5.4	-4.7
거제시	7,303	18.6	8,806	18.8	9,923	19.2	3.1	0.3
양산시	7,452	21.5	10,340	20.3	10,467	20.2	3.5	-0.6
의령군	793	8.7	727	8.0	604	8.9	-2.7	0.2
함안군	1,845	14.2	1,958	13.6	2,113	14.5	1.4	0.2
창녕군	2,118	12.3	2,042	11.3	1,697	12.5	-2.2	0.1
고성군	1,613	10.0	1,592	10.3	1,467	10.3	-0.9	0.3
남해군	1,669	11.0	1,516	9.7	1,290	9.3	-2.5	-1.6
하동군	1,674	11.2	1,613	10.8	1,412	9.8	-1.7	-1.4
산청군	934	8.2	740	7.7	754	8.4	-2.1	0.2
함양군	1,308	14.4	1,268	12.7	1,148	12.3	-1.3	-1.5
거창군	2,420	13.4	2,499	13.3	2,403	14.3	-0.1	0.6
합천군	1,537	9.5	1,239	7.7	1,195	9.7	-2.5	0.2

주1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주2 : 연평균 증감률은 2002~2012 수치임

자료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 고등학교 학생수

- 2012년 기준 시지역의 교원1인당 고등학생수는 15.9명으로 군지역(10.9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시지역이 0.4% 증가, 군지역이 0.6% 감소함에 따라 군지역의 고등학생 유출을 예상할 수 있음
- 2012년 기준 교원1인당 고등학생수는 동서간 지역에서 또한 동부지역(15.9명)이 서부지역(12.8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권역으로 보면 서북부권이 10.7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92] 고등학교 학생수 (단위: 명, %)

구 분	2002		2007		2012		연평균 증가율(%)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경 남	117,129	14.5	119,431	14.8	129,209	15.1	1.0	0.4
시지역	99,317	15.2	105,029	15.7	113,530	15.9	1.3	0.4
군지역	17,812	11.6	14,402	10.3	15,679	10.9	-1.3	-0.6
동부지역	85,377	15.3	92,087	15.7	100,370	15.9	1.6	0.4
동부권	60,059	15.7	60,878	16.1	63,006	16.0	0.5	0.2
동북부권	25,318	14.3	31,209	15.2	37,364	15.6	4.0	0.9
서부지역	31,752	12.8	27,344	12.3	28,839	12.8	-1.0	0.0
서부권	24,410	13.3	21,539	13.2	22,375	13.6	-0.9	0.2
서북부권	7,342	11.4	5,805	9.9	6,464	10.7	-1.3	-0.7
창원시	44,167	15.8	46,447	16.5	46,154	16.3	0.4	0.3
진주시	17,548	14.3	15,695	14.4	15,951	14.9	-0.9	0.4
통영시	5,203	17.6	4,375	15.7	4,686	16.4	-1.0	-0.7
사천시	3,653	11.3	3,239	11.1	3,542	11.7	-0.3	0.3
김해시	11,375	15.6	16,640	16.8	20,766	17.0	6.2	0.8
밀양시	4,630	14.0	3,653	12.3	3,564	12.2	-2.6	-1.3
거제시	6,671	15.8	6,855	16.1	8,662	16.4	2.6	0.4
양산시	6,070	15.2	8,125	16.8	10,205	16.9	5.3	1.1
의령군	565	8.4	595	9.6	603	9.4	0.7	1.1
함안군	1,817	12.1	1,499	11.1	1,607	11.5	-1.2	-0.5
창녕군	2,678	11.0	2,196	9.8	2,226	10.7	-1.8	-0.3
고성군	2,201	13.8	1,702	12.2	1,897	12.3	-1.5	-1.1
남해군	2,003	12.1	1,640	10.6	1,842	11.2	-0.8	-0.7
하동군	1,206	10.8	965	9.7	1,040	10.3	-1.5	-0.4
산청군	1,206	8.3	863	6.5	1,092	8.0	-1.0	-0.4
함양군	1,262	12.0	1,046	10.5	1,221	12.2	-0.3	0.2
거창군	3,495	14.2	2,834	12.2	2,943	12.5	-1.7	-1.3
합천군	1,379	9.4	1,062	8.7	1,208	9.0	-1.3	-0.5

주1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주2 : 연평균 증감률은 2002~2012 수치임

자료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8) 주택 및 도시화지표

■ 주택유형

- 군지역의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비율이 81.6%이고 주택보급률이 112.3%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시지역 인구의 주말농장 및 세컨드하우스 등에 대한 수요증가가 원인으로 보임
- 동서간 지역의 세부권역 중 서북부권의 단독주택 비율(83.6%)과 주택보급률(111.8%) 또한 시군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컨드하우스 등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

[표 2-93] 주택유형 및 주택보급률 (단위: 호, %)

구 분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주택 보급률
전 국	17,733,830 (100.0)	7,022,466 (39.6)	8,308,021 (46.8)	522,836 (2.9)	1,273,229 (7.2)	607,278 (3.4)	102.7
경 남	1,233,667 (100.0)	612,936 (49.7)	571,328 (46.3)	25,216 (2.0)	24,187 (2.0)	- (-)	104.9
시지역	1,016,395 (100.0)	435,550 (42.9)	538,419 (53.0)	20,647 (2.0)	21,779 (2.1)	- (-)	103.5
군지역	217,272 (100.0)	177,386 (81.6)	32,909 (15.1)	4,569 (2.1)	2,408 (1.1)	- (-)	112.3
동부지역	933,670 (100.0)	409,458 (43.9)	482,767 (51.7)	20,267 (2.2)	21,178 (2.3)	- (-)	103.9
동부권	577,780 (100.0)	266,249 (46.1)	288,702 (50.0)	15,135 (2.6)	7,694 (1.3)	- (-)	103.5
동북부권	355,890 (100.0)	143,209 (40.2)	194,065 (54.5)	5,132 (1.4)	13,484 (3.8)	- (-)	104.5
서부지역	299,997 (100.0)	203,478 (67.8)	88,561 (29.5)	4,949 (1.6)	3,009 (1.0)	- (-)	108.2
서부권	217,907 (100.0)	134,833 (61.9)	77,669 (35.6)	3,056 (1.4)	2,349 (1.1)	- (-)	106.9
서북부권	82,090 (100.0)	68,645 (83.6)	10,892 (13.3)	1,893 (2.3)	660 (0.8)	- (-)	111.8
창원시	385,519	165,394	204,559	10,287	5,279	-	102.6
진주시	129,082	71,666	54,649	1,178	1,589	-	104.2
통영시	55,519	29,932	23,780	1,199	608	-	107.4
사천시	46,215	24,985	19,486	1,378	366	-	110.2
김해시	172,868	53,834	107,045	1,570	10,419	-	100.2
밀양시	44,702	30,381	12,552	1,071	698	-	111.0
거제시	85,389	34,223	47,150	2,764	1,252	-	101.6
양산시	97,101	25,135	69,198	1,200	1,568	-	105.4
의령군	13,429	12,192	855	282	100	-	115.1
함안군	26,827	17,744	8,600	335	148	-	109.1
창녕군	27,790	21,667	4,415	1,009	699	-	116.2
고성군	24,526	18,956	4,613	550	407	-	112.3
남해군	22,266	20,155	1,624	294	193	-	113.2
하동군	20,344	18,027	1,910	206	201	-	111.3
산청군	15,697	14,509	954	184	50	-	116.5
함양군	17,815	14,762	2,449	519	85	-	107.7
거창군	25,832	18,786	6,039	680	327	-	110.4
합천군	22,746	20,588	1,450	510	198	-	113.6

주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1

■ 도시화 추이

- 2012년 기준 도시화율은 시지역이 91.1%로 군지역(48.5%)에 비해 뚜렷한 차이가 있었으나, 동서간 지역에서는 동부지역(88.0%)과 서부지역(72.8%)에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그러나 세부권역 중 서북부권은 도시화율이 55.2%로 4개 권역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2-94] 도시화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도시지역 기준 도시인구		행정구역 기준 도시인구		도시화율			
					도시지역 인구기준		행정구역 인구기준	
	2007	2012	2007	2012	2007	2012	2007	2012
경 남	2,712,749	2,809,177	2,403,786	2,487,466	84.9	84.6	75.2	74.9
시지역	2,478,565	2,563,488	2,221,540	2,301,197	92.6	91.1	83.0	81.8
군지역	234,184	245,689	182,246	186,269	45.1	48.5	35.1	36.8
동부지역	2,182,123	2,269,376	1,958,838	2,043,692	89.1	88.0	89.8	90.1
동부권	1,409,053	1,398,275	1,337,161	1,369,899	91.2	87.8	94.9	98.0
동북부권	773,070	871,101	621,677	673,793	85.7	88.4	80.4	77.3
서부지역	530,626	539,801	444,948	443,774	70.8	72.8	83.9	82.2
서부권	434,850	435,020	367,738	366,283	78.5	78.9	84.6	84.2
서북부권	95,776	104,781	77,210	77,491	49.0	55.2	80.6	74.0
창원시	1,062,509	1,047,538	1,038,424	1,047,538	98.1	96.0	95.9	96.0
진주시	305,255	307,801	271,205	272,626	92.3	91.3	82.0	80.8
통영시	113,900	103,301	98,714	93,531	84.7	74.1	73.4	67.1
사천시	95,584	94,466	70,080	68,739	85.0	81.9	62.3	59.6
김해시	440,976	487,619	327,804	343,678	94.8	95.0	70.5	67.0
밀양시	61,605	69,297	67,296	65,244	55.3	63.7	60.4	60.0
거제시	170,794	186,692	158,363	183,856	82.0	78.8	76.1	77.6
양산시	227,942	266,774	189,654	225,985	98.3	98.6	81.8	83.6
의령군	9,523	13,245	9,523	9,736	30.3	43.7	30.3	32.1
함안군	34,216	35,114	18,217	18,648	52.7	52.1	28.1	27.7
창녕군	33,024	34,166	27,400	29,150	53.0	54.3	44.0	46.3
고성군	27,634	25,630	23,443	26,326	49.9	45.0	42.3	46.3
남해군	14,474	13,692	14,474	13,816	26.3	28.4	26.3	28.7
하동군	19,537	19,061	11,979	11,102	35.2	37.5	21.6	21.9
산청군	10,112	10,717	6,684	6,611	28.7	30.0	18.9	18.5
함양군	25,513	25,850	18,070	19,051	62.8	63.5	44.5	46.8
거창군	41,777	39,889	39,433	39,889	65.3	63.2	61.6	63.2
합천군	18,374	28,325	13,023	11,940	33.1	56.3	23.5	23.7

주 : 동부권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동북부권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서부권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서북부권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해당연도

2) 경상남도 지역 내 격차실태 종합 및 시사점

(1) 시군간 지역격차

- 교원1인당 초·중·고등학생수와 주택보급률 등 일부 지표에서 군지역이 생활여건이나 환경면에서 비교적 우월하기는 하나, 인구와 지역경제, 사회복지시설 등 종합적인 정주여건에서는 시지역을 앞서지 못하는 실정임
- 특히, 경제·산업의 경우 시지역은 특화산업으로 집적지를 이룬 반면 군지역은 1차 산업위주의 구조로 2차, 3차 산업에 대해서는 시지역에 비해 매우 열등한 수준임
- 그러나 시지역의 경우 김해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난무하여 오히려 경남도 내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2) 동서간 지역격차

- 동서간 격차는 시군간 지표의 격차 및 증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나, 인구와 개별용지 부분에서는 지역간 특징이 발견됨
- 인구분포의 경우 시군간 격차보다 동서간 격차가 비교적 적었으며, 이는 동부권에 경남도의 주요 시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서부권에도 2개 시지역(진주시, 사천시)이 포함되어 있어 격차가 시군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됨
- 개별용지 공급현황에서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비율이 9:1 정도로 나타남에 따라 시군지역의 격차보다 더욱 심화된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군지역 중 비교적 높은 면적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함안군(12.8%)이 동부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3) 시사점

- 시군간 지역격차와 동서간 지역격차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정주여건에 있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에서 정책적 개선과 관심이 필요함
- 시지역이 군지역에 비해 경제·산업측면에서 우월한 것은 사실이나, 김해시 등과 같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군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화산업을 집적화하여 경남 내 지역간 경제·산업적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복지시설의 경우 군지역에도 적절한 공급을 통해 군지역의 지역주민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경상남도의 이슈와 과제

(1) 창원, 마산, 진해 3개 시 통합에 의한 문제

-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3개 시가 통합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명칭, 시청 소재지 등에 의한 갈등이 심화되어 급기야 통합을 무산시키기 위해 마산시 분리법안이 발의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실정임
- 통합 당시부터 쟁점이었던 시청 소재지를 결정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 차원에서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으나, 현재에도 청사 소재지를 놓고 소재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진행 중임
- 2013년 10월 30일 실시한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통합창원시의 갈등이 주된 이슈가 되었으며, 경남도 내 지역간 갈등해소를 위해서라도 통합창원시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할 것임

(2)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갈등

- 경남도에서는 정책적으로 경남도 서부청사 건립과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여 경남 내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함
- 경남도에서는 현재의 도 산하 공공기관이 노후화와 공간협소 등의 문제로 증축에는 한계가 있으며,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과 접근성 등을 모색하여 이전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서부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이점이 있어 서부청사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나, 현재 공공기관 소재지인 창원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이며 행정상 불편함이 존재하고 도심지가 공동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12. 제주도

1) 주요 지표를 통한 격차실태

(1) 인구구조

- 제주지역의 인구규모를 보면, 전체 인구의 73.3%가 산북지역(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제주통계연보, 2012)
- 2012년 기준으로 행정시별²⁰⁾ 인구 규모는 제주시 지역 427,593명(73.3%), 서귀포시 지역 155,691명(26.7%)으로 나타남
- 행정시인 제주시는 19동과 7개 읍면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주시 동(洞) 지역 인구는 338,384명(79.1%), 읍면지역 인구는 89,209명(20.9%)임. 다른 한편으로 서귀포시 동지역 인구는 85,293명(54.8%), 읍면지역 인구는 70,398명(45.2%)로 나타남
- 따라서 제주지역 전체 인구 가운데 3/4 정도가 제주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 가운데 제주시 동(洞) 지역인구가 제주 전체 인구 가운데 58.0%를 차지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제주시 지역에 과밀 집중되어 있고, 동시에 읍면 지역 인구는 상대적으로 행정시 동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

(2) 지역내총생산(GRDP)

-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내총생산(이하 GRDP)를 비교해 보면(제주관광경제발전위원회, 2013. 3), 산북지역(제주시 지역)은 제주지역 전체 GRDP 비중 가운데 70.8%를 차지하여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산북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GRDP는 2009년 기준 9,648,788백만원이고, 행정시인 제주시는 6,834,646백만원(70.8%), 서귀포시는 2,813,142백만원(29.2%)으로 나타남
- 농림어업 비중은 산북지역(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남지역(서귀포시)에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은 제주시 지역이 높게 나타남
- 제주지역 전체 농림어업 생산액 가운데 서귀포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7.1%이

20)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2006. 7. 1)하면서 기존에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통합되어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로 변화하였음. 다시 말해서,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통합되었고, 반면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서귀포시가 재편화되었다.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갖지 못한 행정체제임.

고, 다른 한편으로 서귀포시의 교육서비스업은 22.6%, 그리고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은 28.9%를 차지하여 산북지역(제주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3) 사업체 수

- 2011년 기준(제주통계연보, 2012) 제주지역 총 사업체 수는 47,144개소이고 이 가운데 73.8%가 산북지역(제주시)에 소재하고 있음. 이처럼 경제활동 기회도 제주시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음
- 행정시별 사업체 수는 제주시 지역 34,850개소(73.8%), 서귀포시 지역 12,294개소(26.2%)임

(4) 사업체 종사자 수

- 2011년 기준(제주통계연보, 2012)으로 제주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를 행정시별로 비교하면,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75.9%가 산북지역(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음
- 제주지역의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3,757명이고, 그리고 제주시 지역(산북지역)은 154,733명(75.9%), 서귀포시지역(산남지역)은 49,024명(24.1%)로 나타남

(5) 재정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별 지방세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면 지역경제 측면에서 지역역불균형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음

[표 2-95] 지방세 부담 (단위 : 백만원, 원)

구 분	지방세 (백만원)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원)
도 본청	135,645	235,431
제주시(행정시)	342,547	810,206
서귀포시(행정시)	103,238	673,148
총 액	581,430	1,009,154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2012.

- 지방세 부담을 비교해 보면, 제주시(산북지역)이 전체 지방세 부담액 비중의 58.9%를 차지하여 서귀포시(산남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또한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제주시(산북지역)가 서귀포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도별 지방세 수입의 지역별 불균형 지니계수를 보면 <표 2-100>에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시(산북지역)과 서귀포시(산남지역)간에 불균형 정도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96] 지방세의 지역불균형 지니계수(2005-2011)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니계수	0.246	216	0.209	0.232	0.232	0.232	0.247

(6) 생활기반 부문

- 생활기반 시설을 비교해 보면, 도시계획 상 용도지역 가운데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업 및 공업지역의 경우 산북지역(제주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97]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현황 (단위 : km²)

구 분	용도지역					
	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미지정
제주시(행정시)	224.53	24.57	4.14	2.87	184.24	8.71
서귀포시(행정시)	224.70	19.61	2.08	1.79	194.77	6.45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2011.

(7) 복지기반 부문

- 복지기반 부문을 비교해 보면, 제주시(산북지역)가 서귀포시(산남지역)보다 의료기관(병상수), 사회복지시설, 노인주거·의료·재가시설, 보육시설, 장애인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성복지시설은 제주시(산북지역)에 8개소 있는 반면에 서귀포시(산남지역)에는 1개소에 불과함

[표 2-98] 복지여건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복지여건부문						
	의료기관 (병상수)	사회 복지시설	노인주거·의료· 재가시설	여성 복지시설	보육시설 (국공립, 민간 포함)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복지시설
제주시(행정시)	465(3,494)	32	75	8	417	9	3
서귀포시(행정시)	142(558)	10	34	1	135	3	2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2012.

-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으로 인식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포를 보면(표 5. 참고), 제주시(산북지역)의 경우 전체 제주시 인구 427,593명 가운데 3.91%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반면에 서귀포시(산남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인구 155,691명 중 4.70%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다고 볼 수 있음

[표 2-9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단위 : 가구, 시설수, 인원)

구 분	가 구	시 설 수	인 원
제주시(행정시)	8,509	55	16,737
서귀포시(행정시)	3,968	20	7,318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2012.

(8) 문화부문

- 제주시(산북지역)는 서귀포시(산남지역)에 비하여 문화재와 공연전시장 시설은 상대적으로 많고, 반면에 공공체육시설과 1인당 도서관 좌석수에 있어서는 서귀포시가 많음

[표 2-100] 문화여건 현황 (단위: 개소)

부 문	문화부문			
	문화재	공공체육 시설	인구 당 도서관 좌석수(개/천명)	공연.전시장
제주시(행정시)	218	113	3,272(7.6)	54
서귀포시(행정시)	146	147	5,474(35.1)	18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2012.

(9) 교육부문

- 제주시 지역(산북지역)에는 국립대학교 1개, 사립대학교 1개, 전문대학교 2개, 그리고 직업기술대학 1개가 있지만, 반면에 서귀포시 지역(산남지역)에는 대학이 전무한 실정임
- 고등학교 학생들의 4년제 대학 진학자의 도 전체 비율은 62.5%이지만 서귀포시 지역(산남지역)의 경우는 50% 수준에 못미치고 있음
- 4년제 육지부 대학 진학자의 경우 도 전체가 30.5%인데 비해 서귀포시 지역은 7%에도 못 미치고 있음

- 전문대학 진학자 비율은 도 전체가 41.6%이지만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는 50.4%로 나타남

[표 2-101] 서귀포시 지역 고등학교의 대학진학 현황(2012년 졸업생기준) (단위: 명, %)

구 분	도 전체		서귀포시 지역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재학생수	6,268	100	1,555	100
4년제 육지부 대학진학자	1,911	30.5	108	6.9
4년제 대학진학자	3,915	62.5	771	49.6
전문대 진학자	2,608	41.6	784	50.4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역균형발전체계 구축 : T/F팀 활동 결과 보고서」 2012. 6.

(10) 행정기반 부문

- 행정기반 부문에서 공무원 수를 보면(표 8. 참고), 제주시(산북지역)가 1,459명으로 서귀포시 1,055명 보다 공무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 천명당 공무원 수는 제주시 3.42명, 서귀포시 6.76명으로 인구 천명당 공무원 수는 서귀포시(산남지역)가 거의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방공무원 수는 제주시(산북지역)가 308명으로 서귀포시 237명 보다 상대적으로 많지만 인구 천명당 소방 공무원 수는 서귀포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02] 행정서비스 현황 (단위: 명)

부 문	행정서비스			
	공무원수 *	인구당 공무원 수 (천명 당)	소방공무원수	인구 당 소방공무원수 (천명 당)
제주시(행정시)	1,459	3.42	308	0.73
서귀포시(행정시)	1,055	6.76	237	1.52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도의회 사무처, 도 직속기관 및 도 사업소 관련 공무원 총수는 2,499명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2012.

2) 제주도 지역 내 격차실태 종합 및 시사점

- 제주지역의 지역격차 문제는 제주시(산북지역)과 서귀포시(산남지역) 그리고 제주시·서귀포시 동(洞) 지역과 제주시·서귀포시 읍면지역 간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제주시(산북지역)과 서귀포시(산남지역)의 지역격차는 주로 인구부문, 경제부문, 보건의료 부문, 사회복지 부문, 교육부문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생활부문, 문화부문, 행정기반 부문 등에서는 제주시(산북지역)과 서귀포시(산남지역) 간에 구성 요소들 간에 약간의 차이성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격차로 인식할 만큼 불균형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함
- 제주시 지역(특히 제주시 동 지역)으로 인구집중 현상은 경제적 유인요소(사업체 수, 취업기회, 경제활동 영역 등), 보건의료시설(의료진 및 병원시설), 교육여건(대학교 등) 등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에는 제주시 교외지역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이 서귀포시(동과 읍·면지역)와 제주시 읍·면지역 주민들의 제주시 동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고 있음
- 그래서 서귀포시(산남지역)의 지역 주민들은 취업기회의 미흡, 우수한 의료진을 갖춘 종합병원의 절대 부족, 대학교의 부재 등이 제주시 지역과의 격차의식을 크게 느끼는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 2013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가 60만명을 넘어서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구증가는 도내 자연증가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타 시도 인구(귀농·귀촌, 결혼이민자, 외국인 등)의 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봄. 특히 제주는 2012년에 전국에서 세종특별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증가율을 보였음

3) 제주도 이슈와 과제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연구(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2013)를 통해서 제주시(산북지역)과 서귀포시(산남지역), 제주시·서귀포시의 동(洞)지역과 제주시·서귀포시의 읍·면지역, 그리고 제주시의 구도심과 신도심 지역, 그리고 4개 권역(제주시, 서귀포시, 동부권, 서부권) 간에 나타나는 지역격차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이에 대한 평가를 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11월 4일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다가 2012년 6월 27일에 다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음

- 새로운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향후 제주지역 내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 간 상생을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한 핵심 이슈와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제주도내 지역격차 해소를 주민들이 실감하려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격차 해소의 우선순위(교육, 의료, 일자리, 기업유치 등)를 정하고 이를 위해 통합적 차원의 균형발전 계획수립과 예산 확보를 통한 체계적 집행이 필요함
 - 둘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간 범주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함.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주지역 중심(산남산북, 농어촌도시, 구도심·신도심, 동지역·읍면지역, 본도·도서지역)으로 지역격차를 인식하게 되겠지만 보다 객관적 접근이 요구됨
 - 셋째, 제주에서 지역격차 해소와 상생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의 달성 목표를 설정하여 단기·중장기 사업들을 지속성있게 추진하고, 동시에 추진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작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제주지역의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한 각종 계획(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1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임
 - 다섯째, 지역격차와 상생 발전을 가져 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 의한 상향식 접근과 행정의 하향식 접근이 서로 상화 보완되는 방향에서 지역격차 해소와 상생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여섯째, 제주지역의 지역격차 해소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확충 문제가 중요한 과제임. 국비와 지방비(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확보하여 지역격차를 실제로 줄여 나가 지역격차 해소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함
 - 일곱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도 명시되어 있지만 지역격차 해소와 상생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심체 역할(정책개발, 사업발굴 및 평가, 기본계획수립, 지역발전 컨설팅 등)을 하는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전담팀 구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제3장 지역별 이슈 종합

1. 지역별 이슈

1) 서울, 경기, 인천

(1) 3개 시도내 시군구 간 격차가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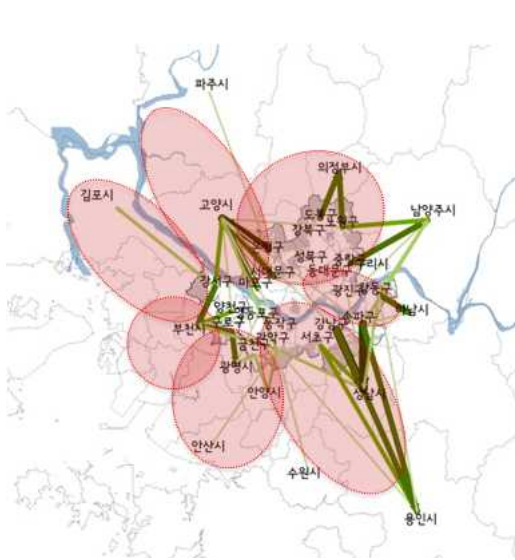
- 주민만족도를 지역 내 생활권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도 내 격차현상이 이미 양극화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동남권이 절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서남권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남. 특히 서남 3권(동작·관악)의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음
- 인천시의 경우에는 신시가지인 연수·남동구의 만족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구도심지역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 경기도의 경우에는 파주·고양 및 과천·안양 등의 지역이 높고 여주·이천과 의정부·포천·양주시 등의 지역이 낮게 나타났음

(2) 단일한 대도시 생활권으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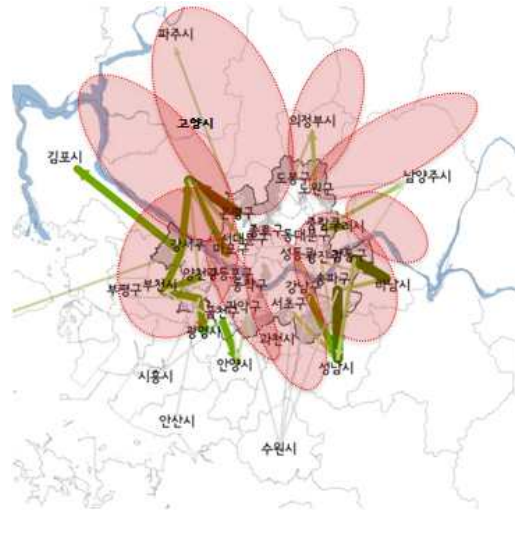
- 수도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의 거대도시권(Mega-City Region)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특히 서울과 인접한 시군은 하나의 단일 생활권으로서,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통합적 관리수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음.
- 실제로 최근 10여년간 통근과 주거이동경향을 보면 서울대도시권은 공간적으로 7~8개의 생활권으로 더욱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있음

(3) 교통, 시설, 환경 등 광역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갈등구조

- 인접한 시군구 지역에서는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의 불일치로 교육, 치안, 소방, 의료, 하천관리 등 생활의 밀접한 부분에서는 불편을 겪고 있음.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 및 매립지 등 광역차원의 이슈가 여전히 갈등의 원인으로 남아 있음



[그림 3-1] 서울 전출거구의 가구이동 네트워크: 2001-10



[그림 3-2] 유출통근자 통근 네트워크 상위 50(2010)

2) 부산

(1) 주력 산업 쇠퇴

- 조성된 지 30년 이상된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기반시설의 노후화, 기업 역외이전 등의 문제에 봉착

(2) 도시빈곤지역 확대 및 인구의 고령화

- 1960년대부터 시영주택건설을 시작으로 70~80년대에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소방도로, 상하수도 설비 등의 도시기반 인프라가 정비되지 못함
- 부산시는 7대 대도시 중 고령자 인구비율이 11.7%로 가장 높음(2010년 기준 부산 11.7%, 대구 10.3%, 서울 9.6%, 광주 9.1%, 대전 8.8%, 인천 8.8%, 울산 7.0%)

(3)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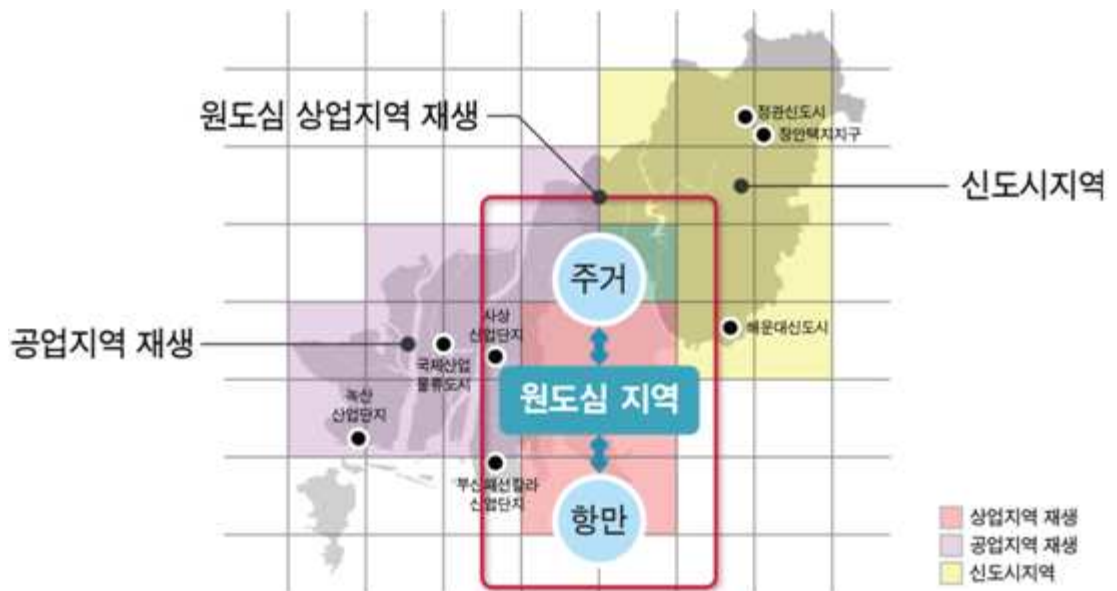
- 최근 들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통도심인 원도심재생과 공업지역재생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3-3] 부산시 제조업 종사자수 및 제조업 수 추이



[그림 3-4] 부산시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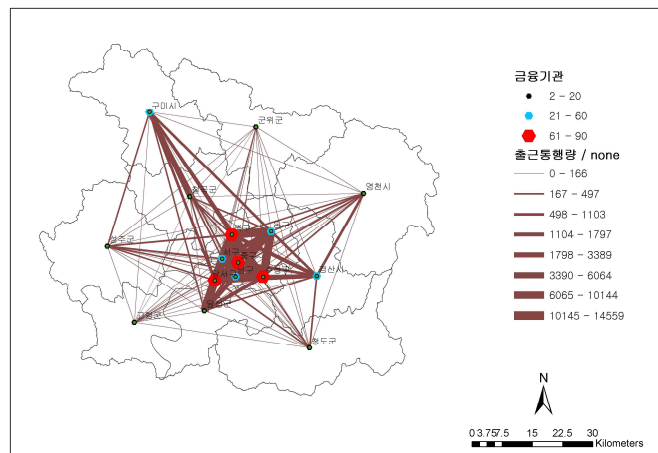


[그림 3-5] 부산 도시재생 3대축 설정

3) 대구, 경북

(1) 대구 대도시권의 형성

- <그림 3-6>은 2007년 대구권 도시간 연계구조를 일일간 출근통행으로 도식함
- 주요 통행축은 대구광역시내 구군간, 칠곡과 구미간, 경산과 대구도심간, 대구와 구미간 출근통행량임
- 따라서 대구권내에서는 중심성에 있어서 대구의 일극화가 현저함을 알 수 있음



[그림 3-6] 2007년 대구권 도시간 연계구조의 특징

(2) 인구의 안정화 및 노령화

- 대구광역시의 1985년의 인구는 2,029,853명으로, 그 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1997년에 인구 250만명의 도시가 되었음. 2003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대구시의 인구는 약 2,512,604명 정도임
- 경상북도의 인구는 1980년에 대구가 직할시로 분리되기 전에는 4,954,559명으로 약 200만 인구의 대구시가 분리되고, 이촌향도 현상에 의해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어 2008년에는 2,709,662명 정도임
- 대경권 지역의 중위연령에 의한 연령구조를 살펴보면, 2009년 대구는 37.5세이며 경북의 중위연령은 40.4로 전국보다 현저히 높고, 남녀 간 중위 연령의 차이도 비교적 큰 편임
- 이러한 차이는 경북의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노년층에서 남녀 인구집단의 차별 사망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1985년의 인구피라미드로 살펴본 대경권의 연령별 인구구조는 0~4세 연령대가 5~9세 및 10~14세 연령대에 비해 인구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임 2009년 인구피라미드에서는 노년층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4) 대전광역시

(1) 지역 내 격차 감소 경향이 뚜렷

- 기본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인구측면에서 대전은 확연히 격차가 감소. 동구의 연평균 인구증가율 증가와 서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산업 및 고용 경쟁력을 보여주는 총사업체종사자비율에 있어서의 뚜렷한 격차 감소
- 문화공간측면에서의 뚜렷한 격차 감소

(2) 자치구간 재정력 지수는 높은 격차 현상

- 균형발전사업추진 이후 인구, 산업경제, 문화공간, 도시인프라 등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나, 자치단체 재정력지수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격차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3-1] 대전광역시 통계지표

행정 구역	연평균 인구변화 ²¹⁾		노령화 지수 ²²⁾		소득세할 주민세 ²³⁾	총사업체 종사자비율 ²⁴⁾		도로 포장율 ²⁵⁾		문화 공간 ²⁶⁾	
	'00~ '05	'05~ '10	'05	'10	'10	'07	'10	'07	'10	'07	'10
대 전	9.4	8.8	34.6	51.1	165,407,335	28.9	32.4	100	100	70	98
동 구	-6.9	6.6	58.3	78.0	12,803,822	22.4	25.9	100	100	4	11
중 구	4.5	-4.0	50.1	76.3	21,128,565	28.7	31.1	100	100	30	26
서 구	8.2	-6.3	27.2	43.3	55,062,045	26.4	30.1	100	100	21	31
유성구	9.0	9.3	23.0	28.7	43,969,470	34.0	38.1	100	100	13	17
대덕구	-6.5	-7.1	29.5	50.0	32,443,433	36.3	39.9	100	100	2	13

자료

- 1) 통계청 >> 지역별통계 >> 인구·가구 >> 인구총조사 (<http://kosis.kr/>, 2012.09.26 검색)
- 2) 대전시 2011년도 통계연보

21) 연평균 인구 변화율 (외국인 제외) : $(\text{최종년도 값} - \text{최초년도 값})^{1/(N-1)}$

22)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수 / 14세 이하 인구 수

23) 소득세할 주민세

24) 총사업체종사자비율 : 총사업체종사자수 / 지역인구수

25) 도로포장률 : (포장도로연장 / 법정도로연장) × 100, 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시군도의 합임

26) 문화시설 : 공공공영장 + 민간공영장 + 영화상영관 + 미술관 + 화랑

(3)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역경제권과 주민체감형 생활권의 조화

- 글로벌한 상황변화 속에서 세계적인 경쟁단위로서의 광역경제권과, 지역 주민 혹은 시민이 인식하는 격차인식의 단위인 구도심과 신도심, 혹은 기초지자체 권역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단위로서의 광역경제권 육성과 함께,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정책적 노력 및 사업추진이 필요함

5) 강원도

(1) 3개 권역으로 구분되며 춘천·원주 지역으로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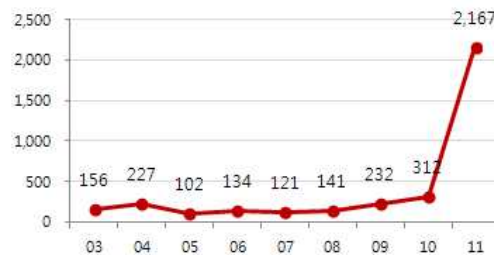
-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으로 나누어지며, 영동지역은 다시 북부,남부 지역으로 나뉘어 모두 3개 권역으로 구분
- 주로 영서북부지역의 춘천과 영서남부지역의 원주로 집중 심화

(2) 도내 시군의 경제력 격차가 최근 심화

-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와 타일지수(Theil Index)를 이용
- 지역내총생산 총액을 이용하여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측정된 경우
 - 측정된 격차지수의 크기는 차이가 있으나, 두 지수 모두 전반적으로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제약으로 2000~2010년 기간만을 대상으로 격차지수를 측정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정확한 추세를 포착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기는 하나, 지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강원도 내 시군 경제력 격차가 지난 10년간에 걸쳐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인당 지역내총생산을 이용하여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측정된 경우
 - 측정된 격차지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볼 수 있으나, 지역내총생산 총액자료를 이용하여 측정된 경우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2004년까지는 변이계수와 타일지수 모두 연도별로 약간씩의 등락세를 보이기는 하나 큰 변화가 없어 지역 간 격차가 그리 심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2005년부터 두 지수 모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이용자료 제약으로 정확한 추세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기는 하나, 1인당 지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강원도 내 시군 경제력 격차가 지난 2005년 이후부터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3) 귀농·귀촌 가구수 증대

- 2011년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읍·면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가구는 2010년 보다 158% 증가한 10,503가구(23,415명)이다. 이중 강원도(2,167가구)가 가장 많음
- 2011년 강원도에 이주한 귀농·귀촌 가구는 귀농이 618가구, 귀촌이 1,549가구이며, 인구는 3,464명으로 가구당 1.6명이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7] 강원도 귀농·귀촌 가구수 추이 (단위: 가구)

6) 충청북도

(1) 비청주권 지역의 인구 감소

- 1970년~2010년간 청주권 인구는 충북 증가 인구의 50.8%인 469,635명이 증가하여 지난 40년간 충북 인구 증가 주도
- 청주권을 제외한 타 권역은 지속적인 음(-)의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중부권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양(+)의 인구증가
- 1970년~2010년간 권역별 인구변화 추이를 보더라도 청주권은 지속적으로 높은 인구증가를 보이는 반면, 비청주권은 인구가 감소하여 청주권과의 격차 심화

[표 3-2] 1970~2010년 충청북도 권역별 인구증가 추이

연도	충북(A)	청주권(B)	B/A(%)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1970-1980	-57,282	78,224	-	-24,291	-52,744	-58,471
1980-1990	9,866	165,921	1,681	-67,625	-68,102	-20,136
1990-2000	67,352	115,412	171	-9,542	-36,010	-33,839
2000-2010	72,490	110,078	151	-7,987	-22,127	8,858
계	92,426	469,635	508	-94,646	-178,983	-103,580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3-8] 1970년~2010년간 권역별 인구변화 추이

(2) 청주시·청원군 통합에 따른 집중 심화

- 2014년 7월 출범 예정인 청주,청원 통합시는 충북인구의 절반이 넘고(84만명) 경제력도 절반 이상(GRDP 50%)을 차지함
- 청주,청원 통합시는 중추관리 기능과 산업이 집중하게 되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공공투자도 청주권에서 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이에 따라 고용기회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인재와 자본이 청주권으로 유출되고, 지방의 저발전은 지속되며 청주권의 발전과 집중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지속
- 청주권의 집중도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

(3) 지역 내 불균형 심화

- 충북도내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는 충북에서 청주권이 점하는 비중이 국토차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양상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청주,청원 통합 후 더 높은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

7) 충청남도

(1) 천안·아산·계룡시 주도의 인구의 증가 추세

- 2000년 이후 천안시와 아산시, 계룡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인구는 감소
 - 아산시의 경우 연평균 4.42% 증가하여 2010년에는 2000년 대비 1.3배 이상 성장
- 충남 서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 지역의 인구는 1,118천명으로 5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957천명으로 46.1%의 비중을 차지

[표 3-3] 충남 시군별 총인구수

구분	인구(명)				증가율 (00-10, %)
	2000년	2005년	2010년		
충남 계	1,765,290	1,808,677	1,946,555	100.0%	1.0
천안	417,835	521,887	574,623	29.5%	3.2
공주	130,376	127,076	122,153	6.3%	-0.6
보령	109,535	97,176	97,770	5.0%	-1.1
아산	180,763	208,415	278,676	14.3%	4.4
서산	143,154	144,091	156,843	8.1%	0.9
논산	137,452	125,332	119,222	6.1%	-1.4
계룡	27,122	31,699	41,528	2.1%	4.4
당진	117,652	113,267	137,006	7.0%	1.5
금산	57,929	53,570	52,952	2.7%	-0.9
부여	83,687	73,464	67,584	3.5%	-2.1
서천	66,929	57,875	53,914	2.8%	-2.1
청양	38,601	31,316	29,755	1.5%	-2.6
홍성	90,658	82,793	82,811	4.3%	-0.9
예산	97,669	81,977	77,830	4.0%	-2.2
태안	65,928	58,739	53,888	2.8%	-2.0

자료 : 인구총조사(통계청, 2000~2010), 충남에서 연기군 제외

(2) 수도권과 충청권에서의 인구유입으로 초광역권화

- 2005~2009년간 충남지역과 여타 지역간의 인구이동을 보면, 충남은 전입 144,393명, 전출 135,836명으로 총 8,557명의 인구유입을 보여 2000~2005년 7년간의 인구 유출지역에서 인구 유입지역으로 전환
- 2000~2005년간 충남지역에서 유출되는 인구의 지역분포를 보면, 총유출인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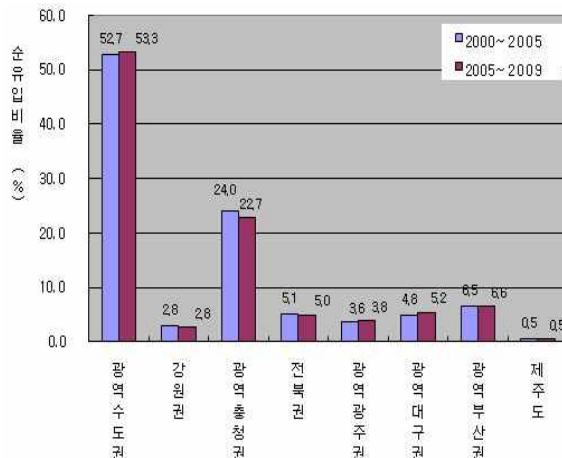
26%가 광역충청권 내에서 이동하였으며, 광역수도권으로의 유출비중은 2000~2005년간 55.5%에서 2005~2009년에는 55.3%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3-4] 권역별 인구이동패턴(지역별 추이) (단위: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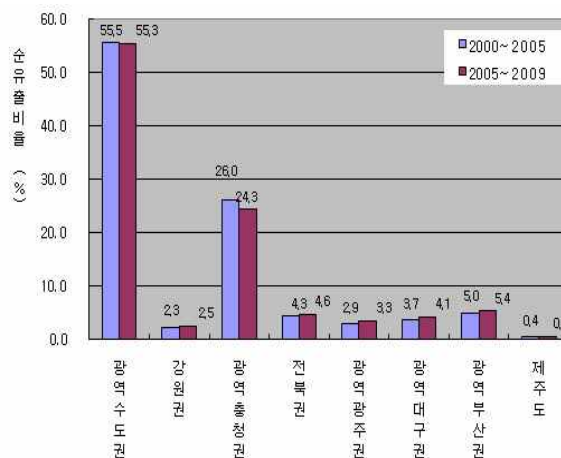
구분	2000~2005년			2005~2009년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충남 계	133,062	135,186	-2,124	144,393	135,836	8,557
광역수도권	70,083	75,023	-4,940	77,025	75,102	1,923
강원권	3,749	3,092	657	3,987	3,397	590
광역충청권	31,925	35,100	-3,175	32,846	33,050	-204
전북권	6,766	5,807	959	7,176	6,214	962
광역광주권	4,853	3,953	900	5,513	4,497	1,017
광역대구권	6,344	4,938	1,406	7,580	5,614	1,966
광역부산권	8,695	6,706	1,989	9,535	7,339	2,196
제주도	649	568	81	733	624	109

주: 광역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강원도), 광역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중 충남은 제외), 전북권(전북), 광역광주권(광주, 전남), 광역대구권(대구, 경북), 광역부산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도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해당년도.



[그림 3-9] 충남지역 인구이동(유입)비중



[그림 3-10] 충남지역 인구이동(유출)비중

(3) 지역 내 불균형 심화

- 군지역과 시지역의 지역적 격차가 발생
- 이는 농촌의 특성이 큰 군 지역과 도시의 특성이 큰 시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음
- 충남 서북부권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경제, 인구, 산업 등의 편중에 따른 충남도 내 타 지역과의 격차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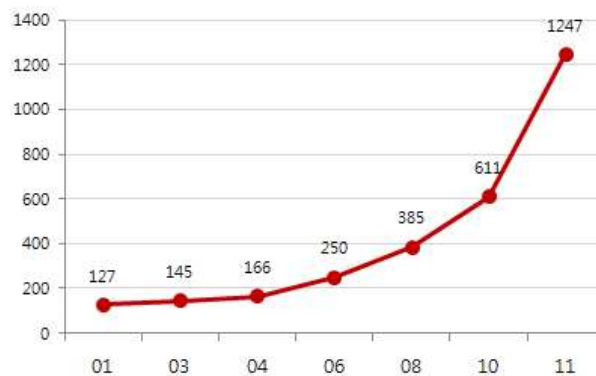
8) 전라북도

(1) 4개시군에 집중 심화

- 전라북도는 시군별 지표 등을 비교해 볼 때,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 군산, 완주 등 서북권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높음

(2) 귀농·귀촌 효과와 4개 국립공원의 잠재력

- 전라북도 내에는 변산반도, 내장산, 지리산, 덕유산 등 총 4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특히 국립공원을 보유한 시군에서는 국립공원 관리 등의 이유로 기존 관광시설 노후화 및 신규투자 제약 등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발전에 기여할 잠재력도 지니고 있음.
- 최근 귀농귀촌 활성화로 일부 군지역에서의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초기단계이후 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필요



[그림 3-11] 전라북도 귀농귀촌 가구수 추이
(자료: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2012)

(3) 전주·완주 통합 실패에 따른 갈등

-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 실패에 따른 지역간 갈등이 대두되고 있음
-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지역에서는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주시와 익산시 그리고 군산시 등에 집중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하고 있음

9) 경상남도

(1) 동서간 격차 심화

- 동서간 격차는 시군간 지표의 격차 및 증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인구와 개별용지 부분에서는 지역간 특징이 발견됨
- 인구분포의 경우 시군간 격차보다 동서간 격차가 비교적 적었으며, 이는 동부권에 경남도의 주요 시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서부권에도 2개 시지역(진주시, 사천시)이 포함되어 있어 격차가 시군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개별용지 공급현황에서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비율이 9:1 정도로 나타남에 따라 시군지역의 격차보다 더욱 심화된 양상을 보이며, 이는 군 지역 중 비교적 높은 면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함안군(12.8%)이 동부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 마산·창원·진해 통합에 따른 지역갈등 첨예

-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3개 시가 통합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명칭, 시청 소재지 등에 의한 갈등이 심화되어 급기야 통합을 무산시키기 위해 마산시 분리법안이 발의되는 등 갈등이 심화
- 통합 당시부터 쟁점이었던 시청 소재지를 결정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 차원에서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으나, 현재에도 청사 소재지를 놓고 소재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진행 중임
- 2013년 10월 30일 실시한 경남도에 관한 국정감사에서도 통합창원시의 갈등이 주된 이슈가 되었으며, 경남도 내 지역간 갈등해소를 위해서라도 통합창원시에 대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필요

(3)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갈등

- 경남도에서는 정책적으로 경남도 서부청사 건립과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부이거의 발전을 견인하여 경남 내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경남도에서는 현재의 도 산하 공공기관이 노후화와 공간협소 등의 문제로 증축에는 한계가 있으며,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과 접근성 등을 모색하여 이전을 계획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서부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이점이 있어 서부청사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나, 현재 공공기관 소재지인 창원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이며 행정상 불편함이 존재하고 도심지가 공동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10) 제주도

(1) 귀농·귀촌 효과에 따른 인구증가 추세

- 2013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인구가 60만명을 넘어서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구증가는 도내 자연증가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타 시도 인구(귀농·귀촌, 결혼이민자, 외국인 등)의 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됨

(2) 제주시 집중에 따른 불균형 심화

- 제주지역의 지역격차 문제는 제주시(산북지역)과 서귀포시(산남지역) 그리고 제주시·서귀포시 동(洞) 지역과 제주시·서귀포시 읍면지역 간에 발생
-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격차는 주로 인구·경제·의료보건·사회복지·교육 분야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
- 다른 한편으로 생활·문화·행정 분야 등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 구성요소들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격차로 인식할 만큼 불균형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 됨
- 제주시 지역(특히 제주시 洞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경제적 유인요소(사업체 수, 취업기회, 경제활동 영역 등), 의료보건시설(의료진 및 병원시설), 교육여건(대학교 등)에 의해 확산되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에는 제주시 교외지역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이 서귀포시와 제주시 지역 주민들의 제주시 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
- 따라서 서귀포시의 지역 주민들은 취업기회의 미흡, 우수한 의료진을 갖춘 종합병원의 절대 부족, 대학교의 부재 등이 제주시 지역과의 격차인식을 크게 느끼는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

제4장 격차해소를 위한 상생방향

1. 지역격차와 상생발전²⁷⁾

1) 지역격차

○ 과거에는 지역격차를 협의적으로 해석하여 경제적 요인에 초점

- 일반적으로 지역격차는 경제성장률과 경제수준의 공간적 편차현상을 의미함. 또한 지역격차를 지역 간 소득격차의 의미로 받아들여 1인당 주민소득의 차이를 비롯한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성장과 소득격차를 설명하고 있음²⁸⁾

○ 최근에는 삶의 질 측면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인식

- 경제적 측면에 한정시킨 지역격차 개념에 대해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어왔음. 이에 복지, 생활의 질 또는 인간의 기본수요 등의 측면에서 광의적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이 1990년대 중반에 나타났음²⁹⁾
- 지역격차의 개념을 소득격차라는 개념에서 확대하여 삶의 질의 격차로 해석한다면, 지역격차는 둘 이상의 지역간에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차이, 즉 지역불균형을 의미함³⁰⁾
- 지역격차는 외형적·물질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 행복과 같은 의식적 측면과 건강상태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인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함³¹⁾

○ 주민이 체감하는 격차인식까지 포함한 개념

- 종합해보면, 지역격차와 지역불균형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지역격차를 협의적으로 해석하여 경제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을 유지하고 존속시키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 즉 경제를 비롯한 사회, 문화, 환경, 복지 등 삶의 질 개념을 총 망라하여 두 지역 간에 발생하는 차이임³²⁾

27)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2013), '수도권 지역내 격차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연구', p.11~13

28) 이규환·서승제, 2009, 「서울시 자치구간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 공공관리화보 제 23권

29) 황명찬, 2001, 「지역개발론」, 법무사

30) 장재호, 2012, 「대구시 구·군간 지역격차 분석과 낙후지역 발전방안」, 대구경북연구원

31) 강인재, 1996,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경북과 전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8권 제2호

32) 장재호, 2012 와 이도선 외 2인, 2008, 「지역격차에 관한 실증적 분석모델 개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 10권 제3호 통권 24호 내용을 재구성함

2) 균형발전과 상생발전

- ‘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동일한 기준에 의해 모든 지역을 비교, 평가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만드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즉, 지역 간 불균형을 일정수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수직적으로 배분되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임.
- ‘상생발전’은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자원을 연계·교류하는 발전방식을 강조함.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특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지역 간 수평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의 지역발전전략이 상생발전의 핵심임.
-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조직들이 개별적 목표의 공동적 성취를 위해 긴밀하게 관계하는 상생협력³³⁾이 중요함.
 - 각각의 조직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교환과 협상 등 상호의존관계를 통하여 자원, 권한, 역할을 교환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
 - 일방의 편파적이고 독점적인 이익관계가 아닌 협력당사자 간의 대등한 상호관계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제에서 출발
 - 국가 간,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 간, 사회단체 간, 기업 간, 지역주민 간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회를 구성하는 둘 이상의 상호간에 광범위하게 발생
- 지역 간의 상생협력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설치, 경제 및 개발, 교류 및 행사,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의 분야에서 광역사무의 처리나 행·재정능력의 보완 등을 위한 개별목표의 공동적 성취를 위해 긴밀한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생적인 사업관계를 통해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함.
 - 상생협력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의 범주를 벗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의존·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여 목표달성에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상호이익을 증진
 - 각각의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목표지향적인 상호보완작용을 통해 공동생산적인 참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향유

33) 김필두, 류영아, 「지방자치단체간 상생을 위한 협력활성화 방안연구」 편집 및 인용, 2008

2. 상생발전을 위한 조건

(1) 시군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전국 16개 시도간 뿐 아니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간의 상생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자치단체의 행정범위를 뛰어넘는 광역행정기구의 개선이 필요함. 실질적인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자체간 갈등 뿐 아니라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최적의 광역차원의 행정기반의 마련이 필요함
- 그동안 광역적인 도시관리와 행정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광역행정기구들이 만들어 졌으나 대부분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 그 이유는 무엇보다 자율적 계획 및 관리기능의 부재, 자체재원의 부족, 그리고 종속적 인사제도로 인한 독립성 부족 등에 기인함
- 시군구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가칭) 시군구간 협력법, 자발적 협의회 등 광역행정기구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둘째, 상생발전 특별회계 및 상생발전기금 등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
 - 셋째, 분권화와 상생발전의 병행추진

(2)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연구기반 마련

- 상생과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이슈에 대한 기초자료와 효과 및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해당 지자체 당사자 뿐 아니라 주민의 이해관계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결과를 제시할 기관이 필요함
- 일차적으로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시도연구원을 활용하도록 함. 시도연구원은 교통, 복지, 도시계획, 환경, 경제 등 분야별 전문기능과 광역적 행정에 필요한 자료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기초적인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이와 함께 대학,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연계하여 협력의 기초를 제공할 수있도록 함.
- 상생을 위한 전문기구는 시도간 협력사업발굴, 지역불균형지표의 발굴 및 모니터링, 갈등사례 해결, 관련분야의 기초데이터 축적, 모범사례의 발굴,주민의견 청취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3. 상생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1)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 최근 들어 공공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공공서비스분야가 한계에 이르고 있으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오히려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부족한 지역에 적절한 시기에 선택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도 높이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주도 하에 하향식(Top-down) 지역정책은 해당지역 주민이 실제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지역별 여건이 서로 달라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지역의 특화자원 분포를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함.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분배 차원의 지역발전보다는 지역의 특화자원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는 상향식의 지역발전이 이루어져야 함. 지역특화자원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을 추진할 시에는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함. 지역의 내생적 발전에 근거한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자발적 요구에 따른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지역 간 상생발전을 추구할 수 있음
- 지역민의 수요에 맞춘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사회 공헌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점차 일반화되어감에 따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운영에 의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문조사 및 관련통계지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추진해야 함.

(2) 거버넌스 구성으로 상생기반마련: 시군구간 협의체

- 분권화와 시민의식이 성숙한 현대사회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성과 자발적 참여의 유도가 매우 중요함. 따라서 과거 중앙정부의 일방적 계획체제를 기초자치단체와 시민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을 구축하도록 함.
- 이를 위한 다양한 기구나 기관의 운영에는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을 적극 도입·적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제체감 가능한 지역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생활권발전위원회를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게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3) 대도시권 광역거버넌스를 구축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등 특·광역시와 경우 중소도시에 비하여 생활권이 광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광역차원의 거버넌스의 구성이 필요함.
- 수도권과 경우 오래전부터 거대한 단일생활권으로서 이에 대한 계획적인 성장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되어왔으나, 그동안 3개 시도별 계획이 수립되거나,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됨. 또한 실제로 지역주민에게는 일상의 생활권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미한 실정임
- 주민생활권에 밀접한 출·퇴근 통행패턴, 자치단체의 자족기능과 주거이동,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대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담당하는 관리기구 도입을 제안함.

(4) 지역 간 정보·지식·경험의 교류 및 시범사업의 추진

- 시도간 장기적인 신뢰구축 및 협력증진을 위해 시도간 및 시도별 통합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 이를 위해 지역 단위의 교통, 환경, 주택, 도시개발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통합자료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조사 및 연구분석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
- 시도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정기적으로 정책연구의 결과 및 이슈에 관한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서로 인접한 지역에서의 상호연계가 가능한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사업 효과면에서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또한 지역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추진 주체들이 사업간에도 상호 교차하여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내용과 특성을 모든 참여주체들이 파악하도록 하여 중복성을 배제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

부록

1~5차 회의록 및 향후 일정

1. 회 의 록

■ 1차> 2013.06.20

2013년 제1회 지역상생 연구포럼 회의자료

회의개요

1. 공동연구사업 연구계획(안)
2. 연구주제 및 내용의 적정성 토의
3. 설문조사 방법 : 비용조달, 추진방법
4. 공동연구 추진방법: 연구방법, 역할분담 등
5. 향후 추진일정

※ 첨부자료: 2013년도 연구계획서(안), 참여연구진

공동연구사업 계획서(안)

■ 과제명(안): 주민체감형 지역격차 인식과 지역상생 발전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전국 16개 시도연구원은 지난 2012년 “지역간 격차실태와 상생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지역격차에 대한 지표 분석과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지역격차 실태를 도출하였고, 지역상생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공동연구결과에 대한 정기총회 평가와 공동연구진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1. 격차인식 및 지역상생에 관한 공동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
 2. 향후 세부적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고 구체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
 3. 차기 연구에서는 주민체감형 지역격차 실태파악을 위해 주민인식조사 보완
- 작년 연구결과 및 총회의견을 반영하여 “격차인식과 지역상생”을 위한 공동연구의
2차년도 이슈는 “주민체감형 지역격차인식을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함.
- 연구의 목적은 첫째, 실제로 지역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격차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주요 연구내용

○ 지역격차의 개념설정과 지표체계 선정

- 지역격차의 개념 및 지역격차의 공간적 범위 설정
- 지역격차 분석을 위한 지표선정

○ 주민체감형 지역격차에 관한 실태분석

- 지표를 통한 지역격차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체감조사

○ 지역격차 분석 종합과 시사점 도출

- 지표와 설문조사를 통한 격차실태 분석
- 종합 및 시사점

○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상생발전방안 제시

- 격차완화를 위한 정책방향(시,도,시군구 등 행정단위별 정책방향)
- 정책실현을 위한 전략 및 추진방안 제시

3. 연구기간 : 2012. 7. 1 ~ 12. 31 (6개월)

4. 연구방법

- 연구의 내용 및 방식은 공동연구진이 상호합의하고 조정하여 확정하도록 함. 본 연구계획서(안)은 연구진의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임.
- 연구진은 시도연구원별로 적절한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 공동연구방식으로 추진함.
(본 과제는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총회에서 의결된 연구과제로서 각 시도연구원에서는 내부 연구과제로 인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 본 연구의 핵심은 주민체감형 지역격차에 관한 “주민설문조사”로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원별로 행정지원 또는 별도의 연구진행이 필요함.
 - 시도별로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각 시도연구원별로 주민설문에 관한 조사비용의 별도책정 필요
- 각 시도연구원별로 담당연구를 진행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공동연구진이 주체가 되어 “지역상생 연구포럼”을 추진하여 다양한 지역별 견해를 조율하도록 함.

5. 공동연구 추진계획안

연구기획 및 역할분담 : 7월

- 공동연구진 및 간사기관 확정
- 연구 세부계획 수립 및 분야별 담당자 선정
- 주민설문조사 방법 및 예산조달에 관한 논의

사전연구 및 주민조사 기획 : 8월

- 지표선정 및 분석
- 설문조사 기획(설문지, 설문방식, 대상 등)

연구결과 및 설문결과 종합 : 9월~10월

- 설문조사 실시 및 종합
- 설문조사 및 지표분석 종합 분석

상생발전방안 및 결론 제시 : 11월~12월

별첨: 참여연구진

기관명	공동연구과제(주민체감형 지역격차 인식과 지역상생 발전방안) 참여자				
	직급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E-Mail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현호	02-3488-7344		hhkim@krila.re.kr
	수석연구원	오은주	02-3488-7338		ejoh@krila.re.kr
서울	연구위원	김인희	02-2149-1044		ihkim@sdi.re.kr
부산	연구위원	한승욱	051-860-8686		suhan@bdi.re.kr
대구경북	도시계획 및 디자인팀장	최영은	053-770-5096		bobo2020@dgi.re.kr
인천	연구위원	조상운	032-260-2645		chosw@idi.re.kr
대전	연구위원	강영주	042-530-3567		yjkang0703@jdi.re.kr
울산	선임연구위원	권창기	052-283-7752		kwon@udi.re.kr
경기	선임연구위원	지우석	031-250-3254		jio@gri.re.kr
강원	부연구위원	황규선	033-250-1347		hks@rig.re.kr
충북	기획조정실장	원광희	043-220-1101		khweon@cri.re.kr
	연구원	박상원	043-220-1192		psw4@cri.re.kr
충남	책임연구원	임준홍	041-840-1121		jhim@cdi.re.kr
	책임연구원	임형빈	041-840-1164		hbyim@cdi.re.kr
전북	부연구위원	김재구	063-280-7135		ppikoo@gmail.com
전남	선임연구위원	조상필	061-280-3931		spcho@jeri.re.kr
	책임연구원	나강열	061-280-3934		kangyeol@jeri.re.kr
경남	부연구위원	마상열	055-239-0109		srma@gndi.re.kr
제주	연구위원	고승한	064-726-6145		soc628@jdi.re.kr

※ 광주발전연구원은 불참

지역상생포럼 2차회의 결과

2013.7.18. 서울연구원

1. 일시 및 장소 : 2013.7.18 14:00 ~ 16:00, 경남발전연구원 회의실
2. 참석 : 김정권 원장(경남연), 문태현(경상대), 신상화(국제대학교), 최상한(경상대), 김봉태(경남도 사무관), 김인희(서울), 한승욱(부산), 마상렬(경남) 외 10인

3. 주요 회의내용

- 경남도 지역격차 인식과 해소를 위한 과제발굴
- 전국 시도간 격차해소를 위한 2차년도 공동연구방안 논의

4 회의결과

■ 지역격차 해소방향

- 중앙과 지방정부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
- 격차인식지표의 개발보다 질적인 분석이 필요
- 지역간 격차와 지역내 격차분석은 별도의 접근방법이 필요함
- 경남지역은 울산시가 광역시로 분리된 이후 낙후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서부권의 낙후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

■ 공동연구방향

- 2차년도의 공동연구는 지역별 설문을 통한 주민인식조사와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에 있음. 이를 위해서는 연구원별로 별도의 과제수행이 필요함
- 별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시도연구원협의회의 공문협조가 필요하며, 간사기관인 서울연구원에서 다시 한번 충북발전연구원에 요구할 필요가 있음.

5 향후 일정

- 8월 중순경에 향후 연구추진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지역상생포럼 3차회의 결과

2013 8.21. 서울연구원

1. 일시 및 장소 : 2013.8.20(화) 14:00 ~ 16:00, 서울역 KTX 회의실
2. 참석: 고승한, 권창기, 김인희, 김재구, 마상렬, 오은주, 임형빈, 조상운, 지우석, 최영은, 한승욱

3. 논의결과

1. 격차에 대한 지역이슈와 공동아젠다를 도출하기 위한 포럼을 운영
2. 주제는 유사 연구결과를 지역내 연구진을 중심으로 발제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전문가의 참여도 가능하다. 토론자는 연구진과 지역전문가로 구성한다.
3. 주제설정 및 토론자섭외 등을 포함한 기획은 해당 연구원에서 추진하며 연구경비는 서울연에서 일괄처리한다.
4. 포럼주제는 “대도시 격차를 위한 도시재생”, “제주도 균형발전계획”, “울산 격차실태”, “대구-광주-대전 등 대도시 비교”등을 우선 추진한다.
5.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의 아젠다발굴은 협의 후 일정 및 주제를 설정한다.

4. 향후 일정

■ 1차포럼 : 지역격차 해소차원의 도시재생 - 부산과 서울사례

- 일시 및 장소 : 9월 13일 14:00~17:00, 부산발전연구원
- 주제발제 : 한승욱(부산사례), 김인희(서울사례)

■ 2~5차 포럼 기획

- 2차포럼 : 제주도 사례(10월 중순), 고승한 박사

- 3차포럼 : 울산사례(10월 말), 권창기 박사
 - 4차포럼 : 수도권사례(11월초), 지우석 박사
 - 5차포럼 : 대구-대전-광주사례(11월 중순), 최영은 박사
 - 6차포럼 :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등 협의후 결정
- ※ 일정과 주제는 제안한 주제를 가지고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조정가능

5. 주요 회의내용

■ 김인희

- 연구주제인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체감형 격차해소방안”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연구비내에서 연구를 추진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별도과제 수행에 관한 공문을 보내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 현 상황에서의 대안은 격차문제와 상생발전에 관한 다양한 지역의 이슈를 도출하고 공동의 아젠다를 선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지난 7월18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포럼이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다. 경남의 구조적인 격차 뿐 아니라 마-창진 간의 갈등도 시사점을 주는 사례이다. 설문조사 대안으로 지역문제를 연구진과 포럼형식으로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 광역권단위로 이슈를 도출하고 결과를 내년 연구의 근거로 활용하는 대안에 대한 연구진의 의견을 부탁드린다.

■ 권창기

- 지역격차는 공간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5+2 광역경제권단위보다는 대도시-주변도시, 도시-농촌, 원도심-신도시 등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포럼발제를 지역전문가에게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연구원별로 관련주제를 토론하고 결과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 고승한

- 지역발전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격차해소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포럼에서 해주면 좋겠다.

- 아직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연구에 연구원입장에서 별다른 지원이 없다. 향후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과 별도의 과제수행의 있는 근거가 시도연구원협의회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주민설문은 공통문항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항으로 구분하고 생활만족도, 거주지만족도, 균형발전분야 등 다양한 이슈로 구성하면 좋겠다.

■ 최영은

- 지역격차에 관한 이슈를 발굴하고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역전문가의 참여가 적절하다고 본다.
- 참고로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간의 도시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원별 연구과제를 토론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본다.

■ 고승한

- 균형발전을 위한 이슈발굴과 공론의 장을 위한 포럼은 좋은 대안인 것 같다.
- 제주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연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 연구결과는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 김재구

- 호남권의 경우 국토연구원이 주체하는 미래비전과 관련하여 지역전문가와 토론회를 가진 경험이 있다. 전북전남광주 등 지역간 지역내 갈등이 워낙 심해서 논의를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워낙 지역이해관계가 민감하기에 오히려 지역전문가보다는 연구원에서 주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 권창기

- 작년 연구는 격차에 대한 새로운 인식, 특히, 줄세우기식이 아닌 기회의 형평성, 사회적 관계 등 새로운 아젠다를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론에 머물러 있다. 지역의 독특한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 격차란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소통하지 않은채 비교를 통하여 느끼게 되는 것이다. 지역의 개방적문화, 기회의 부여, 휴먼네트워크 등이 격차해소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격차를 측정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 고승한

- 제주도의 경우 지역격차에 대한 객관적 지표는 비슷한데 주민의 주관적 격차인식은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지역에 투자는 하지만 실제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 오은주

- 과제명이 작년과 유사하다. 차별성이 있으면 좋겠다. 현 정부정책의 키워드를 반영하여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내용은 지역행복생활권에서 제시한 공간유형별로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결과를 정부에 제안하는 것을 건의한다.

■ 마상렬

- 설문조사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할 일을 정하자. 우선 포럼에 대한 목적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 임형빈

- 우리연구원에서는 신균형발전론과 관련한 자체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올해 연구주제와 연계하여 검토해 보겠다.

■ 한승욱

- 우선 작년연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올해 연구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겠다.
- 우선 작년연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올해 연구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겠다.

■ 지우석

- 올해 설문조사는 불가능하고 대안으로 포럼을 추진하는 것이고 오늘논의는 주제, 운영방식, 결과물에 대한 정리 등을 결정하면 될 것 같다.
- 지역내 격차문제에 대한 공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연구가 의미가 있으려면 지역간 격차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 조상운

- 지역발전위 등 정부 지역정책관련자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추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

■ 김인희

- 오늘 논의를 요약하겠다.
- 격차에 대한 지역이슈와 공동아젠다를 도출하기 위한 포럼을 운영한다.
- 주제는 유사 연구결과를 연구진을 중심으로 발제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 전문가의 참여도 가능하다. 토론자는 연구진과 지역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한다.
- 주제와 토론내용을 포함한 연구결과는 연말에 성과물로 제시한다.
- 1회 포럼은 “지역격차해소차원의 도시재생 -부산과 서울사례”라는 주제로 부산에서 추진한다.
- 차기주제는 “제주도 격차문제와 균형발전계획”, “울산지역 공간유형별 격차실태”, “대구-광주-대전” 등 대도시 비교를 검토하도록 한다.

지역상생포럼 4차회의 결과

2013.9.13. 서울연구원

1. 일시 및 장소 : 2013.9.13(금) 14:00 ~ 17:00, 부산발전연구원
2. 참석(내부): 고승한, 김인희, 마상렬, 원광희, 임형빈, 조상운, 최요섭, 한승욱
참석(외부): 한경원(지역경제위원회), 김동균(부산시)
3. 논의결과
 1. 11월말 지역박람회와 12월초 총회에서 발표할 주제의 차별화 검토
 2. 도시와 도 격차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진
 - 대도시사례 : 부산, 서울, 인천, 울산, 대구-광주-대전 등
 - 도 사례 : 충북, 강원도, 제주도, 충남-세종시, 경기도 등
 3. 다음 포럼(5차)은 제주도에서 10월 17일 개최
 - 구체적인 일정은 10월초 공지(단, 비행기표는 개별적으로 구입)
 4. 시도간 격차에 관한 공동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시도별 연구원에서 별도의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체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지금처럼 시도협에서 지원
4. 향후 일정
 - 5차포럼 : 지역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 제주도 사례
 - 일시 및 장소 : 10월 17일 ~ 18일(1박2일), 제주발전연구원
 - 주제발제 : 고승한박사

5. 주요 회의내용

■ 김동균(부산시 사무관)

- 부산형 도시재생사업의 유형별 사례를 제시. 특히, 2013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중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마을 창조벨트 구축사업”에 대한 소개.

■ 한경원(지역위 정책연구원)

- 정부는 지역발전지표를 Fact에 근거하여 정책을 집행하려 한다. 특히, 정량적 지표 뿐 아니라 정성적 지표를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 시도별로 관련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제시할 경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
- 생활권설정 및 발전계획수립 등 앞으로 시도가 수립하고 정부와 조정할 여지는 열어놓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예산지원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 시도별 연구원이 생활권설정기준, 광역계획을 대치하는 시도발전계획 등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원광희

- 아직 지역위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 시도별로 대응방안의 마련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을 담당할 별도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 계획중인 시도발전계획과 기존의 도종합계획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실효성이 있는가?
- 충북의 경우 5년전 12개의 지표를 가지고 낙후지역재생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원하였다. 일명“세포확충형 모자이크사업”의 일환으로 발전도를 보이는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 정부는 이렇게 시도가 자발적으로 재생을 추진하는 노력을 평가하여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마상렬

- 시도별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별 연구원에서 별도의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원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 **고승한**

- 지역상생포럼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기초실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 포럼에서 지표개발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일반적인 지표와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지표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연구를 추진하자.

■ **조상운**

- 수도권 3개 시도를 분석해 보니 서울인천과 경기도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즉, 두 개의 공간을 동일한 기준으로 진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 인천의 균형발전경험은 2005년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수 많은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이다. 성과위주로 추진하다 보니 대형개발사업으로 이어졌다.

■ **임형빈**

- 우리 연구원에서는 신균형발전론의 기초하에 별도의 연구를 제안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 사회지표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 특히, 세종시로 인한 충청도의 주택시장 변화에 관한 분석은 이번 포럼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 **원광희**

- 광역시와 도의 구조적인 차이를 반영하여 접근하자.

지역상생포럼 5차회의 결과

2013.10.17. 서울연구원

1. 일시 및 장소 : 2013.10.17 ~ 18, 제주발전연구원
2. 참석(내부): 고승한, 김인희, 마상렬, 조상운, 권창기
참석(외부): 김인성(제주시의회), 공영민(제주발전연구원 원장) 외 2인
3. 주요 발표내용
 1. 제주지역의 불균형 심화현상
 - 제주시로의 인구 집중현상 + 읍·면 보다 동지역으로의 인구집중
 - 서업체 수 등 경제적 요인도 제주시로 집중
 -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하여 고령인구비율은 높고 유소년비율은 낮음
 2. 제주지역 불균형 원인
 -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2년임기도 못채움) => 중장기사업 추진은 불가능
 - 행정시의 예산권한이 미흡하고 행정대응성도 약화
(행정시의 예산신장률은 감소한 반면 도 본청은 상승)
 - 균형발전관련 정책의 폐지((2009년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폐지)
 - 단편적인 행정처방(개별 단위사업의 평면적 나열)
 3. 균형발전을 위한 제주시 정책
 - 제주 균형발전을 위한 T/F 팀 구성(제주시+서귀포시, 제주연, 의회)

-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정
-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한 읍면동지역 평가지표 발굴
- 균형발전 기본계획 2단계 추진

4. 주요 논의내용

■ 권창기

- 같은 생활권이라도 지역내 차별은 존재한다. 서울의 강남서초가 있는 동남권내에서도 격차가 존재하고, 같은 성남권역에서도 격차가 심하다. 따라서 균형발전정책의 단위는 광역시도 등 큰 틀에서 관리하고, 지역내 격차는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생활권계획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제주발전연구원

- 최근들어 제주시로의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이 제주시에 집중되고 있는데 사업 완료시점에서의 인구이동은 눈에 띄게 증가한다.
- 제주시로의 집중은 시가화구역의 효율적활용과 자연녹지의 보존차원에서 적절할 수도 있다고 본다.

■ 김인성

- 최근 제주시의 인구증가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육지에서 귀농현상으로 인한 인구이동이 심하다. 농촌지역에서의 빈집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이다.
- 지속적인 귀농귀촌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우너시스템과 주민 참여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 마상렬

- 인구증가에 따른 부동산가치가 너무 올라가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중국 등 외국자본의 유입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 같다.

■ 권창기

- 균형발전이든 지역활성화든 중요한 것은 좋은 인력이 유입되는 것이다. Daum본사가 제주도로 들어온 것은 큰 시사점이 있다.

■ 조상운

-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와 자치구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또한 부서간 칸막이 행정등의 제약조건으로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 시민공감대가 중요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 김인회

- 제주시의 시장 임기가 2년인가?

■ 김인성

- 제주시특별법상 행정시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 행정시장은 예산편성권 등 권한이 제약되어 있으며 대부분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 조상운

- 제주시특별법상 행정시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 행정시장은 예산편성권 등 권한이 제약되어 있으며 대부분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 제주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균형발전지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표에 너무 집착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가 우려된다. 따라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 권창기

- 계량화된 지표는 연구 및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